

2012 |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2012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발간사



통일은 시대정신이자, 선진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정부는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이루어나가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번영된 통일 한반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문명의 판이 흔들리며 질서가 바뀌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도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핵무기 개발, 무력 도발 위협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주변국들은 정치 지도부의 교체를 앞두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확고한 원칙의 토대 위에서 유연한 대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상호존중과 내부 불간섭,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기본 원칙 위에서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유연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남북 간 상생공영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해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 간 안정적인 대화채널 구축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문화예술·종교 부문 등의 인적 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에도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정치적·비군사적·인도적 부문에서부터 남북관계를 개선해 가면서 남북 간 상호신뢰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구려 고분군 솔잎 병충해 방제 지원 제안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간 진정성 있는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외교의 기치 아래 남북통일에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 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이 상대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한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소극적인 분단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통일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에 필요한 여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고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가족, 국군포로 가족 등은 분단으로 고통 받는 분단

이재민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보듬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북한 주민과 우리 사회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평화적 통일 과정 관리에 착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통일준비 일환으로 통일 자원 마련을 핵심적인 국정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통일비용 모금운동을 통해 국민의 통일 의지를 결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국내외에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비용 마련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통일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분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들에게 한국인의 통일의지를 과시하고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통해 통일을 관념의 영역에서 행동의 영역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해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복잡하고 역동적인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남북한은 스스로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가야 합니다.

『2012 통일백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향한 지난 1년 반 동안의 정부의 노력과 성과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통일백서 발간이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통일 미래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통일부장관 

발간사

제1장 통일정책

제1절 통일정책 추진 기본 방향	15
제2절 통일정책 추진 환경	19
제3절 통일정책 추진 개괄	21
1. 원칙과 유연성의 통일정책 추진	21
2. 북핵문제 해결 노력 지속	30
3. 인권·인도주의 가치 존중	32
4. 통일준비 추진	35

제2장 통일 미래 준비 및 역량 강화

제1절 실질적 통일준비 착수	43
1. 3대 공동체 구상 및 자원 마련 방안 모색	43
2. 통일준비 공론화	45
3. 통일법제기반 구축	51
제2절 통일준비를 위한 국내외적 협력체제 구축	53
1.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	53
2. 통일외교	54
제3절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64
1.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64
2. 국민과의 쌍방향적 소통 강화	68
제4절 북한정보 역량 강화	76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1절 남북 경제협력	87
1. 남북교역	87
2. 금강산 관광	95

제2절	개성공단사업	97
	1. 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	97
	2. 입주기업과 생산 현황	100
	3.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103
	4.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105
	5. 기업 투자 지원	108
제3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113
	1. 종교계	113
	2. 문화예술 및 학술 분야	114
	3. 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116
	4. 김정일 위원장 사망 조문단 방북 및 조의문 발송	116
제4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117
	1. 남북출입사무소 역할	117
	2. 남북 출입통행 절차	118
	3. 출입시설 및 출입·운송 현황	120
제5절	남북 협력기금 관리·운영	127
	1. 남북협력기금 수입	127
	2. 남북협력기금 지출	129
	3. 통일재원 법제화 추진	132

제4장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제1절	남북 이산가족 문제	137
	1. 당국차원	137
	2. 민간차원	138
	3. 국내차원	139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141
	1. 개관	141
	2. 남북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	142
	3.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	143
	4. 6.25전쟁 중 납북자 문제	147

제3절 인도적 지원	151
1. 당국차원의 지원	151
2.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53
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155
제4절 북한인권	158
1. 국제사회와의 협력	158
2. 시민사회와의 협력	161
3. 북한인권법 동향	162

제5장 남북대화

제1절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167
제2절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 현황	173
1. 군사분야	173
2. 인도분야	177
3.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민간 차원)	182
제3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185

제6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제1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내실화	189
1. 교육프로그램 개편	189
2.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191
3. 탈북 아동·청소년 교육	194
4. 교육생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194
5. 제2하나원 건립	197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198
1. 초기 정착지원	198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	202
3. 거주지 보호 및 지원	203

제3절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 추진	209
1. 「24시간 종합상담센터」 개소	210
2.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210
3.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212
4.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213
5.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215

제7장 통일교육

제1절 통일 미래를 향한 통일교육	221
1. 통일교육 추진체계 강화	221
2.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223
제2절 통일교육과정 운영	226
1. 초청교육	227
2. 해외순회교육	231
3. 사이버교육	231
제3절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지원	232
1. 학교통일교육 지원	233
2. 사회통일교육 지원	238
제4절 통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241
1. 기본교재 발간	242
2. PTV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243
3.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244

부록

I. 2010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252
II. 2011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260
I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280
IV.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290

相 生 共 榮 平 和 一 統

辛卯仲冬
大總統頒
李明博





01

통일정책

- 제1절 통일정책 추진 기본 방향
- 제2절 통일정책 추진 환경
- 제3절 통일정책 추진 개괄



제1장 통일정책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였다.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어 많은 나라들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에 따른 소위 G2 시대의 개막으로 세계 정세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3대 세습이 진행되는 등 한반도에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갖고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남북관계 발전의 근원적 장애물인 북핵 폐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상호존중의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와 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을 요구하였다. 또한 인류보편적 가치 추구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강조하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 북한은 남북대화의 일방적 중단과 남북교류협력 차단조치, 대남비방·중상과 위협 등 강경조치로 남북 간에 끊임없는 긴장을 조성하였으며, 급기야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로 50여 명의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무력 도발은 6.25전쟁 이후 지속되어온 북한의 무력 도발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

한의 도발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교류협력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5.24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지금까지 일관되게 시행해 오고 있다. 다만, 「5.24조치」의 목적이 대북제재 자체가 아닌 북한의 변화를 통해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및 취약계층 지원, 민간교류 등의 유연화 조치도 병행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태도 변화 없이 위협과 평화공세를 반복하며 우리측에 남북관계 상황악화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대북정책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유연성을 발휘하여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제1절 통일정책 추진 기본 방향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의 통일정책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고, 안정을 유지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대화와 교류가 늘어나면서 남북관계는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과 같은 협력사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북한의 식량사정 완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정책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의 안보와 남북 간 신뢰에 큰 위협요소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비확산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해

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그간 성장해 왔던 남북 교류협력에 큰 손상을 입혔다. 또한 매년 북한주민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식량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군사적으로 식량이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이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었다.

또 그간의 남북관계가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 균형 있게 진전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경제협력과 인도지원 분야는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평화를 증진시키는 군사·정치 협력이나 인권, 납북자·국군포로 분야는 성과가 미미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건강하고 정상화하는 방향에서 한 차원 높은 실질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에 근원적 장애물이다. 북핵문제 해결 없는 남북협력 확대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개방·3000」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북한이 핵폐기의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핵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경제재건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5대 분야(경제·교육·재

정·인프라·생활향상)에 걸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북한에게 핵포기 시 얻게 될 혜택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대화를 통해 유효적절하게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를 일방주의가 아닌 상호존중의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와 대비 태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존중없이 유리한 정세 조성을 목적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로 나와야 한다. 남북 간 대화에 있어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상호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실질적으로 성과 있는 회담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남북 간 호혜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셋째, 인류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는 이미 국가와 세계사 발전의 보편적 흐름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간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극적 입장을 취하지 못했던 북한인권 문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도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2010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통

일준비를 정책의 주요한 화두로 제시하였다. 이제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과 평화통일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통일 구상으로 평화·경제·민족공동체의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이 제시되었다. 또한 통일재원 마련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와 통일논의 공론화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통일 노력이 통일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통일정책의 목표로 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② 바른 남북관계 정립 ③ 통일에 대한 준비를 설정하였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가 관건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핵보유, 대외 고립, 선군 노선을 비핵·평화, 대외 개방, 주민 우선 노선으로 바꾸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바탕으로 통일 미래를 위한 남북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확보하고 상호존중에 입각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계속해 나가면서 통일재원 마련,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준비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목표 하에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북한의 협력에는 협력하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에 정책 변화 여지와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및 비정치·비군사 분야 중심의 교류 등 유연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년은 이러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진통의 기간이었다. 앞으로 정부는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2절 통일정책 추진 환경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는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많아졌다. 세계 경제위기로 시작된 변화에 중동 자스민 혁명의 민주화 물결이 더해지는 등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으며,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른 전세계적 교역·소비 위축이 신흥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등의 고통을 겪었고, 초강대국이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전세계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반면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안보 면에서도 급부상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으로 두 나라가 우리나라 총 무역액의 31.3%(2010년 기준)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어 정치·경제 동맹의 두 축을 구축하였고, 중국과의 무역액은 급속하게 증대되는 등 우리나라와 미국·중국과의 관계는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중의 부상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 한반도 정세 등 정치·안보 분야에도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통일정책도 이러한 정세 지형의 변화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둘째, 중동의 민주화는 2011년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이슈 중 하나였다. 중동 국가의 민주화 혁명으로 튀니지·이집트의 독재정권이 축출되었고, 리비아의 장기독재자 카다피도 최후를 맞았다. 민주화 도미노는 예멘과 시리아에까지 확산되면서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전세계는 거스를 수 없는 민주화의 흐름을 목도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SNS)가 시민들의 결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보화와 개방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셋째, 북한은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이후로 3대 세습 후계 구축 작업을 지속해 왔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창건 60돌 군 열병식에 불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후 삼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되었다는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었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의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인민군 대장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랐다. 이후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 등에 동행하는 등 후계체제 구축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12월 30일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고 후계 체제 안착을 위해 내부 결속을 다져나갔다.

그동안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왔었다. 체제 내부 결속을 공고화하면서 3대 세습 체제를 공식화하는 정치행사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도모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 방중(2011년 5월 20일 ~ 27일), 방러(8월 20일 ~ 27일)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외환경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를 지나면서 의연하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¹⁾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조문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큰 동요없이 침착하게 대응하였다.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북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²⁾

우리 정부는 이상의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주변국과 협력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정세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대화채널 복원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제3절 통일정책 추진 개괄

1. 원칙과 유연성의 통일정책 추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로서 우리 정부가 「5.24조치」를 단행한 이후 북한은 대남위협과 도발, 폭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1) 2010년 11월 27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원칙적 대북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4.8%였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2) 2011년 12월 6일부터 9일간 실시한 통일부 4분기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63.4%로 이전에 비해 24.5%p 상승하였으며, 비정치적 성격의 방북 허용 조치에 대해서도 90.2%가 긍정적으로 평가(40.5% 현재수준으로 허용, 30.7%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허용, 19% 더 많이 허용)하였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우리 정부의 정책전환을 압박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핵문제 해결과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왔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의 태도변화 유도를 위해 유연화 전략을 병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무력 도발 근절을 위해 「5.24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 그 내용은 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② 남북교역 중단 ③ 우리 국민 방북 불허 ④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⑤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천안함 폭침과 같은 무력 도발에 대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5.24조치」가 대북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였다.

2010년 8월 북한의 수해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가 이루어졌다. 대한적십자사는 8월 26일 대북통지문을 보내 수해 구호물자 지원 의사를 전달하였고, 9월 4일 북측의 회신에 따라 쌀 5천 톤, 시멘트 1만 톤, 컵라면 300만 개 등 긴급수해지원이 10월 25일부터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 협의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이틀 앞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감행하였다. 1시간 넘게 지속된 포격은 군부대뿐 아니라 민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주택과 공공

기관 등의 건물도 심각하게 파손되어 주민들 대부분은 연평도를 떠나 피난생활을 해야 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가 북한의 군사 공격을 받은 사건이었다. 우리 정부는 사건 당일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이며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추가 도발 시 단호히 응징할 것이며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10월 25일부터 시작되었던 수해지원 물품 전달을 중지하고 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해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을 재개하였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 국내외는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1월 29일 특별 담화를 통해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들도 사건 이후 여론 조사에서 64.8%가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찬성하였고, 57%는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³⁾ 유엔 및 미·EU·일·호주·프랑스·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어떠한 추가 도발도 억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3) 2010년 11월 29일 아산정책연구원, 2010년 12월 2일 동아일보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순국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배복철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당한 분들도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하며,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해 왔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더구나 1,400여 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섬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하였습니다.

민간인을 향해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든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불과 십여 미터 옆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어린 생명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 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도 북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1.21 청와대 습격 사태, 아웅산 테러 등 북한 정권은 이미 두 차례나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1987년에는 우리 민항기를 폭파해 1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거듭했던 것은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용기와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을 이룬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번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애국심과 의연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순국 사병들의 빈소를 찾은 신세대 청년들, 자발적으로 성금모금에 나선 시민들,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킨 국민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천안함 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분열 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으로서 강력한 대응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장병들도 용감히 싸웠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임무를 다했습니다. 휴가를 나가던 장병들은 즉시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입니다.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입니다.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에 들어 북한은 정부, 민간, 국회 등 전방위에 걸쳐 대화공세를 시작하였다. 1월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과 1월 8일 조선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당국을 포함한 정당·단체들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과 “당국 간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어 통지문을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1년 1월 1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일부 대변인 논평 형식을 통해 남북 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약속 ②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를 제안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

북한이 2011년 1월 20일 인민무력부장 통지문을 통해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해 옴에 따라 2월 8일에서 9일까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담에 나온 북측 대표가 “천안함 사건은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언급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회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2011년 3월 17일 북한이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 연구사업 공동 추진 등을 위한 협의를 제의하였고, 3월 29일과 4월 12일에 걸쳐 남북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2011년 6월 1일과 9일 양일에 걸쳐 5월에 있었던 남북비공개접촉을 폭로하며 남북대화를 거부하였다. 비공개접촉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어 현 국면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북한의 비공개접촉 폭로는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린 행위로 이에 대해 국내뿐 아니

라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면치 못했다.

또한 북한은 2010년 4월 금강산지구 내 우리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에 이어 2011년 4월 8일에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대아산의 독점 효력을 취소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기존 정령의 효력을 폐기하고 새롭게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하 '특구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6월 16일에는 우리 관광사업자들에게 관광특구 내 재산을 정리할 것을 통보하였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계약과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특구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부한 채 8월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측 재산을 몰수하고 반출금지와 인원 철수를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며, 「금강산 관광사업 대책반」을 구성하여 국제사회에 금강산 관광 및 투자 자제 요청 등으로 대응하였다.

2011년 9월 19일 제36대 류우의 통일부장관 취임사를 통해 정부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는 가운데 유연하게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얽힌 매듭을 풀어갈 것이며 꾸준히 북측과의 대화채널을 열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7월부터 시작된 남북·미북 비핵화회담의 흐름에 맞추어 한반도에 고조된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태도 변화와 남북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5.24조치」의 틀 내에서 인도지원 확대, 비정치적·비군사적 민간교류 허용, 개성공단 지원 확대 등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한편, 통일부장관은 11월 각각 방미(2011년 11월 2일 ~ 7일)·방중(2011년 11월 21일 ~ 23일)의 통일 외교활동을 통해 미국·중국 고위인사들과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 6자회담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10월 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유엔 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31일부터 재개된 민간단체의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추진되었고, 종교 교류 및 개성 만월대 복원사업 등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방북이 재개되었으며, 개성공단 출퇴근도로 보수공사도 시작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유연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직된 태도를 고수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에는 우리 군의 연평도 도발 1주년 합동훈련에 대해 “청와대 불바다”를 운운하며 위협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유연성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원칙을 견지함과 동시에 유연화 조치를 지속해 나갔다.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북한 방송을 통해 발표되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 국무회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갔다. 통일부장관은 12월 20일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관련 정부 담화문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방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에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애도기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12월 23일로 예정했던 전방 지역에서의 성탄트리 점등을 금년에는 유보하도록 교계에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현 북한 상황과 관련하여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조문단 방북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하여 북한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2. 북핵문제 해결 노력 지속

정부는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바겐」 전략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6자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북한이 진정성 있는 핵폐기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6자회담 관련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에 핵폐기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북한은 2008년 12월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 2009년 4월 5일 미사일 발사,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까지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9년 4월 14일과 25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2008년까지 동결·불능화 작업을 진행해 온 핵시설을 원상복구하고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및 10.3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 온 북핵 폐기 과정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합의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2010년 11월 12일 북한을 방문한 헤커(Siegfried Hecker)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은 2002년 제2차 핵위기의 시발점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북한은 핵위기 당시뿐만 아니라 6자회담을 진행해 오면서도 국제사회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후 6자회담이 중단되고 2차 핵실험 등 핵상황이 악화되면서 2009년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였고, 헤커 박사 방북 시 시설을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헤커 박사에게 의하면 북한은 실험용 경수로 건설, 우라늄 농축시설, 휴면상태의

5MWe 원자로를 공개하였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은 “핵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과 이에 대한 준수·이행을 규정한 9.19공동성명, 그리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규정한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는 스스로가 한 약속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한 번 저버리는 일이었다.

북한은 핵터 박사에게 동 시설을 공개하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은 전력 생산용으로 건설 중인 경수로의 연료 조달을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저 농축 우라늄 시설임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 기술은 고농축 우라늄과 핵무기 생산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한 후 6자회담 재개 시 이 문제를 협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미국·중국 등 관련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6자회담이나 어떠한 협상도 무의미함을 분명히 하고, 6자회담의 신의를 저버린 북한에 대해 비핵화 진정성을 말미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하였다.

먼저 2011년 1월 통일부 대변인 논평 형식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핵폐기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1년 1월 19일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5월 9

일 베를린에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할 의사를 밝히는 등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2011년 7월 22일 발리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9월 21일 베이징에서의 2차 접촉으로 이어졌으며, 남북접촉과 번갈아가며 미북접촉도 2회(7월 28일 ~ 29일, 10월 24일 ~ 25일)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실질적 진전이 있는 6자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중단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였다. 북한은 대화에는 임하면서도 사전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뉴욕 채널을 통한 실무접촉과 12월 중순 '대북 영양 지원' 관련 베이징 접촉 등을 지속하면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관련 협의는 지속되고 있다.

3. 인권·인도주의 가치 존중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2011년 6월 27일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2011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최악의 국가로 재지정하였으며, 국제인권 감시단체 프

리덤하우스는 2011년 6월 1일 북한을 40년 연속으로 ‘최악 중의 최악’ 인권 탄압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같은 동포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북한인권법은 현재 관계기관과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촉진되고 인도적 지원이 체계화되며,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심리적·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2008년부터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2011년 3월에는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념의 문제도, 정략의 문제도 아닌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우리의 의무이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도적 지원도 계속하였다. 2010년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식량부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였다. 2010년 8월에는 북한 신의주 지역 등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원도 시행되었다. 2010년 8월 26일 우리측 적십자사에서 북한에 “긴급 구호물자 지원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쌀과 시멘트, 컵라면 등 수해관련 구호물자를 10월 25일부터 전달하였다.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을 때까지 컵라면 300만 개, 쌀 5천 톤, 시멘트 3천 톤 등 72억 원 분량이 전달되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차원 인도적 지원을 모니터링 강화 조건 하에 2011년 3월 31일부터 재개하였으며, 2011년 11월 8일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재개하였다. 이를 통해 백신, 결핵약, 우유, 분유, 기초 의약품 등의 물품이 전달되고 있다.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단, 분배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여 지원 물품이 대상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0년 8월 대북 수해지원 제의를 계기로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었다. 남북은 2010년 9월 17일에서 10월 1일까지 3회에 걸쳐 적십자회담을 갖고 행사의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한 다음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191가족 886명이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남북 간 대화를 시도하였다. 일회성 만남은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며, 고향방문, 서신왕래, 나아가 자유왕래 등의 이산가족들의 분단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인도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후속 적십자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9월에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사무국이 12월 13일 공식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통일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조

사, 납북자 및 납북가족 여부 심사·결정, 이들의 명예회복,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전시에 납북된 사람들은 1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는 제헌의원, 국회의원, 언론인 등 유력인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12월까지 총 272명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명예회복과 송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2011년 12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만 3,000여 명으로 2010년 11월을 기점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을 넘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정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차원의 종합적 정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1년 5월부터는 재단 내 상시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법률, 의료, 고용, 생활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정책 중점과제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활성화, 대상별 맞춤 서비스, 통일 미래 리더 육성으로 두고 있다. 전국 30여 곳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150명의 전문상담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취업 관련 등의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제2하나원도 건립 중이다.

4. 통일준비 추진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결과 반목이 반복되는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통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

했다. 천안함 폭침 등 현 남북관계의 상황을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평화공동체는 「그랜드바겐」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구현하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평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경제공동체는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을 포괄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비핵·개방·3000」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남북 간 경제 격차도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 간 경제통합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였다. 민족공동체는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 자유·복지를 보장하는 공동체를 구현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민족 동질성 회복, 통일을 위한 법·제도의 통합 등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1994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 내에서 통일을 위한 과제를 좀 더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평화 및 경제공동체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화해협력단계를 상정한 것이며, 민족공동체는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 단계를 통합 상정한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평화공동체가 우선이며, 그 진행 단계에 맞춰 경제공동체 형성도 함께 이뤄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재원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통일대비가 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통일대비 역량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통일 구현에 있어 재원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며 시급한 화두이다.

정부는 이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통일 방안과 그 구체적 내용, 통일 재원과 관련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 그 성과를 종합해 나가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통일 준

비 및 재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일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결집하였다. 그 결과로서 통일시나리오별 로드맵과 이행과제, 통일편익 및 비용 조달방안 등을 2011년 10월 7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여 기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고 통일재원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통일재원 관련 법제화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민 참여를 통한 재원 적립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국내 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0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사랑하는 7천만 동포 여러분! 6.25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한민족의 염원이며,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나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이러한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더 이상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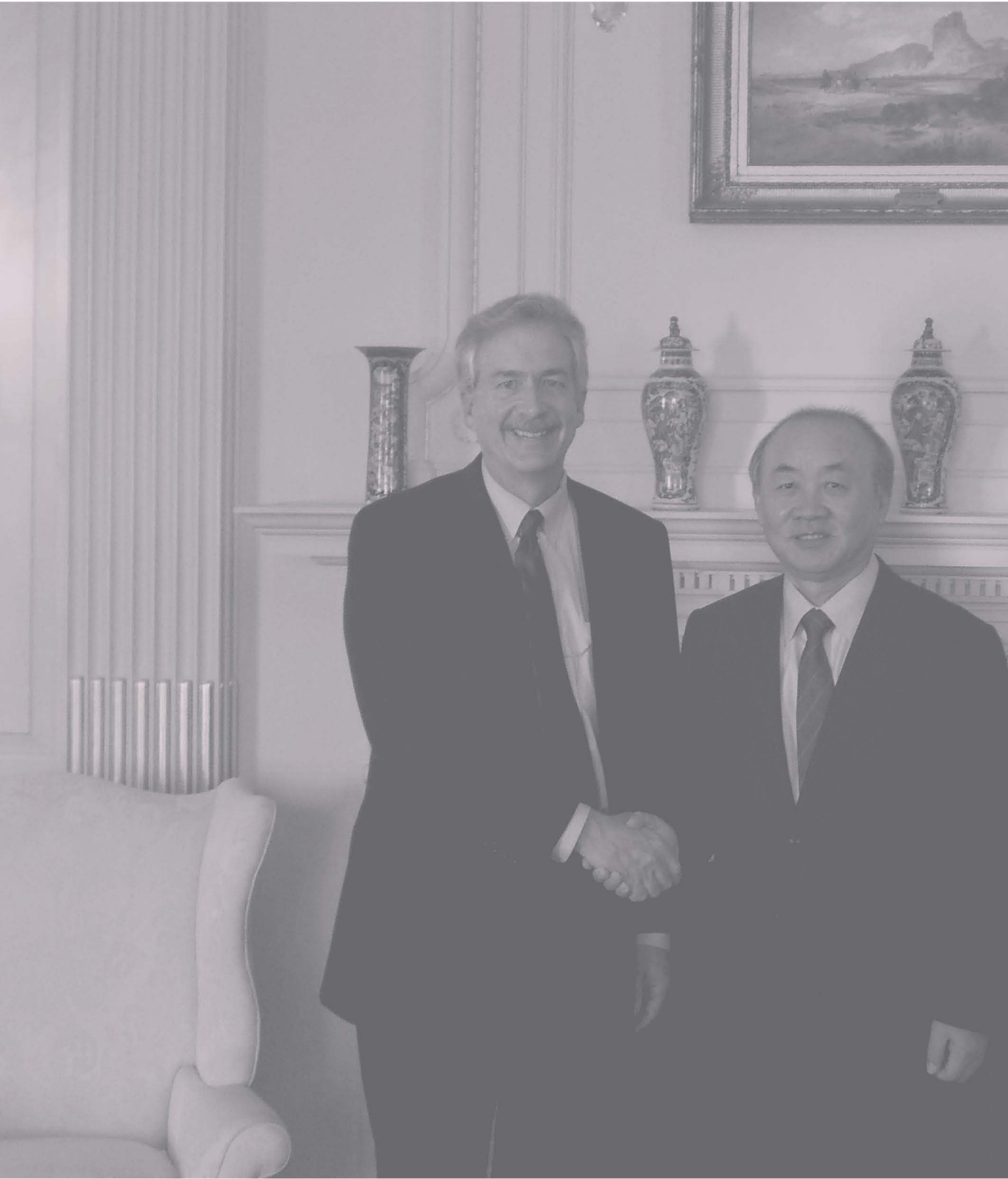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02

통일 미래 준비 및 역량 강화

- 제1절 실질적 통일준비 착수
- 제2절 통일준비를 위한
국내외적 협력체제 구축
- 제3절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 제4절 북한정보 역량 강화

제2장 통일 미래 준비 및 역량 강화

통일문제는 국민 생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토대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추진하였다.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을 통해서 교육계, 학계 등 5개 분야별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통일논의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제협력과 통일의 교를 통해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통일의 역량을 다져나갔다.

또한 자문회의, 여론조사,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 체험 프로그램, 시민 통일운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였다. 아울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온라인 매체를 통한 쌍방향적 소통과 통일방송을 추진하였다. 한편 북한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북한정보 통합시스템을 통해 북한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절 실질적 통일준비 착수

1. 3대 공동체 구상 및 자원 마련 방안 모색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안하면서,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공동체 형성과정 및 자원조달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공론화 사업을 두 축으로 하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10년 8월 통일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재원 논의추진단」을 구성하여 20차례 회의를 통해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후 조달청 공고를 통해 연구수행기관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0년 11월에 2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취지와 연구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외부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1월까지 주제별 연구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하였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주제별 연구수행기관

연구 주제	연구수행기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통일연구원
평화공동체 추진 구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민족공동체 추진 구상	이화여자대학교
통일재원 마련 방안	한국재정학회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성균관대학교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공동체 형성을 통한 점진적·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통일 이전 공동체 형성과정 및 통일 이후 국가 통합과정 전체에 대한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단계별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비용 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며,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수행기관들은 5개 주제 합동으로 4번의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팀들 간 연구내용을 조율하였고,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도 보고회에 참여하여 연구의 일관성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1년 8월 11일에는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동체 로드맵, 통일재원 조달방안 등과 관련한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정책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수립하였다.



통일준비 심포지엄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결과보고회

2. 통일준비 공론화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일준비 공론화사업」을 추진하였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 통일 이슈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일의 편익, 통일 비전 등 통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화 사업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한 부분인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의해 기금 지원이 의결된 후,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계·학계·경제계·시민사회계·종교계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분야별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계는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계는 대학(원)생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경제계는 지역별 경제인이며, 시민사회계는 일반시민 및 NGO, 종교계는 7대 종단의 종교인이다.

조달청 공고를 통해 연구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여 2011년 1월 18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종교계를 제외한 4개 분야 합동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공론화 사업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

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마련된 다양한 토론의 장에서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긍정적인 효과, 바람직한 통일 방향, 통일 달성을 위한 과제 등을 함께 고민하였다.

통일준비 공론화사업 분야별 연구수행기관

분야	연구수행기관	대상	프로그램	횟수
교육계	서울교육대학교	초·중·고 학생 교사	통일 이야기, 교사 포럼, 통일 용틀임 한마당	131
학계	전국대학통일문제 연구협의회	대학(원)생 전문가	대학(원)생 세미나, 전문가 세미나, 대학생 특강 등	49
경제계	연세대학교 리서치앤리서치	경제인	경제인 세미나, 심층면접, 의식조사	17
시민 사회계	세이브NK 국제평화재단 평화통일국민포럼	일반 시민 단체	통일포럼, NGO 통일 세미나	22
종교계	평화문화재단	종교인	통일 세미나, 통일 워크숍, 의식조 사 등	29

교육계는 통일 미래시대의 주역으로 활동할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생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통일 인식을 심어 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통일 용틀임 한마당'을 통해 전국 주요 7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통일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 대상으로는 '통일을 위한 교사 포럼'을 통해 교사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교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통일 의식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계는 총 131회의 세부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을 토대로 학교 통일교육 문제 극

복 및 발전방안 등과 함께 공론화 사업의 사업총괄로서 타 분야와 연계한 공론화 확산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계는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통일 논의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또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도 '대학(원)생 세미나'에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저명인사를 초청한 '대학생 특강' 및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학생 통일캠프'를 마련하여 대학생들이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계는 총 49회의 세부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대학사회의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되었다.

경제계는 경제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2011년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015명을 대상으로 '경제인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통일문제에 대한 경제인들의 의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주요 쟁점을 의제로 하여 지역별 및 단체별로 '경제인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경제인들이 통일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총 35명의 경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은 앞서 의식조사 등에서 나타난 경제인의 의식을 본인이 직접 설명해 봄으로써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계는 15회의 공론화 행사 및 1회의 의식조사, 심층면접 등 총 17회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경제인 통일의식조사 결과



시민사회계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포럼 미래로'를 진행하였다.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통일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NGO를 대상으로 한 'NGO 통일 세미나'를 통해 NGO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논의를 시민사회 내에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사회계는 대규모 개방형 문화행사 실시, 통일관련 유명인사 초청 등으로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노력했으며, 대규모 통일대회를 포함한 총 22회에 걸쳐 공론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종교계는 '통일 세미나'를 통해 종교계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7대 종단을 아우르는 종교인들의 통일논의 공론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각 종단은 '통일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각 종단에 속한 종교인들이 통일의 주요 의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형 종교 행사 등에 통일 사진전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종교계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종교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국 최초의 '종교계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종교인의 통일의식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종교계는 의식조사를 포함하여 총 29회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종교계 통일 세미나

이처럼 통일논의 공론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2011년 10월까지 약 3만 7,400명을 대상으로 행사와 때 행사 시 현장 여론조사 및 분야별 여론조사(경제계·종교계) 등 총 257회의 공론화 사업을 전국적으

로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한편, 5개 분야 합동으로 중간보고회(2011년 4월 8일, 남북회담본부), 1차 결과보고회(2011년 6월 7일, 남북회담본부)를 개최하여 사업 진행 상황 및 중간 결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평가단 및 자문위원의 평가를 받아 보완하였다.

10개월간에 걸친 공론화 사업 결과는 2011년 10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종 결과보고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용역수행기관들은 그간의 사업 성과 및 의식조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사업 중 노출된 한계 및 향후 극복·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사업수행계획상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고 전국적 행사 진행을 통해 각계각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면서 통일 논의의 저변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 방향을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과정상의 갈등을 토론의 장에서 소통을 통해 수렴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업의 중요한 성과였다. 금번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통일담론을 통해 통일논의의 확산을 기하면서 통일준비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5개 분야 현장여론조사 결과(주요 문항)

(단위 : %)

문항	보기	전체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통일에 대한 관심도	매우 관심	24.1	22.6	17.2	42.8	41.6	16.3
	관심	55.0	61.7	58.8	46.1	46.2	49.3
	관심없음	17.8	14.8	20.8	9.8	10.8	25.8
	전혀 관심없음	3.1	0.9	3.2	1.3	1.3	8.6
통일의 준비 정도	매우 잘됨	0.9	0.9	0.7	0.7	1.9	0.3
	대체로 잘됨	8.7	9.4	5.4	8.7	14.4	9.8
	그다지 안됨	72.9	78.8	73.1	72.7	68.1	68.5
	전혀 안됨	17.5	11.0	20.8	17.8	15.5	21.3

문항	보기	전체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통일편의 vs 통일비용	편익 > 비용	44.4	47.8	46.1	55.8	48.0	27.3
	편익 = 비용	18.9	19.4	19.9	13.5	17.7	19.6
	편익 < 비용	36.7	32.8	33.9	30.7	19.6	53.1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방안	일정부문 예산적립	61.4	68.7	60.6	63.2	56.4	56.2
	통일세 등 신설	12.8	13.4	9.9	15.8	19.0	11.4
	국민성금	11.5	8.2	10.9	9.4	14.0	16.0
	국제금융기구 등 도움	11.6	8.0	14.4	7.7	8.0	16.3
통일을 위한 중점 과제	자주 국방력 강화	16.6	14.6	12.4	15.7	24.0	22.1
	내부 통일준비 강화	31.0	35.3	28.8	24.7	32.5	31.0
	대북경제지원 확대	4.1	3.9	3.9	2.7	3.0	6.6
	남북교류협력 증대	37.4	37.7	42.2	45.2	26.7	32.8
	통일의교 강화	8.8	7.7	11.0	9.7	12.0	2.5

* 조사대상 : 교육계(교사) 1,645명, 학계(대학생/대학원생) 2,383명, 경제계(경제인) 554명, 시민사회계(일반 시민/단체) 997명, 종교계(종교인) 1,148명

3. 통일법제기반 구축

정부는 통일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통일법제 기반구축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왔다.

우선 각 정부기관이나 학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통일법제 연구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공유하는 「통일법제 DB구축」 작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관련 연구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2010년에는 관련 연구의 원문을 확보하고 저작권 동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이를 업데이트하였다. 민간이나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 연구한 것까지 포함

하여 2011년까지 연구결과의 원문은 600건, 목록은 1,600건이며, 이를 CD로 제작하여 관계부처 및 연구소·연구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통일부·법무부·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통일부의 정책연구 및 해외사례조사 계획 등을 검토하여 법무부·법제처와의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민·관의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통일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는 대법원(사법연수원 연구교수), 2011년에는 입법부(국회 법제실 재정법제과장)가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통일법제에 관한 민·관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더 강화하였다.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저변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술활동도 지원하였다. 2011년 4월에는 한국공법학회가 주최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후원하였고, 7월에는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가 주최하고 사법연수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참여한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후원하였다. 11월에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아시아법제포럼」의 일부 행사로 「아시아법제의 변화와 남북법제의 정비」를 주최하였다.

이외에도 남북 간 통합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주제에 대해 법제들을 정비·연구하고 있으며, 체제전환국에 대한 사례들도 계속 조사하여 남북 간 통합에 대비하고 있다.

제2절 통일준비를 위한 국내외적 협력체제 구축

1.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

정부는 통일정책이 국민의 의사와 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유관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협력체제에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다. 동 협의회는 통일부차관(위원장)을 포함하여 19개 정부 부처·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며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2011년 전체회의 및 정책소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정착지원제도 개선 방안, 정착기본금 인상 문제 등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는 사회적응교육, 취업, 주택, 교육, 사회복지, 지역정착 등 정부 업무 전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된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민간단체와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범정부적 협의체이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3명의 정부위원과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1989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대통령령, 1989년 3월 31일 시행)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다음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률에 근거를 둔 협의체로 발전하였다. 협의회는 출범 후 2011년 12월 말까지 총 244회 개최하였으며, 2010년 7월 이후 총 12회를 개최하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대북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29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2008년 5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부처 간 실무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2010년 7월 이후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2. 통일외교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통일준비 차원에서 통일외교와 국제협력을 핵심과제로 삼고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한반도 및 북한 정세 평가와 통일 정책개발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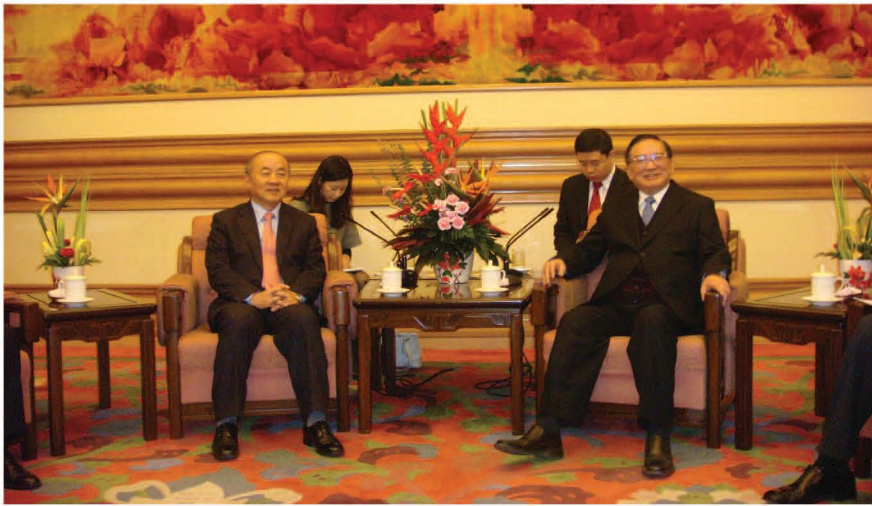
고위정책협의

고위정책협회는 통일부장관이 직접 관련 국가를 방문하여 정부 및 의회관계자, 현지 전문가 또는 동포들을 만나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정부의 통일 의지와 정책을 설명하는 최고위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다.

2010년에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통일부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독일 통일 기념행사(2010년 10월 2일 ~ 4일)에 참여하였다. 이는 독일 정부가 특별히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이루어진 방문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의 각별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 방문 시 현 장관은 외교·국방·내무장관 등 독일 정부 및 의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한반도 통일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는 등 독일 통일·통합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1년에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직접 관련국을 방문하는 고위정책협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여 빌 번즈(Bill Burns) 국무부 부장관과 로스레티넨(Ros-Lehtinen) 하원 외교위원장, 조 리버먼(Joe Lieberman)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짐 웹(Jim Webb)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 등 의회관계자들을 면담하는 기회를 가졌다. 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유연화 조치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뉴욕에서는 민주평통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통일향아리 캠페인 등을 통한 통일준비의 필요성과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를 구하였다.

이어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였다. 중국 방문기간 중에는 다이빙궈 국무위원,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양제츠 외교부장 등 중국 당·정 고위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유연화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하였다. 아울러 현지 한인동포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탕자쉬안 중국 전 국무위원 면담

국제통일전략대화

국제통일전략대화는 실무급 통일부 관계자들이 미·중·일·러·EU 등 주요국을 방문하고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협의와 설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고위정책협의를 실무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략대화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책토론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현지

동포 및 여론주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해외 동포들의 적극적 지지와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10년에는 통일부 관계자들이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방문하여 해당 정부 관계자들과 대북정책 추진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이 같은 기회를 활용하여 현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기반을 강화하였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경제연구소(KEI) 및 아시아재단 주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고, 시애틀 및 뉴욕 등을 방문하여 동포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일본에서는 도쿄 및 교토 지역을, 중국에서는 베이징 및 상하이 지역을 방문하여 전문가회의와 동포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구소련 지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고려인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였고, 양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중국, 일본, 호주, 미국, 유럽 등을 방문하여 실무급 정책협의의를 갖고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국제문제연구소, 일본에서는 히로시마 평화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호주에서는 멜버른, 캔버라, 시드니 등을 방문하고 호주국립대와 공동으로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미주지역 통일전략대화에서는 워싱턴 지역 민주평통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미외교정책위원회(NCAFP) 관계자, 의회 의원보좌관들과 면담하고, 미국평화연구소(USIP)와 공동으로 한반도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유럽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에서는 독일 연방정부와 2012년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

행하고,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하여 아일랜드의 평화협상 경험 공유를 위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통일부 장·차관 주요인사 면담 및 인터내셔널 포럼

통일외교의 측면에서 통일부 관계자들이 해외를 방문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고위정책협의」와 「국제통일전략대화」라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으로는 장차관의 외빈 면담과 「인터내셔널 포럼」이 있다. 통일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다양한 주요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의 장·차관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0년 통일부를 방문한 주요 인사로는 미국의 웬디 셔먼(Wendy Sherman) 전 대북정책 조정관, 커트 캠벨(Kurt Campbell)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국무부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리처드 킹(Richard King) 북한 인권특사,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전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참의원 의원,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대신, 피터 로우(Peter Rowe) 전 주한 호주대사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에도 다양한 인사들이 통일부를 방문하였는데, 스페인의 히메네스(Jimenez) 외무장관과 호주의 케빈 러드(Kevin Rudd) 외무장관을 비롯하여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중국의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장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주요국 대사 간담회, 라운드테이블 회의 등을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구하였다. 아울러 각국 주한

공관의 실무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주한 공관의 실무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현장 방문과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계기시마다 방한한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인터내셔널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국제업무 관련 직원들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고든 플레이크(Gorden Flake) 미국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에버하르트 쿠어트(Eberhard Kuhrt) 독일 연방내무부 구 동독지역 재건담당과장, 김철 중국 요녕 사회과학원 한반도 연구센터 비서장, 존 박(John Park)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자문위원 등이 「인터내셔널 포럼」에 초청되어 직원들과 다양한 한반도 이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인터내셔널 포럼」은 2010년과 2011년에 각 6회 개최되었다.

나. 통일외교를 위한 국제회의체 운영

코리아글로벌포럼(Korea Global Forum)

「코리아글로벌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1.5트랙(반관반민)의 국제적 다자협의체이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창설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연례회의체이다. 「코리아글로벌포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일·중·러·유럽·아시아 등 총 10여 개국에서 정부 인사 1인과 민간 전문가 1인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자유로운 토론과 브레인스토밍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코리아글로벌포럼」 창설회의는 2010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국제적·지역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국·미·일·중·러·영·프·독·호주·인도·싱가폴 등 11개국에서 전·현직 정부 인사(국장급)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21명이 참여하였다. 윌리엄 코헨(William Cohen) 전 미국 국방장관이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주요 참석인사들은 미국의 성 김(Sung Kim) 전 6자회담 특사,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 일본의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지구규모과제심의관,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교수, 중국의 진찬룡 런민대 교수 등이다. 참석자들은 “아태지역 안보현황”, “북핵문제 현황과 전망”,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안보 역학구도” 등을 세부주제로 하여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다.

2011년 제2회 「코리아글로벌포럼」은 “동북아 안보역학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포럼에는 10개국에서 전·현직 관료 및 민간 전문가 21명이 참석하였으며, 존 햄리(John J. Hamre)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이 기조강연자로 참석하였다. 회의는 “최근 한반도 상황”,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역학구도”,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등을 세부주제로 하여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반도비전포럼(Korean Vision Forum)

「한반도비전포럼」은 한반도 관련 주요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통일문제 관련 국제회의체로서, 한반도 통일비전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여 통일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 일반시민 등의 참여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010년 5월에 제1회 「한반도비전포럼」을 개최하였다. 「한반도비전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700여 명의 일반인들이 참석하여 영상질문, 토론 등을 통해 참여와 공감의 장을 넓혔다. 동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 :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독일 통일 20주년과 한반도에의 함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으로의 길”, “비핵·평화·민주주의의 한반도”, “한반도의 미래경제 비전 :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 “함께 생각하는 녹색 한반도” 등의 주제를 가지고 이틀간 토론하였다. 콜린 파월(Colin Powell) 전 미 국무부 장관이 기조강연자로 초청되었고, 웬디 셔먼(Wendy Sherman) 전 대북정책 조정관도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하였다. 700여 명의 청장년층 일반인들은 통일비전 공모전, 영상질문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한반도비전포럼」에 참여하였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을 말하다” 공모전은 통일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통일을 말하다』라는 소책자로 발간되었다.

2011년 11월 18일에는 독일 통일 당시 주요 역할을 했던 독일측 인사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제2차 「한반도비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제2차 「한반도비전포럼」은 독일의 전문가들과 국내 원로들이 같이 하는 비공개 형식의 ‘비전포럼’과 대학생 및 청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비전대강연’ 등 크게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비전포럼’에서는 “독일통일의 의미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독일의 호르스트 텔치(Horst Teltschik) 전 콜 수장 외교안보정책 특보와 구본태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발제를 하고,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전 동독 군축·국방장관을 비롯한 독일측 인사들과 한승주, 이인호, 이경숙, 차인태 등 통일고문, 김석우 전 통

일부차관 등의 한국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화여대 김영익홀에서 개최된 ‘비전대강연’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외르크 쇤봄(Jörg Schönbohn) 전 독일 국방차관, 로타어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전 동독 총리 등이 강사로 참석하여 강당을 가득 채운 500명의 대학(원)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통일에 대한 미래비전 및 독일 통일의 경험”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통일부는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이하여 2010년 10월 1일 독일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양국의 경험 및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한·독 통일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2011년 1월에는 독일 연방 내무부측과 실무정책협의를 갖고,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하였다.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는 우리측에서 통일부차관, 독일측에서 연방 내무부차관을 포함하여 양측에서 각각 12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로서 독일 통일 및 통합과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효율적 교환을 위해 자문하는 기구이다. 이는 통일 미래 준비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통일과 통합과정에 참여하였던 독일측 관계자들로부터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창립기념식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창립기념식은 2011년 11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는 한·독 양 차관의 개회사, 국무총리 축사, 류우익 통일부장관과 리하르트 슈뢰더(Richard Schröder) 전 동독 마지막 의회 사민당 원내총무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동 창립기념식에는 통일고문, 정책자문위원, 주한 외교사절, 주한 독일대사관 초청인사, 남북관계 전문가,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1년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개최된 자문위원회회의에는 독일측에서 크리스토프 베르크너(Christoph Bergner) 연방내무부 정무차관, 로타어 드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전 동독 총리 등 독일 통일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전직 정부관계자 및 중진학자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한국측에서는 김천식 통일부차관을 비롯하여 한승주 전 외무장관 등 사회 각계각층 원로급 인사 11명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쉬납아우프 전 내무부 실장은 동 회의에서의 발제를 통해 독일통일의 요인을 80년대 중반 이후의 소련 내 변화와 경제·주택·일자리·교육 등 생

활수준 향상에 대한 동독인들의 소망과 희망으로 설명하였다. 튀디거 폴 전 할레 경제연구소장은 동독지역 체제전환의 핵심요소로 동독지역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분야의 재건, 사회적 생산기반의 현대화 및 교육내용 개혁 등을 언급하였다.

독일측은 또한 자유토론을 통해 독일 통일 시 경제적 문제는 잘 해결되었으나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이 잘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동독과 서독이 심리적으로 같은 높이에서 통일을 했다는 자존감을 가지지 못해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간적 측면의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2차 회의는 2012년에는 5월 초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그 후 연 1회 한국과 독일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절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1.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이명박 정부는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사회지도층 및 여론주도층 인사들로부터 대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였고, 남북관계에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마다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나날이 다양화·세분화되어 가는 정책 자문 수요에 맞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안에 ‘정책홍보분과’를 신설하고, 자문위원

수를 대폭 증가시켜 총 9개 분과 11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였다. 그리고 2010년 6월 30일부터 2011년 12월 31까지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28회 등 총 3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았다. 또한 사회 각계 원로급 인사가 망라된 통일고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고, 종교계 지도자 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로부터 수시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정부는 폭넓은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차관을 포함하여 통일부의 주요 직원들이 국민과의 대화와 접촉의 면을 넓혀 나갔다. 통일부 장·차관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장관 51회, 차관 75회 등 총 126회에 걸쳐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만나 정책대화를 나누었다. 나아가 이 같은 국민과의 만남이 단순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히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온 국민과의 정책대화를 지역적으로 확대하고 경제계·학계·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통일운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문제에 관한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를 비롯하여 민간통일단체인 민족통일협의회(이하 '민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등과 상시적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이들 주요 정책고객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민주평통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개최한 '2011 통일정책 국민공감 대회'에는 통일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여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민통 전국대회 및 통일포럼, 민화협 창립기념 후원의 날 및 대의원 대회 등 각종 행사에 장·차관이

참석하여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1년에는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민간 통일운동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25개 단체의 우수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한편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동 프로그램에는 2011년 한 해에만 11회에 걸쳐 총 600여 명의 주요 정책고객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책고객들은 백령도, 강원도 철원 등 남북 접경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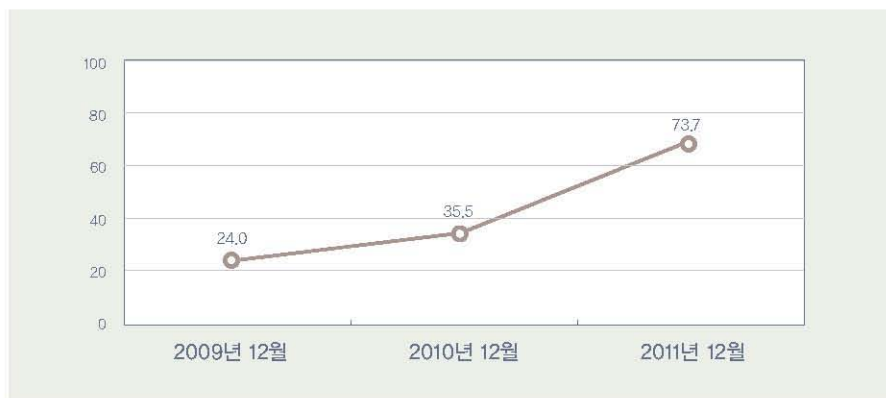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2009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해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지지를 아끼지 않은 밑바탕이 되었다. 특히, 2011년 9월 19일 류우익 장관이 취임한 후에는 유연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정책 소통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정부는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여론조사⁴⁾도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2010년 12월, 2011년 12월 모두 전년 동월대비 상승하였다. 2011년 12월 조사에서 비정치적 성격의 종교·문화 행사에 대한 방북조치에 대해서 ‘현재 허용수준이 적절하다’(40.5%)라는 의견이 2011년 9월(26.2%)보다 크게 상승하여 유연화 조치에 대한 지지도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리서치맨리서치, 갤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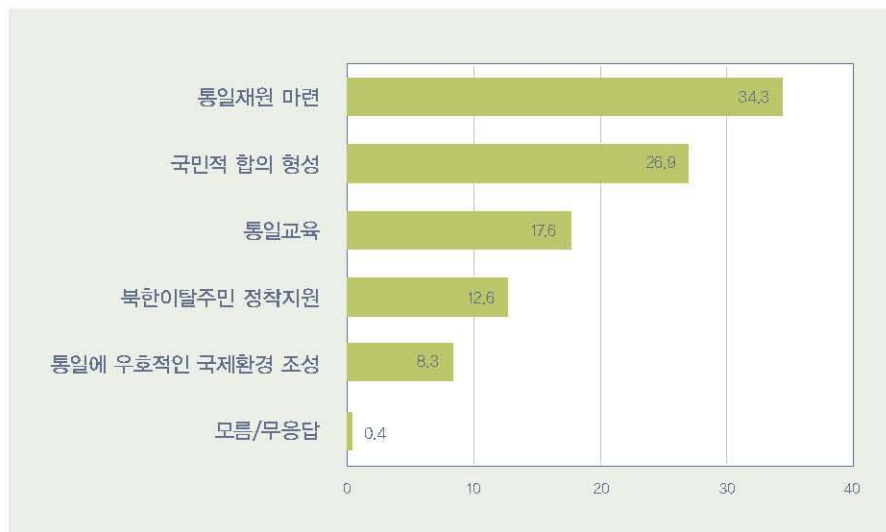
대북정책 지지도

(단위 : %, N=1,000)



통일 준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

(단위 : %, N=1,000)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과 건전한 남북관계에 대한 요구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011년 12월 조사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

는 '관심있다'가 75.5%, 통일에 대한 열망은 '원한다'가 79.5%로 집계되었다.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통일재원 마련'(34.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적 합의 형성'(26.9%), '통일교육'(17.6%), '북한이 탈주민 정착지원'(12.6%),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8.3%) 순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군사안보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나 군사안보 상황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인식은 그동안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1년 하반기에 크게 감소하였다.

2. 국민과의 쌍방향적 소통 강화

정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책추진 상황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였다. 특히 실질적 통일준비를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와 바람을 담아내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가. 오프라인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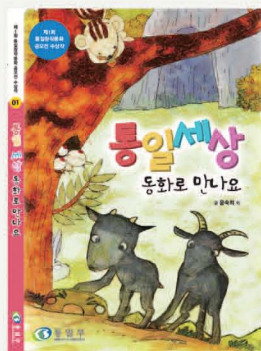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1년 2월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정책설명 자료를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하였다. 8.15 등 주요 계기시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사의 결집이 필요할 때에는 맞춤형 리플렛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위해』(2010년 8월)와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2010년 10월) 등을 제작·배포하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확인하였다.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익 광고도 제작하였다. 제작한 영상물은 공중파 TV, 공항, 철도, 지하철, 옥외 전광판 등에 방영하여 통일준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버전의 통일송을 제작하고 ‘슈퍼스타 K2 Top11 콘서트’, ‘라디오 통일콘서트’, ‘통일송 클래식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기적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통일 뮤직비디오 제작, 통일 에피소드 연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의지를 제고하였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보여주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2개월간 「제1회 통일동화 창작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총 500여 편의 동화가 공모되었다. 이 중 수상작 11편을 『통일 세상 동화로 만나요』라는 제목의 동화책으로 발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6천여 곳과 어린이 도서관 70여 곳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앱으로도 개발하여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동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동화



- 나를 밟지 마세요
- 내 친구 외계인
- 우리는 통일형 이산가족
- 들던지기
- 어흥, 평화 여행으로 출발
- DMZ와 물뿌리플
- 대나무 숲 이야기
- 김치로 통일하자!
- 두 날개로 나는 자건거
- 달만두 별냉면
- 악어와 악어새 이야기

통일송

두근두근 설레는 그날
이제 이제 오고 있어요

함께 준비해요 우리 미래
그토록 꿈꾸던 행복한 순간

성큼성큼 다가온 그날
이미 이미 시작된 행복
우리 같이해요 할 수 있죠
모두가 그리던 행복한 날

함께라면 더 커져요
함께라면 더 행복해요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크게 웃을래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함께하는 그 순간을
우리 힘을 모아 준비해요
행복한 통일이 다가오네요

함께라면 더 커져요
함께라면 더 행복해요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크게 웃을래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함께하는 그 순간을
그날이 멀리 달아나지 않게
다함께 준비해요
행복한 통일



나. 온라인 소통

통일을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 주력하였다. 먼저 2010년 10월 정책홍보 및 정보제공의 대국민 접점인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의 안정적 운영과 SNS 연계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미지부터 사용환경까지 소셜 허브기능을 가진 홈페이지로 개편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1년 8월 영문 홈페이지(eng.unikorea.go.kr)의 메뉴구조 및 디자인을 업데이트하여 정책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였다.

네티즌과 보다 신속·정확하게 소통하고자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및 정보제공에도 주력하였다.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개설하고 기존 온라인 채널과 연계하여 소통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2010년 3월에 미투데이 통일부 공식 계정(me2day.net/mouni)을 개설한 이후, 6월에 트위터(twitter.com/uni_kr) 계정을 개설하였으며 7월에는 정부 부처 최초로 페이스북(facebook.com/unikorea) 계정도 개설하였다. 2011년 12월 말 기준 페이스북 좋아요(likes)는 6만 6,603명, 트위터 팔로워(follower) 1만 1,497명, 미투데이는 1만 5,416명을 기록, 페이스북 팬(fan)수, 트위터 팔로워(follower) 수가 정부 부처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 대표 블로그인 '통일 미래의 꿈'은 젊은 층의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켰다. 2008년 8월 개설 이후 2011년 12월 말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154만 명(티스토리 3만 9,2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11년 9월 영문홈페이지 페이스북(facebook.com/unikorea.eng)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SNS미디어 채널을 구축·운영하여 국민과의 접촉점을 확대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였다.

온라인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감성적인 방식의 홍보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층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블로그를 활성화하고, 젊은층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상생기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첫 출범한 상생기자단은 2011년 12월 기준 제4기가 활동 중이다. 4기 기자단은 3기보다 25명이 늘어난 45명 규모로 구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통일문제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미국 등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3일에 제1기 해외 상생기자단(9명)을 구성하였으며, 2011년 7월 25일에는 제2기 해외 상생기자단(15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상생기자단은 각종 남북관계 현장이나 통일부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사진, 인터뷰, 동영상, 수필, 토론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상생기자단

웹툰(만화)·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노력에 힘입어 2011년 12월 (주)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최 「제4회 대한민국인터넷 소통대상」에서 인터넷 소통 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홍보전문지 「The PR」지 주최 「대한민국 소통대상」에서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제4회 대한민국인터넷 소통대상



「The PR」지 주최 대한민국 소통대상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보급 확대에 따라 스마트기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해 ‘통일 골든벨’(앱스토어), ‘통일! 행복한 상상’(앱스토어), ‘통일송’(안드로이드, 앱스토어,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 앱(Ap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2월에는 민간 포털(네이버)과의 협약을 통해 지식 Q&A 통일분야 서비스를 실시하여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다.

다. 인터넷 통일 방송

세대 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차를 완화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국민 공감형 방송을 추진하였다. 인터넷 통일방송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고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영상물 88편을 자체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라디오 시험방송을 82회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방송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 10월 1일 '인터넷 통일방송'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통일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인터넷 통일방송은 크게 Uni TV와 Uni 라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Uni TV는 주요 이슈를 전하는 주간 유니 뉴스와 통일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룬 교육 영상자료, 그리고 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각종 영상물 등으로 편성·운영하였다. Uni 라디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13:00~14:00) 매일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것과 동시에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하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통일시트콤 '옥닥옥닥'을 총 20편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제작하고, 인터넷 통일방송 홈페이지와 한국정책방송(KTV), 미국 교민방송(Tan-TV)을 통해서 방영하였다.



통일시트콤 옥닥옥닥



인터넷 통일방송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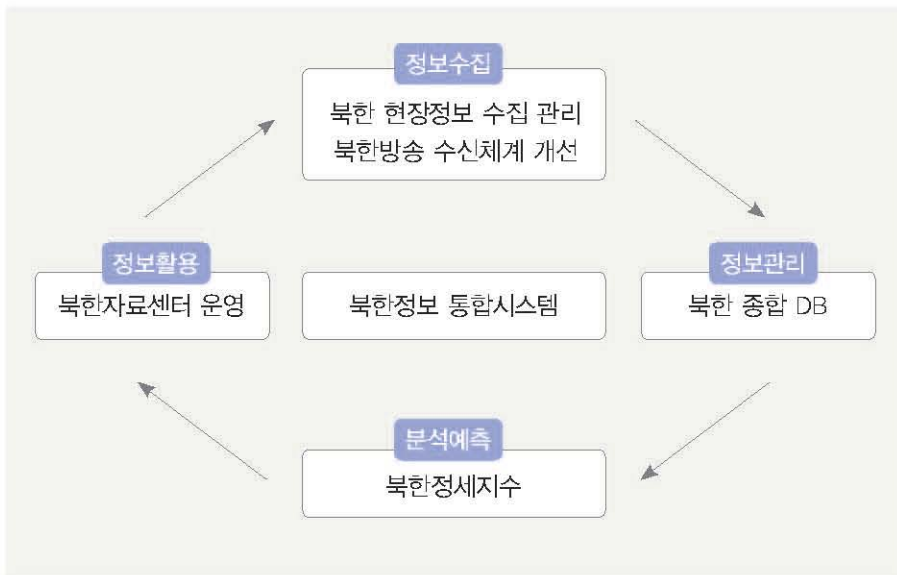
구분	매체	내용
오프라인	정책설명자료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등
	콘서트 및 프로그램	슈퍼스타K2 Top11콘서트, 라디오 콘서트, 기적의 오디션
	통일동화	통일세상 동화로 만나요
온라인	상생기자단	4기(45명), 해외 2기(15명)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eng.unikorea.go.kr(영문)
	미투데이	me2day.net/mouni
	트위터	twitter.com/uni_kr
	페이스북	facebook.com/unikorea facebook.com/unikorea.eng(영문) facebook.com/unitvboard(인터넷 통일방송)
	블로그	blog.unikorea.go.kr
	웹툰	
앱	 통일부 통일방송 통일송 통일동화 통일꿀든벨	
통일방송	Uni TV	주간 유니 뉴스, 교육 영상자료, 시트콤 옥닥옥닥 등 unitv.unikorea.go.kr (인터넷 주소) munitv.unikorea.go.kr (모바일 주소)
	Uni 라디오	월요일 ~ 금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제4절 북한정보 역량 강화

가. 북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북한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북한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관리·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북한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정보 통합시스템은 북한 현장정보 수집·관리,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 북한정세지수 개발, 북한 종합DB 구축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정보 통합시스템



나. 북한 현장정보 수집·관리

1990년대 이후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민간차원의 대북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방북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 관련 정보 원천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들로부터 북한의 산업·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북한의 산업·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10년에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외 방북자 총 2,05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피면접자가 인지하고 있는 북한의 지역별 산업·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2011년에는 보다 참신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010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설문기법과 면접기법을 개선·보완하여, 총 1,52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 현장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정보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북한 종합DB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북한의 산업·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는 북한 종합DB의 기초자료로서 축적되어 북한 정세분석과 통일정책 수립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다.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

정부는 북한방송 자료를 북한 정세를 분석하는 중요한 정보 원천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 방송 매체들을 아날로그 방식으

로 수신하다 보니,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수집된 방송 자료를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북한방송 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북한 조선중앙TV, 단파라디오 방송을 디지털 방식으로 수신할 수 있는 수신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고화질·고음질의 북한방송 자료를 보다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2011년에는 디지털화된 수신시스템을 개선·증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방송 수신체계 디지털화의 주요 사업으로 북한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자동으로 녹화하고 저장하는 자동녹화시스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시스템, 내·외부 해킹 및 부정자료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 수집·저장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검색·편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 등이 있다.

정부는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고, 북한실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방송 및 언론기관 등의 방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북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라.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DB)

정부는 2010년 진행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북한 종합DB(① 북한 자료 ② 북한 인물 ③ 북한 산업·인문지리 정보 등 3개 분야)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1차년도인 2011년에는 북한 자료(북한 원문, 국내외 자료, 분석보고서 등)와 북한 인물 관련 통일부 내외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북한 정세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1년 3월 ~ 4월간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12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용역을 진행하였다. 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상시 및 정기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북한 산업·인문지리 정보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 및 일반국민용 DB로 구분해 정보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종합DB 구축이 완료되면 정부의 북한 내부 동향 및 정세변화에 대한 분석능력이 제고되고 체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고객별로 정보수요에 맞는 북한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 북한정세지수

정부는 2010년부터 북한정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예측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판단이 통합 적용된 지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의 북한정세지수 개발 연구는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등 각 분야별 북한 전문가와 지수 개발 방법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2011년에도 2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북한정세지수 연구개발단 이외에 별도의 북한 및 지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해외의 저명한 지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실성 있는 북한정세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2010년에는 '안정성 지수'와 '변화동향 지수'를 개발하여 지수값을 산출하였으며, 지수 개발과정에서 획득·생산하게 되는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에 개발된 북한정세지수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연구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향후 개발·보완 과정을 거쳐 북한정세지수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 정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가능해짐으로써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북한자료센터 운영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광화문에 설립한 북한자료센터는 2009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 관련 도서자료 7만여 권, 정기간행물 1만여 권, 파일자료 3000여 건, 시청각자료 8000여 건, 통일부 발간물 6700여 건 등 총 10만여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

(2011년 12월 말 기준 / 단위: 건)

종 류	단행본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비도서자료	계
자료 건수	17,884	4,322	5,223	1,185	28,614

북한자료센터는 대국민자료 서비스와 함께 통일·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 단체 회원들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 및 다양한 북한 문

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총 49회를 개최한 가운데 7500여 명이 참여하였고, 1989년 이후 2011년 12월 말까지 총 614회가 개최되어 총 6만 4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2200여 편의 북한영화를 소장하고 있고,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 북한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다가 최근에는 수시 상영체제로 바꾸어 언제든지 북한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2006년부터는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서울, 인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지역 통일관 등 8개 지방 도시로 북한 영화 상영지역을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북한 영화를 총 1,606회 상영하여 13만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1990년 이후 2011년 12월 말까지 관람인원은 총 9300여 회에 걸쳐 140만여 명에 이른다.

북한 영화상영뿐만 아니라 북한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통하여 그동안 서울·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북한 정보·자료의 접근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계기로 각급 학교 및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북한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든 북한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북한자료의 효율적·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장 자료에 대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시스템 구축, 원문DB 구축, 최신 검색엔진 도입, 모바일 웹 서비스 및 SMS 안내,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디지털 아카이브 도입, 전자도서관 및 My Library 서비스 개편 등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1년 한 해 동안 모두 382건의 자료를 e-Book으로 만들었으며, 2000년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총 2,498건의 북한관련 자료를 e-Book으로 제작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unibook.unikorea.go.kr)를 통해 조선중앙TV 프로그램 편성표 안내, 북한영화 소개, 북한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지 이용 고객도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연 52만 명에 이르렀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교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까지 국회도서관 등 18개 기관과 정보·자료 공유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



03

남북 교류협력

제1절 남북 경제협력

제2절 개성공단사업

제3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제4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제5절 남북 협력기금 관리·운영

제3장 남북 교류협력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의 지속적인 강경조치와 대남도발로 인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위축되어 온 상황에서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을 일으켰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도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보다 건전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5대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이하 '5.24 조치')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행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 간 교류 중단으로 인한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이하 '경협')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제1절 남북 경제협력

1. 남북교역

가. 개요

2010년 남북교역은 「5.24조치」의 영향으로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이 감소하였지만, 개성공단 교역의 증가에 힘입어 2009년의 16억 7,908만 달러 대비 13.9%가 증가한 총 19억 1,22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년 일반교역은 1억 1,786만 달러로 2009년의 2억 5,614만 달러 대비 54%가 감소하였고, 위탁가공교역은 3억 1,756만 달러로 2009년의 4억 971만 달러 대비 22.5%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개성공단 관련 교역은 14억 4,286만 달러로 2009년의 9억 4,055만 달러 대비 53.4%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개성공단도 「5.24조치」의 영향으로 신규투자 등이 제한되고 있지만,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지속된 북한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조치(「12.1조치」) 해제에 따른 반등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남북교역은 17억 1,385만 달러로 2010년 19억 1,225만 달러 대비 10.4% 감소하였다. 특히, 2011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5.24조치」의 영향으로 2010년 4억 3,542만 달러에서 393만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 개성공단 관련 교역은 섬유 및 전자전기제품 산업 등의 호황에 따라 2010년 14억 4,286만 달러 대비 17.7% 증가한 16억 9,76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남북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반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88	745	868	800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820	1,679	1,912	1,714

나. 유형별 교역현황

남북교역을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나눠 보면, 2010년도 상업적 거래는 18억 8,926만 달러로 2009년의 16억 4,211만 달러 대비 15.1% 증가하였고, 전체교역에서의 비중도 98.8%로 전년의 97.8%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상업적 거래 중 반입은 10억 4,369만 달러로 2009년 대비 11.7% 증가하였고, 반출도 8억 4,558만 달러로 2009년 대비 19.5% 증가하였다.

2010년 상업적 거래의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성공단 교역액은 14억 4,286만 달러로 2009년 대비 53.4% 증가하면서, 전체교역에서 75.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 교역액은 3억 1,756만 달러로 2009년 대비 22.5% 감소하였으며, 전체교역에서의 비중도 2009년 24.4%에서 2010년 16.6%로 감소하였다. 일반교역의 경우도 1억 1,786만 달러로 2009년 대비 54.0% 감소하여 전체교역에서의 비중이 2009년 15.3%에서 2010년 6.2%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2010년도 비상업적 거래는 2,298만 달러로 2009년의 3,696만 달러 대비 37.8% 감소하여 전체 교역에서 1.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의 영향으로 대북지원이 감소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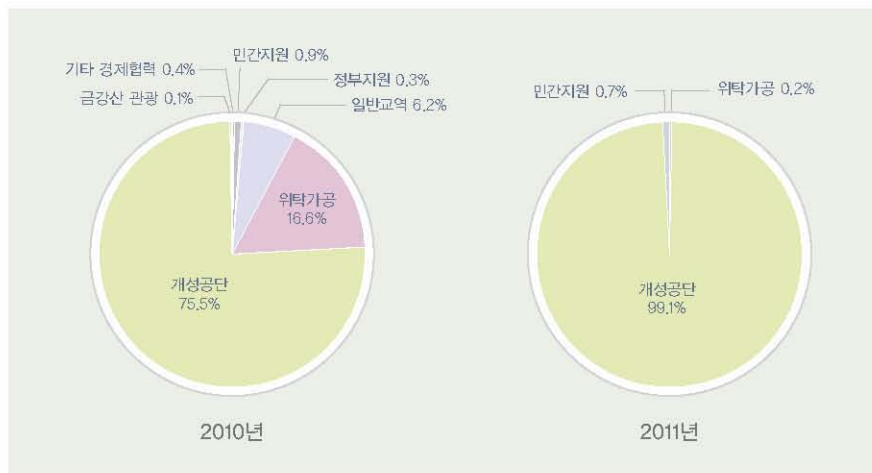
2011년 상업적 거래는 17억 233만 달러로, 전체교역의 99.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개성공단 교역액이 16억 9,763만 달러로 상업적 교역의 99.7%를

차지하고 있다. 상업적 거래 중 반입은 9억 1,288만 달러, 반출은 7억 8,945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비상업적 거래는 1,153만 달러로 전체 교역의 0.7%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2010년 및 2011년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구분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계	
	개성공단	위탁가공	일반교역	금강산관광	기타경제협력	대북지원	사회문화협력		
2010	교역액(천달러)	1,442,856	317,558	117,862	2,745	8,244	22,283	700	1,912,248
	구성비(%)	75.5	16.6	6.2	0.1	0.4	1.2	0.0	100.0
2011	교역액(천달러)	1,697,632	3,704	226	761	4	11,396	130	1,713,854
	구성비(%)	99.1	0.2	0.01	0.04	0.0003	0.7	0.01	100.0

2010년 및 2011년 거래 유형별 구성비



다. 교역구조

2010년 남북 간 교역 품목으로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섬유류, 전자·전자제품, 농림수산물, 기계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섬유류 교역액은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에 따라 총 8억 6,086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교역에서 45.0%를 차지하여 2009년의 6억 8,792만 달러(전체 교역의 41.0%)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 전자·전자제품류 교역액은 2009년 3억 3,112만 달러에서 4억 7,086만 달러로 증가하여 전체 교역에서 24.6%를 차지하였다. 반면 농림수산물 교역액은 1억 2,955만 달러로 2009년의 2억 3,771만 달러 대비 44.5% 감소하였고 전체교역에서의 비중도 6.8%(2009년 14.2%)로 하락하였다.

2011년 개성공단과 관련된 섬유류 교역액은 7억 192만 달러로 전체 교역에서 40.9%를 차지하고, 전자·전자제품류 교역액은 5억 2,797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30.8%를 기록하고 있다.

남북 교역 품목 구성

(단위 : 천 달러, %)

구분	섬유류	전자전 기제품	농림 수산물	기계류	생활 용품	철강금 속제품	화학공 업제품	광산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잡제품	계
2010	860,861 (45.0)	470,863 (42.2)	129,547 (6.8)	129,919 (7.1)	113,917 (6.0)	66,813 (3.5)	77,480 (4.1)	33,967 (1.8)	27,440 (1.4)	1,441 (0.1)	1,912,248 (100.0)
2011	706,345 (41.2)	528,111 (30.8)	33,073 (1.9)	122,429 (7.1)	124,517 (7.3)	37,243 (2.2)	92,384 (5.4)	31,118 (1.8)	36,778 (2.1)	1,856 (0.1)	1,713,854 (100.0)

한편, 남북 간 교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수는 2010년에는 920개사로, 2009년 1,319개사에 비해 30.3% 감소하였으며, 교역품목의 수도 795개 품목으로 2009년 822개 품목에 비해 27개 품목이 감소하였다. 2011

년 상업성 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는 모두 373개사로 대부분 개성공단 관련 업체이고, 교역품목의 수는 700개이다.

라. 「5.24조치」에 따른 기업애로 최소화

정부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5.24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우선, 남북교역 및 신규투자 불허 조치 이행을 위해 2010년 6월 14일에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남북 간 모든 물품의 이동을 승인대상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반출·반입에 따른 통관검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제3국산으로 위조하여 위장반입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물식품부·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와 합동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2011년 1월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제3국 위장반입 단속·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24조치」로 인해 우리 업체들이 불가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5.24조치」 발표 직후인 2010년 5월 25일부터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파악 및 안내 등을 위해 「남북교역 애로상담센터」를 개설하여 2010년 11월 말 까지 운영하였다. 「남북교역 애로상담센터」에서는 상담센터 개설 초기부터 일일 50건 이상의 상담·안내를 실시하였고, 2010년 5월 시점을 기준으로 교역 및 경험에 참여했던 모든 업체들을 대상으로 2차례 실태조사(2010년 5월 25일 ~ 6월 2일, 2010년 6월 17일 ~ 6월 21일)를 실시하였다.

제1·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10년 5월 24일 이전에 농수산물·광산물 교역 관련 선불금을 지급

했거나,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반출했던 경우 등에 대해서 반입·반출 유예조치를 실시하였다.

일반교역의 선불금 지급분 반입 유예조치는 2010년 6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허용하였으며, 위탁가공교역 관련 반입 유예조치는 2011년 2월 말까지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1억 2,578만 달러 상당의 일반교역 선불금 지급분과 위탁가공 완제품이 반입되었다.

이와 함께 위탁가공업체들이 2010년 5월 24일 이전에 위탁가공 계약을 맺고, 국내에 준비해 둔 원부자재에 대해서 2010년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출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위탁가공교역과 관련된 총 4,141만 달러 상당의 원부자재가 「5.24조치」 이후에 추가 반출되었다.

반출·반입 한시적 허용과 함께 정부는 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에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제도」를 신설하고, 연이율 2%의 저리정책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우선, 정부는 남북교역기업을 위하여 2010년 7월 2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600억 원의 대출재원을 마련하였다. 이어 7월 29일 교역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 8월 2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65개 기업에 298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다음으로 정부는 북한에 투자한 남북경협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0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70억 원을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으로 의결하였다. 10월 25일 남북경협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4개 기업에 38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2011년에도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5.24조치」 1년을 맞아 교역 및 경협업체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제3차 실태

조사(2011년 5월 13일 ~ 18일)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교역·경협업체들의 대북 투자자산 점검·보호를 위하여 개성공단·금강산 방문 및 제3국 접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였다. 또한 남북교역기업(2011년 8월 3일)과 남북경협기업(2011년 10월 4일)에 대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의 대출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 연장하는 상황유예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정부는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제24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2011년 12월 30일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에 대한 제2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남북협력기금 지원진」을 심의·의결하였다. 의결의 내용은 남북교역기업과 남북경협기업에 각 350억 원 및 50억 원 등 총 400억 원 범위 내에서 1차 특별대출 수혜기업에 추가적인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1차 특별대출 지원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마. 남북교역체계 개선 노력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한 이후 남북관계 상황에 대응해 나가면서 변화하는 남북교류협력 현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과 하위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특히 2009년에는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법률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

이고 질서 있는 교류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남북 간 금전 이동 시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금전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 및 이산가족이 재북가족에게 보내는 생계유지비, 의료비 등 인도적 성격의 소액송금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제3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법 밖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행위를 법 체제 내로 끌어들이 보호하고 투명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대북협력사업을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북투자를 법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 및 지원서비스도 강화하려고 한다. 현재 정부는 반출·반입 승인 등 법규상 규정된 행정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어 북측 상대방, 상품정보, 접촉채널 등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공신력 있는 지원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남북교류협력 지원기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 간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체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역사업 등록제를 신설하여 보다 정확한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기에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모두 등록을 허용하여, 등록제도 자체가 남북교역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은 유관부처 의견협의(5월 17일 ~ 8월 11일), 입법예고(5월 23일 ~ 6월 13일), 부패영향평가(5월 19일 ~ 6월 13일), 규제심사(8월 12일 ~ 9월 15일), 법제처 심사(9월 19일 ~ 10월 17

일), 차관회의(10월 20일), 국무회의(10월 25일)를 거쳐 2011년 12월 기준 국회에 제출(12월 28일)되어 있다.

2.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2008년 7월 12일부터 잠정 중단되었다. 관광중단의 원인이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무고한 관광객이 사망한 것이었던 만큼, 정부는 관광재개 조건으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강화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외면한 채 관광재개를 요구하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측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를 지속해 왔다.

북한은 2010년 4월 우리측 부동산에 대한 몰수·동결조치를 취한 데 이어 2011년 4월 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4월 29일에는 기존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금강산 관광지구를 내움에 대하여」(2002년 10월 23일)를 대체하여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내온다」라는 정령을 발표하고, 5월 31일에는 기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대체하여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하 '특구법')을 채택하는 등 그동안 우리측 사업자와의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 6월 17일에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대변인 통고 형식으로 남측 재산 처리문제 협의를 위해 모든 당사자가 방북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6월 29일 「민·관합동협의단」을 구성하

여 대북협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협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7월 13일 두 번째 협의에서 정부는 「특구법」에 대한 거부 및 우리 국민 재산권 보호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북한은 「특구법」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재산등록만을 요구했다.

2011년 7월 25일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당면문제 해결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방적인 재산정리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현대아산도 사업자 차원에서 8월 3차례 방북하여 독점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특구법」을 고수하며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금강산 관광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22일 북한은 우리측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또한 8월 말부터는 외국 언론사 및 관광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나선-금강산 시범크루즈관광’을 실시하여 부두시설, 온정각, 문화회관, 금강산호텔(북측 자산을 현대아산이 임차하여 리모델링 투자) 등 우리측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불법적인 금강산 국제관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사업자 간(현대아산-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 간 투자보장 합의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약속준수 원칙을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관광중단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금강산 관광 관련 영세 협력업체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14억 원을 대출하는 등 지원조치를 하였다.

제2절 개성공단사업

1. 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

가. 공단 운영 환경의 변화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대북 조치를 발표하였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생산활동은 지속 유지해 나가되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는 당분간 금지하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기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을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10년 5월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5월 27일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5월 30일에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구두 통지문」을 통해 “남측의 조치는 공단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측의 책임”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0년 5월 28일 북한 국방위원회의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는 북남협력과 교류의 상징이며 장군님의 은정과 사랑과 배려가 담겨진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5월 30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구두 통지문」을 전달할 당시에도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우리측 군사훈련을 핑계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정부는 급격한 상황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한의 연

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11월 24일부터 우리 국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잠정 차단하고 국내 귀환만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를 후인 11월 26일에는 급작스러운 출경중단 조치로 인해 개성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들의 난방·식사 등 생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가스·유류·식자재 공급을 위한 개성공단으로의 예외적인 출경을 허용하였다.

2010년 11월 29일부터는 남북 간 급격한 상황악화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선의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생산중단으로 인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수송 및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성공단 출경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12월 20일 한미합동으로 연평도에서 우리측의 해상사격 훈련이 있던 당일에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잠정적으로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차단하였다가 12월 21일 이후에는 다시 출경을 재개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발생하지 않고 남북관계 긴장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개성공단으로의 출경과 관련하여 연평도 포격 도발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인 환원 조치를 시행하였다.

2011년에 들어와서 북한은 1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시작으로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 등 우리측에 대한 대화공세를 시도하였다.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서도 1월 8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1월 12일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앞 통지문을 통해서도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1년 2월 7일에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서한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배포하면서, 개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지지·성원을 보내줄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1월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회담제외는 위장평화 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으로서,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나.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

정부의 「5.24조치」 초기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기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남북관계 상황 악화로 인해 개별 기업에 따라 기존의 주문생산 계약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기도 하였고, 잔여물량에 대한 납품이 취소되기도 하였으며, 제품 생산·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축소 조정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공장 현장의 관리인원 부족으로 생산라인 품질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피로누적, 안전사고 가능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생산활동 유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정부는 「5.24조치」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개성공단 체류인원 관리를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신중적으로 운용하였다. 「5.24조치」 직후 500여명 수준에서 관리되던 체류인원은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확대·관리하였으며,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축소 조정하였다가 2011년 4월부터 다시 점진적으로 확대 조정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일시적인 경영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2010년 6월에는 기존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원금 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2011년 2월에는 기존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중 2009년 11월에 시행했던 긴급 운영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호소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 입주기업과 생산 현황

가. 사업추진 경과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주)과 북한 간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사업자 간 그리고 당국 간 협의를 거쳐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개발이 착수되었고, 2007년에는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됨으로써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완공하였으며, 2010년 9월에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를 개원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11월과 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잠정적인 개성공단 출경 차단 조치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2011년 12월 말 기준 개성공단에는 123개 입주기업이 가동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 말 기준 북한 근로자는 총 4만 9,866명이고, 누적 총생산액은 15억 649만 달러이다.

2010년 7월 ~ 2011년 12월 주요추진 사항

일자	추진 내용
2010년 9월 1일	개성공단 탁아소 개원
2010년 9월 14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0년 11월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잠정 출경차단 조치 시행
2010년 12월 20일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당일 잠정 출경차단 조치 시행
2011년 04월 04일	개성공단 체류인원 점진적 확대조정 조치

나. 입주기업

2004년 6월 14일 시범단지에 15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8개사가 입주한 이래,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123개사가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업종분포는 섬유 72개사, 기계금속 23개사, 전기전자 13개사, 화학 9개사, 종이목재 3개사, 식품 2개사, 비금속광물 1개사 순이다.

기업 입주 추이

(단위 : 개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업체수	18	30	65	93	117	121	123

입주기업 생산업종 분포

(단위 : 개사)

구분	섬유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종이목재	식품	비금속광물	계
업체수	72	23	13	9	3	2	1	123

입주기업의 증가와 함께 2008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의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던 북한 근로자는 2009년부터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근로자는 2004년 11월 (주)리빙아트가 55명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북한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수	17,621	11,189	22,538	38,931	42,561	46,284	48,206

다. 생산 현황

2010년도 생산액은 3억 2천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총액은 2007년 1월 말 1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08년 11월 5억 달러, 2010년 9월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15억 달러를 달성하고 있다

2010년 1월에서 2011년 12월 말까지의 업종별 생산액은 섬유 3억 9,491만 달러, 화학 6,072만 달러, 기계금속 1억 125만 달러, 전기전자 1억 5,636만 달러, 식품 6,855만 달러, 종이목재 3,039만 달러, 기타 2,016만 달러였다.

업종별 생산액

(단위 : 천 달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섬유	6,780	27,793	85,543	132,179	152,050	179,235	215,988	799,568
화학	1,768	10,900	18,262	21,785	26,179	32,092	21,995	132,981
기계금속	5,250	20,853	41,947	49,250	37,312	48,637	52,140	255,389
전기전자	1,108	14,191	39,027	47,162	37,584	59,147	102,774	300,993
식품	-	-	-	976	2,003	2,668	4,187	9,834
종이목재	-	-	-	70	1,313	1,469	1,506	4,358
기타	-	-	-	-	34	75	1,941	2,050
계	14,906	73,737	184,779	251,422	256,475	323,323	401,848	1,506,490

3.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긴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개성공단의 기반시설을 건설하였다.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 공사는 2006년 6월에 완료되었으며, 2007년 10월까지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을 완공하였다. 2011년 6월 기준 용수공급용량 3만 톤/일, 폐수종말처리용량 1만 5천 톤/일, 폐기물매립용량 6만 1,000m³, 폐기물소각용량 12톤/일 등의 기반시설과 전력시설용량 10만 kW용량을 구축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용량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12월 2차 소각시설(50톤/일)의 건설을 추진하여 2011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북한에 의한 공단 통행차단 등 이후 남북관계 상황 변화로 착공이 유보된 상태이다.

통신시설은 KT가 2005년 12월 303회선을 개통한 이래 2009년 12월 600회선 등 3차례에 걸쳐 총 1,300회선을 확보하였다. 지속적인 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2010년 7월부터는 신규전화 개통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입주기업의 통신이용 불편 완화에 노력하였다. 향후 국내 환경과 동등한 수준의 통신 공급을 위해 1만 회선 규모의 통신센터 건립, 인터넷·이동전화 개통을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대시설로는 2007년 기술교육센터가 준공되었으며, 2009년에는 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연건평 2,181㎡, 소방차량 8대 규모의 소방서 건립을 착수하여 2010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에는 소방차 5대를 구입·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소방서 건물공사는 남북관계 상황으로 유보되어 있다. 2010년 9월에는 개성공단 탁아소를 개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응급의료병원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2007년 8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된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15층, 지하 1층, 연면적 3만 784㎡ 규모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공공기관의 업무시설, 은행 등의 편의시설, 공단 홍보관 및 제품전시·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입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기술교육센터



종합지원센터

4.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가. 법과 제도

개성공단에는 남북 간 합의서, 남측 법규, 북한 법규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남북한이 협력해 나가는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등이 체결되어 있으며,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기타 남북 간 합의서가 개성공단에 적용되고 있다.

2007년 5월에는 우리측 법규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지원을 비롯해 개성공

업지구에 대한 투자나 출입·체류하는 우리 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제도의 혜택을 개성공단 현지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법률 외에도 개성공단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북한 법규는 2002년 11월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등 16개의 하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행세칙의 제정은 남북이 협력하는 개성공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남북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간에는 10여 개의 시행세칙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2011년 12월 기준으로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등 50개의 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남북 간 합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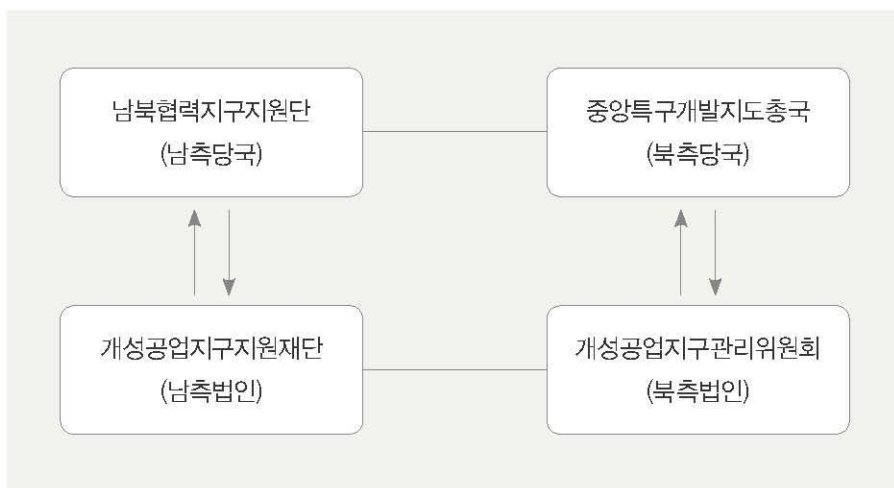
구분	남북간 합의서
남북경협 4대 합의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종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기타 관련 합의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나. 사업지원체계

개성공단사업은 우리측의 남북협력지구지원단과 북한당국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되고 있다.

2004년 10월 공단관리와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회가 공단 내에 설립되었으며, 5부 1팀(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공단 관리부, 출입사업부, 기술교육부, 범질서팀)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남측에서는 2007년 12월 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도·감독 및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설립되었으며, 1부 2팀 1사무소(기획법제부, 예산회계팀, 출입지원팀, 도라산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위원회는 북측법인이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겸임하고, 직원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파견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지원체계



5. 기업 투자 지원

가. 금융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초기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까지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약 478억 원, 본단지 1차 입주기업에 약 282억 원이 대출되었다. 이 제도는 2007년 12월부터 기술보증, 신용보증제도로 대출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 44개 사에 대해 290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8년 하반기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후발진출기업에게 60억 원 한도 내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1개 업체에 약 35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영애로를 덜어주고 생산 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8년 12월 1일 북한이 취한 통행제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기업의 경영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2009년 1월과 11월에 각각 6개월, 2010년 11월에 12개월 연장하였다.

한편, 북한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박탈 등에 따른 사업 중단조치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경험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북한에 의한 통행차단조치 등으로 개성공단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2008년 말 이후 가입업체가 늘어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146개의 개성공단 업체가 가입하였으며, 보험금액은 5,077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

년 7월 기업당 약정한도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 지급요건을 사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2009년에 시행한 경험보험 보장한도 확대, 지급요건 완화,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은 통행차단으로 인한 입주기업 생산 활동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2009년 8월에는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으로 주문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역보험제도(원부자재반출보험, 납품이행보증보험)를 도입함으로써 입주기업이 원부자재 거래 중단과 납품 중단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투자와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나. 판로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2007년 4월 2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 타결에 이어, 2011년 7월 1일에는 EU와의 FTA가 발효되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는 발효 1년 후에 설치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매, 시장 개척을 위하여 입주기업들의 전시회 및 판매전 참가를 지원하였다. 2010년 5월 「공동브랜드활용 제품전시상담회」 및 2011년 3월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전」

에 입주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하고, 2010년 10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9차 한상대회」 참가, 그리고 2010년 12월 국회 의원회관 「개성공단제품 전시판매전」 등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대 및 개성공단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에 개발한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PEACEWORKS'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하철 홍보, 홍보명함 제작, 전시판매전 행사장 내 배너 게시 등의 홍보활동도 추진하였다.

다. 보건의료 지원

개성공단 내 의료시설로는 「그린닥터스 개성협력병원」이 있다. 동 병원은 2007년 4월 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의 의료시설과 북한의 종합진료소를 하나의 건물에 통합하여 개원하였다. 이 협력병원에서는 남북한 진료소를 구분하여 각각 자기측 근로자를 진료하고 있으나, 수술실·방사선실·검사실·초음파실 등은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협력병원의 의료진은 우리측 5명과 순환진료진, 그리고 북한측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협력병원에서 진료 받은 북한 근로자는 총 7만 6,676명으로 산부인과 38.7%, 내과 31.9%, 외과 24.6% 순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단 내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 건립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린닥터스 진료 실적

(단위: 명)

구분	남측	북측	전체
2005년	5,362	807	6,169
2006년	5,834	1,398	7,232
2007년	7,647	35,766	43,413
2008년	7,751	61,973	69,724
2009년	5,803	72,205	78,008
2010년	4,115	40,275	44,390
2011년	4,707	36,200	40,907

라. 근로조건 개선

북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기본노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가급금과 장려금 및 상금으로 구성된다. 월 최저노임은 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합의로 결정하되 전년도 최저노임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노임은 50달러에서 시작하여 2007년 8월 1일 52.5달러, 2008년 8월 1일 55.125달러, 2009년 8월 1일 57.881달러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2010년 8월 1일부터는 60.775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규정」에 따라 노동보수 이외에 월 노임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1년 북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월평균 110달러 수준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말 기준 245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휴식시간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위시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개성공단에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였다. 이 센터는 22개의 강의·실습실 등을 갖추고 1일 약 700여 명에 대한 동시교육이 가능하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남측 근로자의 자기개발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기술교육 센터와 함께 2006년부터 추진된 개성공단 내 북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가 남북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2009년 10월 착공, 12월에 완공되었다. 탁아소 운영에 대한 남북 간 협의를 거쳐 2010년 9월 1일 개원·운영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탁아소

제3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로 인해 2010년 5월 이후 2011년 상반기까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기존 사회문화교류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한 최소한의 간접 접촉만 허용하였으나,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5.24조치」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하반기부터 종교·예술·학술 등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방북을 승인했다.

1. 종교계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8.15 경축사를 계기로 시작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종교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공문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교계는 순수 종교 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함으로써 2011년 하반기에는 남북 종교교류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정부는 종단별 형평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서 순수 종교교류 차원의 방북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하였다.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북한 「조선종교인협회」의 초청으로 2011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종교인 공동기도회를 개최하고 종교 교류 관련 협의를 하였다.

불교계의 경우 조계종에서 2011년 9월 3일부터 7일까지 보현사(묘향산)를 방문하여 「팔만대장경 판각 1천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고불법회(古佛法會)를 개최하였고, 10월 13일에는 신계사(금강산)에서 낙성 4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하였다. 천태종에서는 10월 31일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

천 910주기 열반 다례제'를 개최하였다.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1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남북 공동기도회를 개최하였으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카톨릭교협회와 '2012 장충성당 건립 25주년 행사' 및 장충성당 보수 등 종교교류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천도교에서도 2011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합동 시일식을 병행하였고,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11월 1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 민족종교 간 교류문제를 논의하였다.

2. 문화예술 및 학술 분야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2011년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 북한 「조선예술교류협회」 관계자와 남북합동교향악단의 서울-평양 교환 연주 및 북한 음악가 발굴·육성 사업에 관해 논의하였다.

학술분야에서는 「5.24조치」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사업」과 관련해서도 2011년 10월 28일 남북이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발굴터 복구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만월대 발굴 부지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토 및 배수로 정비, 축대 보강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질화 되어가고 있는 남북 언어를 수록한 단일 사전 편찬을 위해 2005년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5.24조치」 이후 남북이 각

각 사전 집필 및 새 어휘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1년 11월 18일에는 남북이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공동편찬회의 재개 및 편찬자료 교환 등을 논의하였다. 2011년 12월 말 기준 13만 개의 새 어휘 발굴, 38만 개의 1차 올림말을 선정하는 등 전체 공정의 약 63%를 진행하였다.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 방북 시 북한음악단 공연 지도



개성 만월대 피해지역 복구작업

3. 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2001년부터 남북 공동으로 진행된 6.15 공동행사의 경우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2009년부터 남북이 각각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교류가 중단됨에 따라 2011년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단독으로 6.15 기념행사를 추진하였다. 남측위는 6월 12일 보신각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 한마당」을 개최하였고, 6월 15일에는 임진각에서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간 대북교류는 장기적 차원의 교류 내실화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지자체 간 대북교류 사업의 정보공유 및 중복방지, 중앙과 지방 간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06년도부터 「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2010년 하반기 실무협의회는 11월 5일 16개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렸고, 2011년 실무협의회는 북중 접경지역 답사 및 북중관계 세미나 형식으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었다.

4. 김정일 위원장 사망 조문단 방북 및 조의문 발송

2011년 12월 19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발표 이후 정부는 12월 20일 답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 조문단은 보내지 않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한해 북한의 조문에 대한 답례 형식의 방북 조문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인 이희호 여사와 고 정몽헌 회장 유족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가족 및 수행원 포함 18명)이 2011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북하여 12월 26일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조문을 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간단체의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76개의 민간단체가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조의문을 발송하였다.

제4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1. 남북출입사무소 역할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을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된 '육로출입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남북 간에 철도·도로가 연결되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됨에 따라 남북출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03년 2월부터는 임시 출입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3년 11월 20일 남북출입사무소가 설치되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북한을 방문하는 출입인원에 대한 심사·검역 등의 통행관리, 출입과 관련한 민원사무 처리, 반출입 물자의 통관 지원, 열차 운행과 관련한 대북연락 및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의 최북단이자 남북 간 길목에서 통일부를 비롯하여 법무부·관세청·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문화재청 등의 출입심사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개성공단

과 금강산 등 북한 내 남북협력지구로의 출입과정에서 관문(關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남북 출입통행 절차

정부는 남북관계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 간의 특수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출입에 있어서도 동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왕래 시 출입경 개념을 도입하여 출국 대신 출경으로, 입국 대신 입경으로, 사무소 명칭도 출입국사무소 대신 출입사무소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남북왕래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도 외국으로 출국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여권을 소지하여 출국심사를 하지만,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북승인을 받고 여권 대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만 출입심사, 통관, 검역 등의 절차는 출입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출입국·출입경 차이

구분	출입국	출입경
차이점	·국가 간의 왕래, 국제거래 ·비자발급, 여권소지 ·출입국사무소 관할(법무부)	·특수관계인 남북 간 왕래, 민족내부거래 ·출입증, 체류증 발급 북한방문증명서 소지 ·남북출입사무소 관할(통일부)
공통점	·출입심사, 통관절차, 보건검역	

우리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하여 방북승인을 받고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개성

공단 방문 시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OK시스템(Online 출입신청시스템)에 방북 시 필요한 증명서인 출입증이나 체류증을 신청하고, 통행계획을 작성하여 출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입 신청 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에서 방북승인을 확인하고, 출경 당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한방문증명서를 제시하고 출경 심사를 받아 출경한다. 북한에서는 출입증 또는 체류증을 제시하여 출입심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방북승인을 신청할 때 방북안내교육과 출입증이나 체류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차량을 이용하여 방북하려면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후 통행계획 제출 전에 차량운행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자동차 운행신청 시 「전자운행증(RFID카드)」이 발급되어 출입경시 전자식 자동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출입경 차량 전면 「전자운행증(RFID카드)」을 부착하면 차량심사대를 신속·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다.

북한(개성공단)방문신청 개요



3. 출입시설 및 출입·운송 현황

가. 출입시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이후,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출입시설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남북 간 인원·차량·물자(화물) 왕래 시 수반되는 통행심사·통관검사·검역검사 등 출·입경업무 전반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확립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개성·평양 등 서부지역 출입장소로 경기도 문산에 경의선 도로와 철도출입사무소를, 금강산 등 동부지역 출입장소로 강원도 고성에 동해선 도로와 철도출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의선출입사무소의 철도·도로출입시설(도라산역 포함) 및 동해선출입사무소의 철도·도로출입시설(제진역 포함)은 2006년 준공하였으며, 경의선의 도라산물류센터는 2007년 12월, 동해선 물류센터는 2010년 9월 준공하였다. 현재 남북출입사무소는 경의선출입사무소와 동해선출입사무소를 포함한 총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67만 5,988㎡이며, 건물은 51동 8만 6,424㎡이다.

경기도 문산에 소재하는 경의선출입사무소는 차량·인원의 출입통행을 위해 도로출입시설, 남북 열차운행을 위한 철도출입시설, 남북 간 이동하는 물자(화물)의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검역 및 북한의 부족한 물류인프라를 보완하고자 도라산물류센터를 건설하였으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은 44만 2,015㎡이고, 건물은 39동 5만 3,623㎡이다.

강원도 고성에 소재하는 동해선출입사무소에는 도로출입시설, 철도출입시설 및 물류센터를 건설하였으며, 부지면적은 23만 3,973㎡, 건물은 12동 3만 2,801㎡이다.

나. 육로를 통한 출입통행 현황

2010년도 남북 출입통행은 정부의 「5.24조치」와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정부의 체류인원 축소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도 경의선 육로로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감소에 따라 출퇴근 인원이 증가하여 12만 6,107명의 인원과 8만 1,414대의 차량이 통행하였다. 동해선 육로는 북한의 자산동결·몰수·관리인원 추방 조치 등으로 통행인원 3,051명, 통행차량 1,027대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11년도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체류인원의 증가로 출퇴근 인원이 감소하여 통행인원과 차량이 전년대보다 다소 감소한 11만 5,249명의 인원과 8만 1,414대의 차량이 통행하였다. 동해선 육로는 8월 23일 금강산 지역 관리인원 16명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전년대보다 감소한 436명의 인원과 198대의 차량이 통행하였다.

경의선의 경우,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가 남북출입사무소와 개성에서 개최되어 출입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9월 30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방문, 12월 26일 ~ 27일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민간조문단 일행이 출입하였다. 또한 북한의 취약계층·영유아 지원 등을 위한 인도지원 단체도 통행하였다. 동해선은 금강산 관광 13주년 기념 행사, 동계시설물 점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특별한 경우 소규모로 출입이 이루어졌다.

경의선 및 동해선 출경 인원·차량 현황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총계
경의선 육로	인원(명)	3,643	24,164	66,772	84,100	144,971	263,258	115,026	126,107	115,249	943,290
	차량 (대)	1,249	15,314	38,868	47,352	71,857	91,309	72,929	83,308	81,414	503,600
동해선 육로	인원(명)	39,395	296,924	335,713	266,541	384,911	223,972	3,682	3,051	436	1,554,625
	차량 (대)	3,143	15,585	19,852	14,724	20,035	12,456	1,323	1,027	198	88,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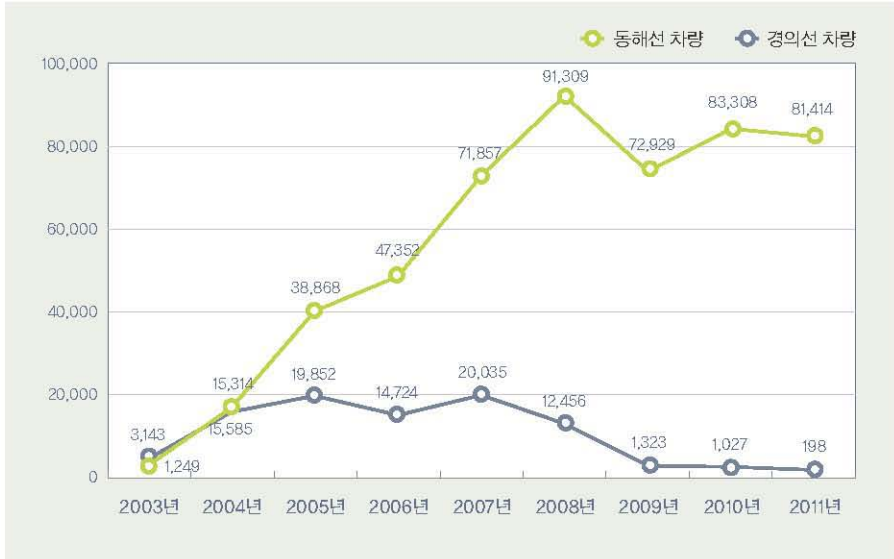
출경인원 변동 추세

(단위 : 명)



출경차량 변동 추세

(단위: 대)



또한 남북출입사무소는 민간인 통제선 안에 위치하여 통일안보 현장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10년도에는 3,834명의 방문객이 내방하였고, 2011년도에는 6,062명이 방문하였으며 방문객은 증가추세에 있다.

다. 남북화물열차 운행

2005년 12월 말 경의선 구간(문산~개성, 27.3km)과 동해선 구간(제진~금강산, 25.5km)의 남북 간 연결철도 궤도 부설공사가 완료되어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2007년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남북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우리측 도라산역과 북한측 판문역 간에 남북 화물열차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회 정기적(오전 9시에 도라산

역 출발, 오후 2시에 북한 판문역 출발)으로 운행하였다.

당초에는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의 차량을 편성해 운행하였으나, 2008년 2월 1일부터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화물이 있는 경우에만 화차를 운행하고,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차와 차장차만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화물열차는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 이후 운행이 중단되었다.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화물열차 운행기간 중 총 222회(왕복 444회)에 걸쳐 17회 31량 318톤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이 중 남측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컨테이너는 24량 235톤이고, 북한에서 남측으로 반입된 컨테이너는 7량 75톤으로 주로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물자를 수송하였다.

라. 해상운송

정부의 「5.24조치」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금지되고, 북한측도 우리 선박의 북한 해역 운항을 금지시키면서, 2010년 남북 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1,432회로 2009년 대비 44.4%가 감소하였다. 2010년 6월부터는 우리 교역업체의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유예기간(2010년 6월 ~ 2011년 2월) 동안 교역물자 반출입을 허용하면서, 이들 물자수송을 위한 제3국 선박의 운항이 이루어졌다. 주요 수송물자는 북한산 농림수산물과 의류 임가공 제품이었으며, 2010년 6월 ~ 12월까지 총 174회 운항하였다.

2011년은 남북교역 중단 등으로 선박은 전년 동기 1,432회보다 90.1% 감소한 142회 운항하였으며, 의류임가공 제품의 잔량과 대북 지원물자 수송을 위해 운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3국직선이 우리 항구를 단순 경유하여 남북 간을 운항하였다.

남북 간 선박운항 현황

(단위 : 회)

연도	'94~'04	'05	'06	'07	'08	'09	'10	'11
횟수(편도)	13,131	4,497	8,401	11,891	7,435	2,577	1,432	142

마. 항공운송

「5.24조치」 등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적항공기 운항은 없었다. 다만, 2011년 4월 초에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일행이 북한 평양을 경유하여 남한을 방문하였고, 4월 말에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포함한 엘더스 그룹(The Elder's Group)이 북한 평양을 경유하여 남한을 방문하면서, 2011년에는 제3국적 항공기가 남북 사이에 2회 운항하였다.

남북 간 항공기운항 현황

(단위 : 회)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횟수(편도)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	-	2

제5절 남북 협력기금 관리·운영

1. 남북협력기금 수입

남북협력기금 수입

(단위: 억 원)

구 분	2010년		2011년	
	계 획	수 입	계 획	수 입
정부출연금	3,500	-	3,500	-
공공자금 예수금	9,629	8,750	1,111	1,044
여유자금 회수	8,531	10,042	8,449	9,336
자체수입	617	741	709	570
합 계	22,279	19,533	13,768	10,950

2010년 남북협력기금 수입계획은 총 2조 2,279억 원으로, 2010년 말 기준 1조 9,533억 원이 수납되었다. 정부출연금은 3,5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009년부터 정부출연금 배정방식이 수시배정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10년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이 낮음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정부출연금 3,500억 원은 배정되지 않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9,629억 원(남북협력 679억 원, 경수로 8,950억 원)으로 계획하였고, 이 중 8,750억 원(경수로)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 회수는 8,531억 원(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8,441억 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9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조 42억 원(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7,833억 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2,209억 원)이 수납되었다. 자체수입은 617억 원으로 계획하였고, 741억 원이 수납되었다.

2011년 수입계획은 총 1조 3,768억 원으로, 2011년 말 기준 1조 950억 원이 수납되었다. 2011년도에도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이 낮아 당초 계획된 정부출연금 3,500억 원은 배정되지 않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1,111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44억 원이 수납되었다. 여유자금 회수는 8,449억 원(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914억 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2,535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9,336억 원(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030억 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4,306억 원)이 수납되었다. 그 외 자체수입으로는 709억 원을 계획하였고, 570억 원이 수납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조성

(단위 : 억 원)



2. 남북협력기금 지출

남북협력기금 지출

(단위: 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계 획	지 출	계 획	지 출	
사업비	사회문화 교류	88	21	88	26
	인도적 문제해결	7,159	212	6,139	103
	남북 경제협력	2,836	497	2,996	179
	개성공단	1,106	133	930	119
	소 계	11,189	863	10,153	427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9,671	9,305	1,271	1,086	
여유자금 운용	1,385	9,336	2,288	9,410	
기금운영비	34	29	56	27	
합 계	22,279	19,533	13,768	10,950	

2010년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은 사업비 1조 1,189억 원, 공공자금관리 기금 원리금 상환 9,671억 원(남북협력 683억 원, 경수로 8,988억 원), 여유 자금 운용 1,385억 원, 기금운영비 34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2010년 말 기준 사업비는 1조 1,189억 원 중 863억 원이 집행(사업비 대비 집행률 7.7%) 되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으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19억 원, 개성 만 월대 발굴사업 2억 원 등 21억 원이 집행되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남측에서의 집필, 새 어휘 조사 등에 남북협력기금을 계속 지원하여 전체 공정의 약 56%가 진행되었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사업은 '건덕전 지구(약 3,300㎡)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다.

인도적 문제해결 지원은 2010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15억 원,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 4억 원, 북한 신종플루 치료제 등 당국차원의 대북지원 171억 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21억 원 등 총 212억 원이 집행되었다.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된 상황에서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 간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은 무상지원 81억 원, 교역·경협자금대출 416억 원 등 총 497억 원이 집행되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및 통일재원 공론화를 제안한 이후 통일준비에 대한 여론과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5.24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제도」를 신설하여 대출을 시행하고,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였다.

개성공단 지원사업에는 개성공단 기반조성 96억 원, 개성공단 운영대출 37억 원 등 총 133억 원이 집행되었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 등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산활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을 시행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생산활동 유지 및 기업의 경영애로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사업비 이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9,305억 원(남북협력 557억 원, 경수로 8,748억 원), 여유자금 운용 9,336억 원, 기금관리비 29억 원 등이 집행되었다.

2011년 지출계획은 사업비 1조 153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

환 1,271억 원(남북협력 38억 원, 경수로 1,233억 원), 여유자금 운용 2,288억 원, 기금관리비 56억 원이 편성되었다. 2011년 말 기준 사업비는 1조 153억 원 중 427억 원이 집행(사업비 대비 집행률 4.2%)되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으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23억 원,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2억 원 등 26억 원이 집행되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전체 공정의 약 63%를 진행하는 등 남북의 언어 및 사회현실을 서로 이해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종교인평화회의(KCRP) 방북 지원 등 비정치적인 학술종교문화를 진행하는 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인도적 문제해결 지원은 대북 수해피해 지원 36억 원,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 65억 원 등에 103억 원이 집행되었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북한 수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5.24조치」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사업도 재개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백신·의약품·영양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른 것이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은 무상지원 60억 원, 교역·경협자금대출 75억 원 등 총 179억 원이 집행되었다.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2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지원을 결정하였고,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조치들은 경협기업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중장기적 교류협력 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성공단 지원사업에는 개성공단 기반조성 64억 원, 개성공단 운영대출

55억 원 등 총 11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 개성공단 운영을 위해 기금이 집행되었다.

이러한 사업비 이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1,086억 원(남북협력 34억 원, 경수로 1,052억 원), 여유자금 운용 9,410억 원, 기금관리비 27억 원 등이 집행되었다.

3. 통일재원 법제화 추진

1990년에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고 20여 년이 흘렀으며, 기본적인 법률의 골격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분야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상당히 발전되었고,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2005년 12월, 2010년 9월) 등을 통해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왔다. 남북관계의 가변성과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 하위규정인 시행령 개정 방식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에 부응해 왔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황에 대응하였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의 기능 및 역할 확대에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었다.

2010년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통일비용과 통일재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도 통일재원 법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김충환 의원 대표 발의안, 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안, 송민순 의원 대표 발의안), 「통일세법」 제정안(김충환 의원 대표 발의안) 등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이 통일 이후 남북협력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평을 넓혀나가고, 통일재원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정부입장을 반영하기로 정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일재원 법제화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통일계정을 신설하고, 민간출연금·정부출연남북협력계정 불용액 등을 통일계정에 적립한다는 것이다. 남북협력계정은 통일 이전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고, 통일계정은 통일 이후 남북 간 통합과 사회 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듯 통일재원 법제화 추진은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세대의 통일비용 분담을 통해 미래 통일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출연금과 같은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를 통해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그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

가족의 상.



봉을 축하합니다

04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 제1절 남북 이산가족 문제
-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 제3절 인도적 지원
- 제4절 북한인권



제4장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간 인도적 문제는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등 분단 이재민의 문제 및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남북한 주민 모두의 분단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1년에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되었다. 또한 4월부터 11월까지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현행화하는 등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인프라를 정비하였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에서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측의 입장불변으로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내 전후납북자에 대한 지원과 전시납북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 등은 꾸준히 전개되었다. 전후납북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 지원이 완료되었고, 전시 민간인 납북자 272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범정부적인 납북자 대책기구로서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민간 차원의 인도

적 지원을 2011년 3월 말부터 재개하여,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16차 유엔인권이사회 및 제66차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제1절 남북 이산가족 문제

1. 당국차원

남북 간 인도적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다. 특히,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과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8차례의 상봉행사와 7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한 총 4,321가족, 2만 1,734명이 상봉하였다. 2010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3차례 개최된 적십자실무접촉의 합의에 따라,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북측 97가족(110명)이 재남가족 436명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남측 94가족(137명)이 재북가족 203명을 상봉하였다.

당국차원의 교류 현황

(2000년~2011년)

구분	남	북	계
대면상봉(18회)	1,874가족(11,800명)	1,890가족(6,186명)	3,764가족(17,986명)
화상상봉(7회)	279가족(2,257명)	278가족(1,491명)	557가족(3,748명)
계	2,153가족(14,057명)	2,168가족(7,677명)	4,321가족(21,734명)

이산가족 상봉행사와는 별도로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다. 2010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상시상봉,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한측에 촉구했다. 남과 북은 차기 남북적십자회담을 2010년 11월 25일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회담 자체가 무산되었다.

2008년 7월 12일 완공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북한측이 2010년 4월 27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몰수조치된 상태이다. 정부는 계기시마다 북한측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2. 민간차원

정부는 당국차원의 교류와 함께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민간교류 경비지원 금액을 생사확인 100만 원(기존 80만 원),

상봉 300만 원(기존 180만 원), 교류지속 50만 원(기존 4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산가족 민간교류 성사 건수는 2008년 314건, 2009년 119건, 2010년 38건, 2011년 24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민간교류의 감소 추세는 이산가족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교류 절차 및 경비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류주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건수

(단위: 건)

구분	'90~'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총계
생사확인	2,725	388	209	276	69	74	50	35	16	3	3,845
서신교환	7,651	961	776	843	449	413	228	61	15	18	11,415
상봉	994	283	188	95	54	55	36	23	7	3	1,738

3. 국내차원

정부는 2008년부터 고령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속초, 여수, 경주 등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지역별 100여 명씩 총 300여 명의 고령 이산가족을 초청하여 1박 2일간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하였다. 2010년 9월 13일에는 KBS의 협조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251명을 초청하여 「추석 계기 KBS 가요무대」를 방청하였다. 2011년에는 지역별로 100명 내외의 이산가족을 6차례 초청하여 정책설명 및 위로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추석과 연말 등 계기시마다 소외계층 고

령 이산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3월에 제정되고,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법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생존자 전원인 8만 1,800명을 대상으로 전면적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상의 기본사항인 주소 및 연락처,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이산 시기 및 사유 등에 대한 확인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 및 상봉정례화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구축하고, 이산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록자료에 대한 현행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될 예정이다.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록자 12만 8,668명 중 4만 9,776명이 사망하였으며, 생존자는 7만 8,892명이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록현황

(2011년 12월 말 기준)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50세	계
인원수(명)	6,538	30,986	25,613	9,421	6,334	78,892
신청비율(%)	8.3	39.3	32.5	11.9	8.0	100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1. 개관

6.25전쟁 휴전 이후 UN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000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 실종된 국군의 상당수는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탈북 귀환 이후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 귀환하였다.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북자는 크게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 등을 고려하면 8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한 피납자, 즉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이다. 이 중 3,310명은 납북 후 1년 이내에 귀환하였으며, 8명은 2000년 이후 탈북 귀환하였다. 2011년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는 517명으로 추정된다.

전후 납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어선원	KAL	군·경	기타		계
				국내	해외	
피납자	3,729	50	30	6	20	3,835
귀환자	3,271	39	-	-	8	3,318
미귀환자	458	11	30	6	12	517

2. 남북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의 경우 이미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종료된 문제이고, 납북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북한측과 합의하여 일부 인원이 상봉행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것으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범주 내의 접근이 아닌 송환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200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한측에 대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이에 대한 논의를 회피함에 따라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2009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과거와 같이 국군포로 10명, 납북자 12명의 생사확인을 의뢰하여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1명과 납북자 2명은 남측 가족과 상봉하였다.

상봉행사 이후 2009년 10월 16일 개성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도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0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태도전환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10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국군포로 10명, 납북자 16명의 생사확인 의뢰에 대해 국군포로 1명의 사망확인을 하는 데 그쳤다.

국군포로·납북자 상봉현황

(2010년 ~ 2011년 / 단위: 명)

구분	생사확인 대상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기타	상봉	상봉가족수
전후납북자	120	17	22	81	16	18가족(81명)
국군포로	126	19	14	93	17	26가족(119명)
합계	246	36	36	174	33	44가족(200명)

3.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후 발생한 납북자와 가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탈북귀환 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 국가공권력으로 인한 사망과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에서는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 피해위로금, 보상금 등의 지급 및 귀환 납북자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납북자 문제 실태조사, 납북자가족의 권리침해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이 있으며, 대학교수, 법조인, 남북관계 전문가와 당연직 위원인 정부 고위공무원, 납북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와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위원회 출범 이후 납북피해자 신청 마감일(2010년 10월 27일)까지 납북자가족 피해위로금 428건, 귀환납북자 정착금 8건, 남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보상금 12건 등 총 448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위원회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40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납북피해자 425건 145억 1천만 원의 지급결정을 심의·의결하였다. 납북자가족 피해위로금은 416가족에게 129억 1천 4백만 원(평균 3천 1백만여 원), 귀환 납북자 정착금은 8명에게 15억 2천 8백만 원(평균 1억 9천 1백만 원), 남북과 관련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자 보상금은 1명에게 6천 8백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남북피해자 신청서 접수현황

(2010년 10월 27일 기준 / 단위: 건)

어부	KAL기	피해위로금				정착금 주거지원금	보상금	합계
		군·경	기타		소계			
			국내	해외				
377	11	20	8	12	428	8	12	448

남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2011년 9월 말 기준)

구분	신청(건)	지급결정(건)	지급액(천 원)
피해위로금	428	416	12,914,573
정착금·주거지원금	8	8	1,528,320
보상금	12	1	67,604
합계	448	425	14,510,497

2010년 위원회에서는 남북자가족의 피해위로금 신청기한(법 시행 후 3년 이내)이 2010년 10월 27일인 점을 고려, 남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미신청 남북자가족에게 신청을 권유하는 안내서한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인터넷카페 등에 남북피해자 신청 절차 및 서식을 게재하였으며, 남북자가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케이블 TV,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남북피해자 신청 안내 광고를 하였다. 또한 고령 남북자가족의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남북피해자 신청을 접수하는 등 해당가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2010년 7월 ~ 2011년 9월 말)

일자	위원회	위원회 결과
2010.8.26	제30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건 1,000만 원
2010.9.30	제31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5건 1억 7,900만 원
2010.10.28	제32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5건 1억 7,200만 원
2010.11.25	제33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5건 1억 200만 원
2010.12.23	제34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7건 2억 100만 원
2011.2.24	제35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6건 2억 2,100만 원
2011.3.31	제36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5건 1억 3,000만 원
2011.4.28	제37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3건 7,700만 원 전후 남북피해자 백서 발간위원회 구성
2011.6.2	제38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5건 1억 8,600만 원
2011.7.7	제39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4건 1억 700만 원
2011.9.29	제40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건 3,500만 원

또한 남북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연말, 연시, 명절 등 계기시마다 생활이 어려운 남북자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들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하였으며 생필품과 소정의 격려금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거주 남북자가족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사랑담는 사람들」과 함께 동해시 동인병원에서 현지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밖에 통일부장관은 남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귀환 남북자의 국내 정착을 격려했다.

2011년 4월 28일 제37차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 실적과 남북피해자 실태조사 자료를 정리하여 『전후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백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백서 발간위원회는 총 5회의 회의를 통해 남북피해자 현황과 위원회 운영 실적, 성과 평가 등을 수록

한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백서』를 발간, 배포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1년 12월 26일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여, 범정부적인 납북자 대책기구로서 「납북자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경찰청 관계 공무원 및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납북자 문제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안 업무의 처리방향과 해결방안 결정 등의 업무를 심의한다.

4. 6.25전쟁 중 납북자 문제

6.25전쟁 중 북한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지식인들을 계획적으로 납치 북송하고, 부역 동원, 의용군 충원을 위해 대규모의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강제동원한 후 퇴각하면서 이들을 납북하였다. 전시납북자 규모는 조사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 발간 납북자 명부에 따르면 전시납북자 규모는 8만~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발간 납북자 명부

연번	구분	작성주체	시기	인원	존재여부
1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년	2,438명	보존
2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2년	82,959명	보존
3	6·25사변 피랍치자	내무부 치안국	1952년	(126,325명)	유실
4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3년	(84,532명)	유실
5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년	17,940명	보존
6	실향사민 명부	국방부	1963년	11,700명	1권 보존
					2권 유실

정부는 6.25전쟁 초기부터 1963년까지 납북자 명부를 수차례 작성하는 등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동서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 간 대결이 심화되어 생사확인 및 송환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정부와 납북자 가족들의 노력이 중단되었다.

2000년 납북자가족단체가 재설립되어 정부 및 정치권에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 촉구하였고, 이에 16대와 17대 국회에서 전시납북자 진상 규명과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 4건이 발의되었으나 임기종료로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 김무성 의원과 박선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0년 3월 26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10년 9월 27일 시행되었다.

6.25납북진상규명법률 주요내용

-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구성·운영
- 6.25납북피해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 납북여부 심사·결정
- 6.25납북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 시도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보고서 작성 대통령·국회 보고 후 공표
-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
- 국가적 책무로서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등

정부는 법률 시행에 따라 2010년 9월 27일 1국 2과 20명으로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2010년 12월 13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위원 5명을 비롯해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한 남북가족대표 3명과 전문가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정부 차원에서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규칙, 남북피해 사실조사 및 지원규칙, 남북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위원장 통일부차관)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6.25남북피해신고 접수, 사실조사 등을 담당할 「시도실무위원회」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9~15명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관할 시·군·구에 6.25남북피해신고 접수처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2010년 12월 남북피해신고 접수담당자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2011년 1월 3일부터 전국 시·군·구 및 재외공관을 통해 6.25남북피해 신고접수를 시작하였다. 2011년 12월 말 기준 국내외에서 남북피해신고 1,034건이 접수되었다.

2011년 8월 제3차 회의에서 전시 민간인 납북자로 55명을 최초 인정한 것에 이어, 12월 제4차 회의에서 217명을 추가 인정하여, 현재까지 총 272명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2011년 남북피해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접수건수	125	74	57	81	41	42	72	88	74	73	119	188	1,034

한편, 6.25 남북피해신고를 촉진하고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라디오 및 버스 광고,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현수막 설치, 신고안내 대표전화(1661-6250) 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피해신고안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해외 1,700여 개 한인단체 및 한인언론 대상으로 남북피해 신고안내 등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미주지역(뉴욕, LA, 시카고, 벤쿠버, 워싱턴, 애틀랜타) 교민을 대상으로 남북피해신고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을 크게 두 갈래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6.25전쟁 중 남북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최대한 발굴 조사하여 남북피해 규모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이다. 현재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경찰청, 시도 및 시군구, 통계청, 국회도서관 등 국내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등이 소장하고 있는 6.25남북관련 자료도 발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발굴한 남북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기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및 납북자 통합 DB 개발을 2011년 12월 완료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피해자로부터 남북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신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남북피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남북 관련 자료발굴 조사와 남북피해신고 접수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년 6개월 내에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할 예정이다.

제3절 인도적 지원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집행투명성 제고, 민간 대북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 대북지원 분배투명성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되었다. 더욱이 북한의 수해에 대한 당국 차원의 긴급 구호물자 지원이 진행 중이던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일시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입장에 의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품목 가운데 전용 우려가 적은 물자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2011년 3월 말부터 재개하였다.

1. 당국차원의 지원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광객 피격 및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쌀·비료 지원 등 당국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12월 초부터 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내 신종

플루 발생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2009년 12월 18일 타미플루 40만 명분·리렌자 10만 명분, 2010년 2월 23일에는 손소독제 20만 리터를 각각 북한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7월 중순부터 북한에 내린 폭우로 특히 신의주 지역 및 황해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자, 8월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통해 수해피해 지원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9월 4일 구호물자 수용의사를 밝혔고, 이에 정부는 쌀 5천 톤·컵라면 300만 개·시멘트 1만 톤 등의 수해피해 지원 물자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10년 9월 29일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을 거친 후, 10월 25일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인천항을 출발하여 단동항을 거쳐 신의주 지역에 지원물자를 전달하였다.

정부는 신의주 수해피해 지원과 관련, 긴급구호성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쌀의 경우 5kg 단위 소포장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포장지에 ‘대한민국기증’, ‘대한적십자사’ 등 제공자를 표시하였다. 또한 신의주 지역에 직접 전달하여 인도인수증을 접수하고 인도 후 북한에 분배내역서 통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시멘트 6천여 톤은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신의주 수해피해 지원

2011년 7월에도 북한 황해도 등 지역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는 북한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긴급 수해지원을 결정하고 8월 22일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였다.

긴급구호물품은 영유아용 영양식 140만 개, 과자 30만 개, 초코파이 192만 개, 라면 160만 개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정부는 2010년 8월부터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지원물자 수용 의사표시가 없어 더 이상 수해지원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0월 4일 행정적 절차의 종결을 발표하였다.

2.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지원은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교류 방식의 하나로서 꾸준히 지속되었다. 정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2000년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우리 정부의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및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무력 공격으로 인하여 201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의 신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 지원이 결정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져 2010년도에 총 38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2010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사업

(단위 : 백만 원)

	단체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1차 (2009.8.3 의결)	남북나눔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	486	426
	등대복지회	북한 장애인 어린이 종합복지 지원	630	630
	민족사랑나눔	영양개선 및 복지 지원, 보건의로 지원	208	168
	우리민족서로돕기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 의료 지원	540	540
	유진벨	결핵 퇴치 및 결핵병원 지원	630	254
	원불교	취약계층 지원	101	101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어린이 영양제 생산 원료 지원	198	189
	한국건강관리협회	어린이보건 지원	69	62
	한국제이티에스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 의료 지원	558	171
2차 (2009.10.22 의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평양어린이병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지원	102	101
	그린닥터스	개성 협력병원을 통한 대북의료 지원	66	66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북한 어린이 보건의로 및 영양개선	291	281
	나눔인터내셔널	북한주민 질병퇴치	75	75
	어린이재단	북한어린이 건강 증진	302	204
	장미회	북한주민 간질치료	134	134
정책사업 (2009.12.28 의결)	우리민족서로돕기 한국제이티에스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재단	어린이 영양식, 생활용품 등 지원 기초 의약품 지원	3,500	0
	겨레의 숲	신림병해충 방제, 조림사업 모범 지원 등	1,980	421
	한국국제보건의로재단	기초의약품 생산 지원 및 GMP 교육사업	500	0
통일부 사업관리비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207	17
합 계		15개 사업	10,577	3,840

한편,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5.24조치」 이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은 사업목적, 수혜대상, 분배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자 반출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11년 3월 말부터 지원을 재개하였다. 2010년 「5.24조치」 이후 2011년 12월 말까지 민간차원에서 총 187건, 219억 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1996년 이후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해왔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잇따른 북한의 무력공격에 따른 「5.24조치」 유지로 국제기구를 통한 신규 지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12월 5일, 2003년부터 계속되어 온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미화 565만 달러(65억 3,200만 원)를 분배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백신 및 기초의약품 지원과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146만여 명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내역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식량지원)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혼합곡물 3,409톤	200만 불 (16억 원)
1997	혼합곡물 18,241톤, 옥수수 5만 톤, 분유 300톤	2,053만 불 (185억 원)
1998	옥수수 3만 톤, 밀가루 1만 톤	1,100만 불 (154억 원)
2001	옥수수 10만 톤	1,725만 불 (223억 원)
2002	옥수수 10만 톤	1,739만 불 (235억 원)
2003	옥수수 10만 톤	1,619만 불 (191억 원)
2004	옥수수 10만 톤	2,334만 불 (240억 원)
2007	옥수수 1.2만 톤, 콩 1.2만 톤, 밀 5천 톤, 밀가루 2천 톤, 분유 1천 톤	2,000만 불 (190억 원)
계	543,950톤	1억 2,770만 불 (1,434억 원)

세계보건기구(WHO) (말라리아, 영유아, 긴급 의료지원)

연도	내역	지원액
1997	의료기자재 등	70만 불 (6.3억 원)
2001	말라리아 방역	46만 불 (6억 원)
2002	말라리아 방역	59만 불 (8억 원)
2003	말라리아 방역	66만 불 (8억 원)
2004	말라리아 방역, 용전 구호세트	87만 불 (10억 원)
2005	말라리아 방역	81만 불 (9억 원)
2006	말라리아 방역(100만 불), 영유아지원(1,067만 불)	1,167만 불 (116억 원)
2007	말라리아 방역(138만 불), 영유아지원(938만 불), 홍역(105만 불) 지원	1,181만 불 (111.8억 원)
2008	말라리아 방역(120만 불), 영유아지원(1,027만 불)	1,147만 불 (148억 원)
2009	말라리아 방역(107만 불), 영유아지원(1,311만 불)	1,418만 불 (166.5억 원)
계		5,322만 불 (589.6억 원)

유엔아동기금(UNICEF) (취약계층, 영유아)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분유 203톤	100만 불 (8억 원)
1997	ORS공장, 분유781톤	394만 불 (35.4억 원)
2003	취약계층 지원	50만 불 (6억 원)
2004	취약계층 지원	100만 불 (12억 원)
2005	취약계층 지원	100만 불 (10억 원)
2006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230만 불 (23억 원)
2007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315만 불 (29억 원)
2008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408만 불 (47억 원)
2009	영유아지원(백신, 보건, 영양)	398만 불 (36.6억 원)
2011	영유아지원(백신, 보건, 영양)	565만 불 (65.3억 원)
계		2,660만 불 (337.6억 원)

기타 국제기구(기상자재, 농업 등)

연도	국제기구	내역	지원액
1996	세계기상기구(WMO)	기상장비	5만 불 (4천만 원)
1997	유엔개발계획(UNDP)	수해복구 장비	120만 불 (11억 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영농자재	30만 불 (3억 원)
2007	국제백신연구소(IVI)	백신, 의료교육	50만 불 (4.6억 원)
2008	국제백신연구소(IVI)	의료장비 및 시약지원	49만 불 (7억 원)
계			254만 불 (26억 원)

제4절 북한인권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같이 심각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국제사회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국제사회와의 협력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개선조치를 촉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06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유엔 인권이사회도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은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제63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시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2009년 3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11월의 제64차 유엔 총회, 2010년 3월 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 11월의 제65

차 유엔 총회, 2011년 3월 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 11월의 제66차 유엔 총회 등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는 총 7번에 걸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결과 및 우리입장

구분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03 (59차)	'04 (60차)	'05 (61차)	'08 (7차)	'09 (10차)	'10 (13차)	'11 (16차)	'05 (60차)	'06 (61차)	'07 (62차)	'08 (63차)	'09 (64차)	'10 (65차)	'11 (66차)
표결결과	28:10:14 (찬반:기권)	28:8:16	30:9:14	22:7:18	26:6:15	28:5:13	30:3:11	84:22:62	91:21:60	97:23:60	95:24:62	97:19:65	103:18:60	112:16:55
우리입장	불참	기권	기권	찬성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찬성	기권	찬성	기권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찬성

2010년 11월 제65차 유엔 총회는 북한의 공개처형, 정치 및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 총회는 북한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확대 및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1년 3월 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접근 지원 보장과 적절한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 제66차 유엔 총회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중단된 점을 우려하며,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하여 인권보호를 강력히 촉구하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 및 이에 대한 불처벌을 우려하는 등 전년에 비하여 강화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1년 제66차 UN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요약

〈전문〉

- 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우려하며, 향후 규모 확대 및 정례화를 위한 남북 간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

〈본문〉

- 북한 내에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으로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 표명
 - * 정치범수용소 존재 및 강제노동, 탈북자 강제송환 및 처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인권 침해 등
- 북한정부가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점,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이후 수락한 권고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 표명
- 강제실종 형태의 납치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정부가 납치자의 즉각 송환을 포함하여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
- 북한의 불안한 인도적 상황과 만성적이고 심각한 영양실조 등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 정부에 국제원조기구들과 협력하면서 예방 및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 및 지속적인 임무수행 노력 평가
- 북한정부에 대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도록 강력히 촉구
 - * 인권이사회 권고사항 이행, 인권침해자 재판을 통한 처벌, 강제송환문제 해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인도적 지원 접근권과 모니터링 등
- 67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 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

2010년 비딧 문타폰(Vitit Muntarbhorn)의 후임으로 임명된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16차 UN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를 통해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기준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북한 당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이산가족의 조건 없는 상봉 허용과 정례화,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인터넷 접근권 허용, 공개처형과 고문 및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였다. 또한 2011년 8월에 UN 총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 및 10월 UN 총회 제3위원회 보고 시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였다.

2. 시민사회와의 협력

정부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는 통일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국·영문)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학술행사와 자료발간 등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나 전문가가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활동도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의 「북한인권 NGO 국제세미나」,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사)북한전략센터 주최 학술세미나,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 「북한인권 국제회의」 등을 지원하였고,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생명과 인권」(계간지) 발간 등을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북한자유연합 등 국내외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1 북한자유주간」 서울대회 행사를 지원하였다. 인권단체들은 행사기간 중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및 사진전시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카드섹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3. 북한인권법 동향

2008년에 발의된 북한인권 관련 4건의 의원발의 법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2008년 7월 4일에 황우여 의원 등 23인이 「북한인권법안」, 7월 21일에 황진하 의원 등 25인이 「북한인권증진법안」, 11월 11일에는 홍일표 의원 등 10인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12월 26일에는 윤상현 의원 등 20인이 「북한인권법안」을 제의하였다. 2009년 7월 7일에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4건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 2월 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동 조정안을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으며, 2010년 4월 19일과 2011년 6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북한인권법안」(대안)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 신설,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실태조사, 교육·홍보,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11년 6월 14일 김동철 의원 등 15인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하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주민

에 대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도주의자문위원회 설치, 인도주의정보센터 설립, 인도적 지원 담당 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05

남북대화

- 제1절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 제2절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 현황
- 제3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제5장 남북대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에 이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행위로 인해 남북대화 여건은 악화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핵심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계기시마다 북한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정부는 남북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요구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2011년 2월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천안함 폭침은 우리측의 “특대형 모략극”이라는 등 기존의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남북비공개접촉을 왜곡하여 공개하는 등 남북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 북한은 2011년 9월 이후 취해진 우리 정부의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도 “대결정책의 연속”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로 말미암아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남북대화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국 간 남북회담은 군사분야 2회, 인

도분야 4회 등 총 6차례 개최되었다. 한편 백두산 화산 전문가회의 2회 등 민간 차원의 남북대화가 진행되었으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였다.

제1절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2010년 하반기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남북대화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그리고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정부의 「5.24조치」 추진 및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7월 9일) 등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국방위 대변인 성명(7월 24일) 등 잇따른 위협과 대승호 나포(8월 8일) 등으로 남북관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은 미국의 카터 전대통령의 평양방문 및 곰즈 동반 귀환(8월 25일 ~ 27일), 대한적십자사의 북한 신의주 수해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물자 지원 발표(8월 26일) 등으로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9월 7일 대승호 선원 및 선박을 귀환시키고, 9월 10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내는 통지문을 통해 「추석제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후 남북 간 협의를 거쳐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9월 17일, 9월 24일, 10월 1일 세 차례 개최되었다.

2010년 9월 17일, 9월 24일에 개최된 적십자실무접촉에서는 「추석제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상봉 규모와 장소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기존보다 확대

된 규모”로 이산가족면회소에서의 상봉행사를 진행할 것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전례대로 100명 규모로 진행하며, 이산가족면회소 사용을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재산 몰수·동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는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10월 1일에 열린 세 번째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였고, 북한도 이번 상봉행사만큼은 아무 조건 없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실시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2010년 9월 15일 통지문을 통해 9월 24일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후 남북 간 협의를 거쳐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9월 30일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북한의 검열단을 수용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010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측에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장소 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였다. 남북은 차기 적십자회담을 11월 25일 개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차기 적십자회담을 이틀 앞둔 11월 23일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

김에 따라 우리측은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통보하였다. 적십자실무접촉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도발로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2011년 들어 북한은 남북대화를 연이어 공세적으로 제의해 왔다. 2011년 1월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우리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고, 2011년 1월 8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자면서 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어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승지종합개발지도총국,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의 명의로 된 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내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회담,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의 개최날짜와 장소를 제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해 정부는 2011년 1월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국민의 희생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지원과 원조를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약속 ②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하였다.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11년 1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

견 형식을 통해 진정성이 없는 것은 오히려 우리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1월 20일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북고위급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2월 1일에는 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최대한 빨리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의 제와 예비회담 일정을 수정 제의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이후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자는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2011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수석대표의 수준 및 의제 등과 관련하여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게다가 북한은 천안함 폭침은 우리측의 “특대형 모략극”이며,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억지주장까지 하였다.

북한은 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한미연합훈련,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 등을 빌미로 우리측에 대한 위협과 비난을 지속하였다. 또한 2011년 2월 5일 서해해상에서 우리측으로 넘어온 북한주민 31명 가운데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북한주민 31명 전원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여러 차례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귀순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입장 하에 5월 4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개최하여 북한주민 4명의 자유의사 확인과 함께 북한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한측에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2011년 3월 17일에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 연구사업을 공동

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제의하고, 4월 27일에는 동해표기와 관련하여 남북 역사학자들의 공동대처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 무렵 북한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으로 구성된 ‘디 엘더스(The Elders)’의 방북 시(4월 26일 ~ 28일) 남북회담에 대한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하는 등 대화공세를 재개하기도 하였다.

우리측은 백두산 화산 문제와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의 대화이고, 남북한 협의 및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백두산 화산 전문가회의가 2011년 3월 29일, 4월 12일 두 차례 문산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 합의에 따라 우리측이 학술토론회를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한측의 반응이 없어 학술토론회는 무산되었다. 또한 북한측이 제의한 동해표기 공동대처 문제 협의에 대해 우리측이 5월 중순에 남북 역사학자들 간 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역시 북한측은 답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측의 남북대화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고 2011년 5월 들어서는 우리측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강화하였다. 5월 30일에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측과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6월 1일에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남북비공개접촉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공개하였다.’

남북비공개접촉 왜곡 공개에 대해 우리측은 6월 1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논평에서는 북한의 발표 내용이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

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2011년 하반기에 정부는 9월 19일 류우익 통일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당국자 간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9월 21일 ~ 24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방북 승인 등 비정치분야 교류협력 지원, 11월 22일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보수공사 착공 등 개성공단 활성화조치 시행, 11월 8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지원 재개 결정 등 인도적 지원 확대 조치 등 대북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도 “대결정책의 연속” 등으로 비난하면서 호응해 오지 않아 남북대화 여건은 조성되지 못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북한의 행태를 볼 때, 필요에 따라 한편으로 대화 공세를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에게 대한 위협과 비난을 지속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계기시마다 북한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제2절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 현황

1. 군사분야

가.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10년 9월 30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문상균(국방부 대령)	이선권(조선인민군 대좌)
대표	정소운(통일부 과장) 김영철(국방부 대령)	전창재(조선인민군 상좌) 홍석일(조선인민군 상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측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하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2010년 9월 15일 통지문을 통해 “군사적 합의 이행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군사실무회담을 9월 24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는 입장 하에 2010년 9월 30일에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측이 수용함에 따라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9월 30일 개최되었다.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우선 천안함 폭침이 객관적·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측의 소행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인 및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측 해역에 대한 북한측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적 도발행위, 우리 당국에 대한 비방·중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 민간단체의 북한에 대한 전단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해군함정들이 북한측 해상경비계선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기 두 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남북관계의 전도가 좌우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측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우리측이 대북 심리전 및 전단 살포 문제를 중단할 수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기하는 전단 살포 문제는 그동안 북한측에 충분히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음을 설명하였고, 우리 함정들이 북한측의 소위 해상 경비계선을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함정들이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이 이를 거부하고 북한의 검열단을 수용하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담이 종료되었다.

나.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이 2011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문상균(국방부 대령)	이선권(조선인민군 대좌)
대표	정소운(통일부 과장) 김도균(국방부 중령)	전창재(조선인민군 상좌) 조철호(조선인민군 상좌)

2011년 연초부터 대화공세를 펼쳐왔던 북한은 1월 20일 통지문을 통해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를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1월 말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2011년 1월 26일 답신통지문을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2월 11일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다.

이후 남북 간 협의를 거쳐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2011년 2월 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초 회담은 2월 8일 하루만 갖기로 하였으나, 협의가 길어짐에 따라 2월 9일까지 진행하였다.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를 제기하였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확약이 있어야만 남북관계

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쌍방 군부 사이의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 데 대하여”를 의제로 제기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고위급군사회담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강변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면, 북한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 사안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석대표 수준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국방부장관과 인민무력부장 혹은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으로 제기하였고, 북한측은 “차관급(인민무력부 부부장 혹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의제와 수석대표 수준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의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담 2일차 오후 회의에서 우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갑자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밝히고 회담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였다.

북한측은 “천안호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변하면서 “미국의 조종 하에 남한측의 대북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연평도 포격은 우리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밝히겠다는 내용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쪽의 머리 위에 포탄을 발사해 민간인이 사망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케 해놓고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하였다.

쌍방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해 이들 동안 회담을 진행하였으

2010년 10월 1일에 개최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의 합의에 따라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우선 2011년 3월부터 매월 남북 각 100가족씩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이미 상봉한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산가족들이 원하는 시기, 장소에서 상시적으로 상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였다. 상봉과 함께 2010년 12월부터는 남북 각 5,000명씩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 1월부터는 남북 각 1,000명씩의 이산가족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신교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80세 이상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11년 4월부터 고향방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도 제의하였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우리측에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상봉장소 문제가 결정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실무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측의 지원 요청에 대해서 우리측은 대규모 대북지원은 적십자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국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금강산 관광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와 별개로 상봉 정례화와 직접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북은 상호 제기한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차기 「남북적십자회담」을 2010년 11월 25일 개최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

였다. 그러나 차기 「남북적십자회담」을 이틀 앞둔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킴에 따라 우리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측에 통보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 (2010년 10월 26일 ~ 27일)

나.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2010년 9월 17일에 이어 9월 24일과 10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⁵⁾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의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대표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과장)	박형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5) 북한은 9월 24일과 10월 1일 실무접촉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관련 협의를 요구하며 강용철(아·태 평화위 참가)과 이경진(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대표로 추가 참석함.

북한측은 2010년 9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내는 통지문을 통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하면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2010년 9월 17일 개성에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갖자고 답신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북한측이 동의함에 따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2010년 9월 17일에 열린 실무접촉에서는 우선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상봉 일정과 생사확인 의뢰 등 사전 준비절차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상봉 규모와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상봉 규모와 관련 우리측은 “기존보다 확대된 규모”로 실시하자고 하였으나, 북한측은 전례대로 100명 규모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상봉 장소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상봉은 “금강산 지구 내에서 진행하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사용은 권한 밖의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2011년부터 매월 남북 각 100가족 규모의 상봉 정례화를 실현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도 반드시 협의·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상봉정례화는 남북관계가 풀리고 나서 좀 더 큰 회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들을 9월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2010년 9월 24일 실무접촉에서도 지난 접촉 시 이견을 보였던 상봉 장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으나, 북한측은 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지구 내 모든 시설이 몰수, 동결된 만

큼 면회소 이용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 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로서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면회소에서 상봉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측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제기하자, 북한측은 2010년 10월 중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상봉 정상화 등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양측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의 장소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차기 접촉을 10월 1일 개최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2010년 10월 1일에 열린 세 번째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우리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확인한 북한측은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한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접촉의 필요성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이번 상봉행사만큼은 아무런 조건 없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실시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남북적십자 실무접촉(2010년 10월 1일)

이러한 협의결과를 토대로 남북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과 차기 적십자회담 개최 내용을 담은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를 채택하고 접촉을 마쳤다.

합의서 요지

1. 이산가족상봉행사를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
 - ① 상봉 규모 : 남과 북 각각 100명
 - ② 상봉 일정 : 10월 30일 ~ 11월 1일 북한 방문단의 재남가족 상봉
11월 3일 ~ 11월 5일 남측 방문단의 재북가족 상봉
 - ③ 사전 절차 : 생사확인외뢰서(10월 5일)·회보서(10월 18일)·최종명단(10월 20일) 교환
 - ④ 상봉 장소 : 이산가족면회소, 금강산호텔
 - ⑤ 선발대 : 상봉시작 5일 전 현지 파견
2.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진행

3.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민간 차원)

「백두산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가 2011년 3월 29일 문산의 남북출입사무소와 2011년 4월 12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유인창(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윤영근(화산연구소 부소장)
대표	김기영(강원대 지구물리학과 교수) 이윤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강근(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장성업(화산연구소 실장) 주광일(조선지진화산협회 위원)

일본 대지진 등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일한 활화산인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던 시점인 2011년 3월 17일, 북한측은 우리측에 통지문을 통해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협의를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한 남북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선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 회의」를 2011년 3월 29일 우리측 지역인 문산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측이 수용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백두산 화산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두고 공동연구에 앞서 사전 '선행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백두산 화산활동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교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교환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를 통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방식 등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가 간 학술 토론회를 먼저 진행하고, 현지에서 나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식의 공동연구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 회의에서 남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차기 회의 날짜와 장소는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2011년 3월 17일 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측은 2011년 4월 6일에 「제2차 백두산 화산관련 남북전문가회의」를 4월 12일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측에 발송하였고, 이를 북한측이 수용함에 따라 제2차 회의가 4월 12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우리측은 백두산 화산의 현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북한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화산활동 징후와 관련하여 예년에 비해 최근 백두산에 지진현상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술토론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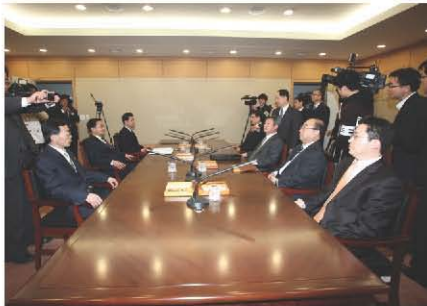
남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5월 초 평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후 6월 중순 백두산 현지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합의서」 요지

1.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남북학술토론회를 5월 초에 평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
2. 백두산 화산에 대한 현지답사 6월 중순 진행
3. 구체적 실무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우리측은 합의서에 따라 2011년 4월 28일에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남북학술토론회」를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아무런 답신을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남북학술토론회 및 백두산 현지답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제1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
(2011년 3월 29일)



제2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
(2011년 4월 12일)

제3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발표(5.24조치) 이후 북한은 5월 25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전면폐쇄” 등을 선언하고, 그 후속조치로 5월 26일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 업무 중지 및 통신 단절”을 통보하였다.

한편 북한은 2011년 초 대화공세를 펴면서 1월 10일 통지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열고 연락업무를 재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1월 12일부터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연락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로써 2010년 5월 26일부터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연락채널이 8개월여 만에 복원되었다.

판문점 남북연락업무 재개 이후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남북 간 연락업무는 직통전화 운용 596회, 남북 연락관 접촉 14회, 통지문 수·발신 107건 등이다.



판문점 남북 연락관 접촉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강 꿈과 자유를 향하여 제

2011년 7월 7일 (목)



통일부

제2하늘원



경

제2하늘원

0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제1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내실화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제3절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
추진



착공식

제6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인원은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총 2만 3,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왔다. 2010년에는 총 2,379명이 입국하여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11년에는 총 2,737명이 입국하여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현재 약 69%에 달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남	829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9	819	7,171
여	118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800	1,918	15,929
합계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23,100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비하여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을 건립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사회적응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초기 적응을 돕고,

거주지 중심의 정착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2001년 이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 58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26일 개정된 「정착지원법」의 시행으로 전국 30곳에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사와 정착도우미 등 3대 민간 정착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27일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민간지원 활동을 통합·조정하는 새로운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둔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탈북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장학 및 교육지원을 확충하고, 이들을 통일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제1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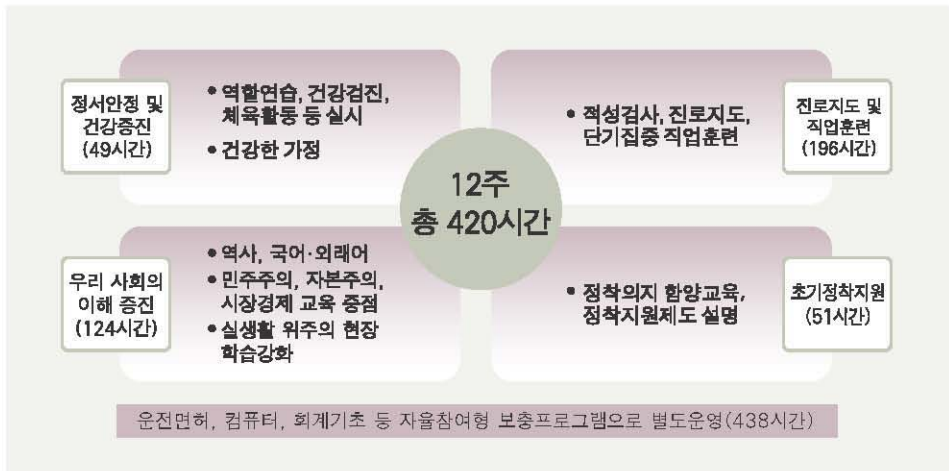
1. 교육프로그램 개편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사회적응교육은 정서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부여를 교육목표로 ①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② 우리 사회 이해 증진 ③ 진로지도·직업훈련 ④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과정 등을 그 내

용으로 한다. 또한 정규프로그램 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선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규프로그램



2011년 4월에는 내·외부 강사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 전문가·수료 교육생·북한이탈주민 고용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현행 교육기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현재까지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11차에 걸쳐 개편해 오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자유·민주적 법질서 의식 함양 ②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실용적 내용 보강 ③ 자율·자립·자활에 필요한 정착의지의 함양에 역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국가 정체성 및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을 확대·개편하였다.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남북한 언어 차이 및 외래어 교육', '실생활 경제교육 및 법률상담', '남한 직장문화 교육' 등을 확대하

였다. 또한 정착의지를 함양하기 위해서 자립자활 노력이 중요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실생활 소재의 '정착사례' 과목을 확대하였다.

2.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직업교육의 취업연계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기집중 직업훈련을 개선하였다. 2011년 3월 하나원 본원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나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인정받아 한경대학교에 요양보호사과정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초전자조립', '품질관리기초', '봉제'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본원에서는 2011년 1월 '용접' 과정을 신설하여, 현재 '중장비(지게차)', '자동차정비' 등 3가지 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훈련기관도 기존의 두원공대에서 한경대, 대우직업능력개발원, 청강문화산업대 등으로 확대하였다.

단기집중 직업훈련 실적

(단위: 명)

구분	수료 인원		구분	수료 인원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기초전자조립	231	517	요양보호사	-	263
품질관리기초	223	330	중장비	125	182
봉제	254	211	자동차정비	133	186
피부미용	221	30	용접	-	178

또한 하나원은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하나원 수료 전 매월 1회씩 '중소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채용면접과 중소기업 현장탐방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남한의 직장문화와 중소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과의 만남의 장'에는 2011년 12월 까지 총 3,52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였으며 기업체의 채용 면접에 합격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970명이었고,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25명이다.



중소기업과의 만남의 장

진로상담 분야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1년에는 그동안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을 취업기술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편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 채용 면접요령 연습, 취업의 걸림돌 극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진로희망찾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진로상담 실적

(단위: 명)

구 분		진로희망찾기	개별 이력서 클리닉
상담실적	2010년 1월 ~ 6월	1,578	-
	2010년 7월 ~ 12월	1,348	-
	2011년 1월 ~ 12월	1,804	301

*개별이력서 클리닉은 2011년 5월부터 운영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보조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촉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지원금 제도는 2000년 2월 최초 시행되었으며, 2007년 이후 매년 지원액이 대폭 증가하여 2011년의 총지원액은 2007년 대비 487%가 증가하였다.

고용지원금 지원현황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업체수(개)	323	378	564	888	1,151	1,419	1,717
인원(명)	446	497	728	1,111	1,489	1,963	2,565
지급액 (만 원)	142,628	140,200	224,033	349,457	640,600	973,231	1,314,607

3. 탈북 아동·청소년 교육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중 4세 이상 ~ 1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나원 내 하나돌학교에서 연령 및 학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돌학교는 유치반 1개 반, 초등반 2개 반(저학년·고학년반), 청소년반의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돌학교에서는 2011년 12월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파견교사 6명과 무지개청소년센터 파견교사 2명 그리고 자체 강사 3명 등 총 11명의 교사가 청소년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26일 개정, 9월 27일 시행된 「정착지원법」으로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유관부처 간 협의를 통해 2011년 3월부터는 하나원 수료 전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에 따라 재북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원은 예비학교운영규정 제정, 자체교재 발간 등 일련의 준비과정 끝에 2011년 10월 20일 하나돌학교를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로 전환하고 공식 개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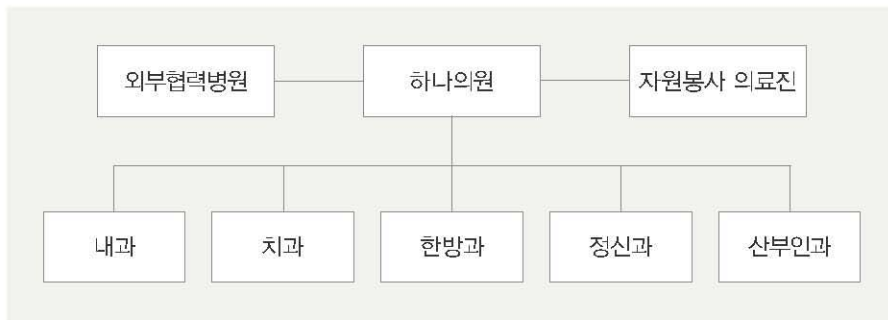
4. 교육생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가. 하나의원 운영

하나원에서는 교육생의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해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하나원 개원 당시에는 간호 인력이 1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교육생 증가에 따라 의료 인력을 꾸준히 확보해 교육생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현재 하나의원은 내과·치과·한방과·산부인과·정신과 등

5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7명, 간호사 6명, 약사 1명 등 총 14명의 의료진이 연간 약 4만건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하나의원 진료 체계



2011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점사업의 하나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B형간염 보균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4~5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에 북한이탈주민 전원에 대해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은 지역 의료지원기관·단체 및 병원과의 의료협약을 통해 의료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에는 ‘현대의료재단 인애가 한방병원(9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11월 29일)’과 의료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에도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4월 28일)’, ‘부산대학교병원(5월 24일)’, ‘전북대학교병원(7월 13일)’, ‘인천적십자병원(11월 10일)’ 등과 의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지원을 위한 거점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울의료원과 의료지원협약 체결

나. 심리상담 및 정서안정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에서부터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교육생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 해소 및 정서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심리상담사가 본원과 분원에 배치되어 있다.

심리적 불안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견된 교육생에 대해서는 개별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하나센터와 지역사회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교육생들의 정서안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1년 4월에는 기존의 '역할연습' 프로그램을 '집단상담'으로 개편하여,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훈련', '긍정적 자아상', '미래상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나원은 2005년부터 매년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2008년에는 북한이탈주

민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2009년에는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필수 수련 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5. 제2하나원 건립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의 증가에 따른 교육수용능력 증대 및 맞춤형 교육, 재교육 활용 목적으로 제2하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2하나원을 친환경 고효율 건물로 건축하기 위해 2010년 4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건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월에는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녹색 건물 설계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실시하였다. 연구용역 및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10월에 건축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12월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실시설계를 최종 확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한편,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7월 7일에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제2하나원 사업부지에서 ‘꿈과 자유를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2하나원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제2하나원은 2012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제2하나원의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7만 7,151㎡(23,380평), 건축 연면적 1만 5,220㎡(4,610평)로서 지하 1층·지상 4층의 생활관 및 교육관, 안내동, 경비동, 직원 관사 등의 건물 6개동으로 구성된다. 이는 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374억 원이 소요된다.

제2하나원은 남성 교육생의 사회적응교육 외에도, 고학력·전문직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교육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재교육 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지원금, 지역적응교육,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주거지에 전입해서는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초기 정착지원

가.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은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 및 자녀의 인적사항, 배우자와의 혼인 관련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원 수료 전에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해 주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각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신고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는 하나원에서 임시 주민등록지 20여 개를 지정해 교육기간 중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나. 정착지원금 지원제도

정착지원금 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한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을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2011년 12월 기준 정착금은 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노력 및 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가산금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기본금은 1인 세대의 경우 주거지원금을 포함하여 1,900만 원을 지원된다. 2010년에는 2,435명에 대해 기본금 156억 원과 주거지원금 241억 원이 지급되었고, 2011년에는 기본금 140억 원과 주거지원금 270억 원이 지급되었다.

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지원현황

구분	'05	'06	'07	'08	'09	'10	'11
인원(명)	1,352	1,976	2,450	3,005	2,321	2,435	2,417
기본금 (만 원)	2,448,100	2,193,800	2,476,100	3,054,800	2,027,800	1,560,500	1,403,577
주거지원금 (만 원)	800,900	1,187,700	1,603,800	2,026,700	1,952,600	2,406,900	2,699,767

정착가산금은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를 위해 지급되며, 이 중 동일인에게 하나의 정착가산금만 지급되고 있다.

정착가산금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수준
연령가산금	60세 이상	720만 원
장애가산금	장애등급별	1,540만 원(1급), 1,080만 원(2-3급), 360만 원(4-5급)
장기치료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80만 원×개월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가산금	한부모 아동	360만 원

다. 취업지원제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취업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장려금을 매년(1·2·3년차) 100만 원씩 증액하여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2,4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 만 원)

구분	기준	금액		
정 착 장 려 금	직업훈련 장려금	500시간 이하	미지급	
		500시간	120	
		500시간~1,220시간	120~240 (120시간당 20)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200	
자격취득 장려금	1회 한(限)	200		
취 업 장 려 금	취업 장려금	1년차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신청시 250 지급	550
		2년차		600
		3년차		650
	총액		2,440	

* 취업장려금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2005년 5월 사회진출자)부터 대상

2005년부터 도입된 장려금은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취업장려금 수급자는 2008년 대비 2011년에는 약 12배로 증가하였다.

장려금 지원현황

(단위 : 만 원)

연도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우선선정직종	취업장려금	총액
2011	118,100(726명)	163,800(819명)	70,400(352명)	1,183,700(2,406명)	1,536,000(4,303명)
2010	150,000(985명)	171,200(856명)	65,000(325명)	668,600(1,325명)	1,054,800(3,491명)
2009	88,400(681명)	104,000(520명)	21,800(109명)	296,900(646명)	511,100(1,956명)
2008	62,940(506명)	69,040(345명)	18,800(94명)	89,100(196명)	239,880(1,141명)

라. 주택 및 교육지원제도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를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배정한다.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837세대와 1,813세대의 주택을 알선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보호기간 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학에 진학하면 국·공립 대학의 경우 학비를 전액 면제하며, 사립대학은 국가가 학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학비지원 기간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8학기 동안이었으나 2010년 9월 27일부터는 6년 범위 내 8학기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사립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952명에 대해 약 23억 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1,334명에 대해 약 32억 원을 지원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종합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였다. 이어 2010년 11월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2011년 2월 10일에 재단 사무실을 마포구 창전동에서 현재의 여의도로 이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실 개소식 (2011년 2월 10일)

2011년 12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사무총장, 1실, 4부, 1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총 58명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하나원 수료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정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초기 정착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상담 지원, 의료 및 긴급 생계 지원, 주택미배정자 및 무연고청소년 생활 지원, 여성 쉼터 개소 및 방과후공부방 운영·지원 등이다.

또한 문화교양강좌 및 생활적응강좌 등 대상별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대안학교 지원 및 탈북청소년 장학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 및 고용 촉진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소자본 창업, 영농 정착,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을 지원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남북한 주민 상호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 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도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 거주지 보호 및 지원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생활 실태자료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2001년 서울시 노원구 지역협의회(100인 이상 거주)가 최초로 구성된 이후, 2011년 12월 기준 58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중 2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정착지원과 관련된 예산 중복과 과다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 협력네트워크이다. 또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방의 정착지원역량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는 하나월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3주간의 초기집중교육과 1년간의 밀착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9년에 서울, 경기 2개 지역, 대전, 대구,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2010년부터 전국 30곳으로 확대하였다.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지역

(단위 : 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광주
개수	4	6	2	2	2	2	2	2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
개수	1	1	1	1	1	1	1	1

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 내용

지역적응교육		수료 후 첫 1주간	하나센터 운영	
목	하나원 수료 (신병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입주 신고 담당형사 상견례 	지역사회 이해 및 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교육 구청, 은행, 마트 등 주요기관 및 시설 방문
↓				
금	지역사회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센터 소개 교통/시장 안내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요구 파악 및 상담 취업기본교육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장방문
↓				
별	고용지원센터 출장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 정보 제공 구직/구인 정보 제공 	진학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학교 소개 학부모 교육
↓				
화/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 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통장 실명 변경 	건강증진 및 개인역량 강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건강 관리 정신건강 예방 교육 지역의료기관 이용방법 안내 및 방문 여가활동 안내
			인생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계획서 작성 및 공유

2010년도에는 초기 집중교육대상자 2,073명 중 1,675명이 교육에 참가(80.8%)하여 1,570명이 이수(93.7%)했으며, 2011년도에는 초기 집중교육 대상자 2,309명 중 1,795명이 참가(79.3%)하여 1,664명이 이수(92.7%)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후의 사후 지원 건수는 2010년 총 5만 4,852건이며, 2011년에는 총 8만 6,930건이었다.

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1년 12월 말 기준 전국 16개 시·도에서 10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한해 동안 3만 4,83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7만 5,918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2011년 분야별 상담 실적

(단위 : 건)

상담분야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 제도 안내	심리 /정서	의료 /생계 급여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합계
실적	9,798	5,005	9,554	9,243	12,203	11,031	2,630	3,990	3,338	9,126	75,918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알선하고, 지원재단 및 지역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병원 이용 방법 안내 및 의료비 지원 활동, 북한이탈주민의 진학 유도 및 능력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워크숍

라. 정착도우미

정착도우미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1년 동안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임대주택 입주, 주민등록 신고, 가정방문(월2회) 등을 통해 '친근한 이웃'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 대한적십자사, 자유총연맹, 사회복지관 등 14개 기관에서 1,549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착도우미 교육

마. 보호담당관

보호담당관은 취업보호담당관 외에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북한이탈주

민의 거주지 전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2011년 12월 기준 전국 223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54개소 고용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바. 기타 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에서도 지역사회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심리상담, 청소년교육, 주민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2011년도에는 민간단체 29개 사업, 북한이탈주민단체 14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8개 사업 등 총 51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간공모사업

제3절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정착지원정책을 일방적·시혜적 차원에서 자립·자활 차원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등 새로운 정착지원제도를 확충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0%에 달하는 탈북여성과 무연고 청소년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확충하고 있으며, 탈북청소년을 미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1. 「24시간 종합상담센터」 개소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11년 5월 30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내 종합상담 및 24시간 콜센터(1577-6635)를 개소하였다. 총 10명의 전문상담사가 교대로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까지 총 8,448건의 상담을 하였다.

앞으로 권역별로 전문도우미 시스템(경찰, 법률, 응급의료, 노동, 교육 등)을 확충하여 지역별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2.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확대 및 유지 등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포스코 등의 기업과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0년 9월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10년까지 설립된 사회적기업 21곳에 대해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신규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재단에서는 공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적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업들을 모집하고, 인프라 구축비용, 경영·법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11년에는 추가적으로 사회적기업 12곳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2010년 7월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소자본 창업지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년에 2회 약 20~

30명을 선발하여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1인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의 창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2010년 하반기에 27명을 선발한 후에 약 10억 원을 대출해주었으며, 2011년에는 총 40명에 약 15억 원의 창업자금을 용자해 주었다.



통일부-현대차미소금융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식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영농교육을 이수한 후 영농사업 계획서 등을 점검하여 영농컨설팅 및 영농자금을 지원하며 2011년에 18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공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을 7명 이상 채용한 채용우수업체 12곳을 선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무교육, 직장 내 단합대회 등을 지원하였다. 채용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은 고용환경을 개선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내 적응을 돕고, 장기 근속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여성·대학생 등 대상별로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 탈북여성들의 주요 희망직종인 사무관리직 육성을 위해 2011년 5월부

터는 전산회계 등 사무관리 관련 자격을 보유한 대상자를 모집하여 실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후 사전에 확보된 사무관리직 취업처로 채용을 알선하였다.

또한 탈북대학생을 우리 사회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자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2011년도에는 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탈북대학생들은 2주간의 사전교육이 끝난 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소속 기업, 우수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였다.



탈북대학생 인턴십 발대식

3.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전체 입국인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부터 출산지원금(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유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아의 경우에는 1가정당 1인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는 등 최대 90일까지 산후조리를 지원한다. 유아의 경우에는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아동학습지원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아이돌봄교육 및 취업·생활정보 강좌를 개설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교육



아동학습지원

특히, 폭력에 노출된 탈북여성들을 위한 쉼터와 재활을 위해 하나쉼터 3곳을 개설·운영하고, 탈북여성들의 육아 지원을 위해 방과후공부방 17곳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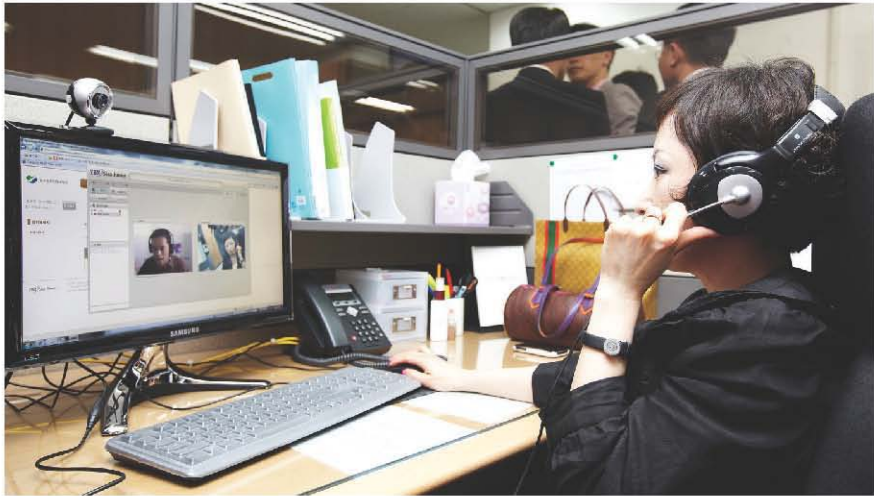
무연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13곳 및 주택 미배정자를 위한 공동생활시설 12곳을 개설하였다.

4.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10월 20일 하나원 내 '예비학교'를 설립하였다. 한편 2011년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을 통해 탈북 중·고생 205명, 대학(원)생 182명 등 총 38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여 8개 시설에 약 7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 5월 30일부터는 탈북 청소년에게 1대1 영어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화상 교육을 도입했으며, 진로와 진학을 지도하기 위해 대학입시 박람회 등을 개최하였다.



영어 화상 학습

특히, 탈북청소년들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함으로써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세대로서 정부는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탈북대학생 5명을 선발하여 「WEST」 프로그램(Work English Study Travel, 정부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에 시범적으로 참여시키고, 대학생 미래리더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해외연수 등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협력하여 총 200여 명에게 우리나라 문화·자연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예술의 전당과 협조하여 클래식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5월 ~ 12월, 매회 30명)하였다.

5.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는 정착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효과를 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0년 12월에는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통일인재 육성기금 마련을 위한 「Dreams Come True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Dreams Come True 콘서트

2011년에는 사회통합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과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사례(2010년 12월 30일 ~ 2011년 2월 10일, 7회)를

발굴하여 공중파를 통해 방송하였고,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등과 협조하여 '새터민 학생들의 남도여행' 다큐멘터리를 방송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KBS, 케이블 TV, 지하철 역사 등에 홍보하였다. 2011년 11월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2011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남북 주민 2,200여 명이 함께하는 인식 개선 행사도 개최하였다.



「2011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격월간 소식지 「동포사랑」(매월 1만 6,000부), 월간지 「재단소식」, 인터넷 뉴스레터 및 영문 뉴스레터 「NKRF(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등을 발간·배포하여 관련 소식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2011

March For Peace
& Unification 2011

평화통일대행진 통일주제발표

하나되는





07

통일교육

- 제1절 통일 미래를 향한 통일교육
- 제2절 통일교육과정 운영
- 제3절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지원
- 제4절 통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제7장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헌법 정신에 따라 1999년 2월에 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은 제2조에서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 제1항은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미래지향적 통일관」은 단순한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민족공동체의 발전과 도약에 기여하는 밝은 통일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고, 「건전한 안보관」은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물질적·정신적 가치를 지키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며, 「균형있는 북한관」은 북한 사회 실상을 어느 일면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세 가지 기본방향을 균형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전 국민의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1절 통일 미래를 향한 통일교육

1. 통일교육 추진체계 강화

정부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2011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11 통일교육기본계획」은 중점 추진과제로 ① 통일안보교육 강화 ② 통일 준비 공론화 확산 ③ 미래세대 통일교육 다양화·활성화 ④ 새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 개발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1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2010년 지침서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통일교육 목표와 주안점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변화된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 등을 내용에 반영하였다.

특히, 2010년까지 일반용과 학교용으로 발간하던 「통일교육지침서」를 2011년에는 학교용을 초·중·고등학교용 3종으로 나누어 일반용과 함께 총 4종으로 발간하였다. 또한 발간 부수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총 10만 부를 보급하였다.



통일교육 기본계획

통일교육 지침서

한편, 2011년은 통일교육원 개원 40년을 맞이하는 해로 통일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그동안의 통일교육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1년 7월 6일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통일교육위원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과제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하고 건설적인 제안이 제기되었고 참가자 간에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통일교육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2011년 7월 6일)

2.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통일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언론,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계각층 고객과 함께 통일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만남의 장으로 「통일대화의 광장」을 개최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 학교 교육기관과의 협조체계가 견고히 갖추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업무협의를 강화해 나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교과부와 차관급을 포함한 각급 업무협의, 시·도부교육감회의,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사)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학교통일교육 추진방향을 협의하였다.

2011년에 시·도교육청과는 두 차례에 걸친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통일교육 실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2010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시·도 교육연수원장 워크숍을, 2011년 4월 20일부터 21일에는 전국 학생수련원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국 16개 시·도 교육연수원 및 23개 학생수련원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통일교육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1년 7월 20일에는 18만여 명의 교원들로 구성된 전국적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통일교육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통일부-한국교총 업무협약 내용

1.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및 학생 현장체험 확대
2. 학교통일교육 및 교원 연수 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협조
3. 학교통일교육 강좌 및 세미나 등 관련 행사의 공동 개최
4. 학교통일교육 관련 학술 정보의 교환·교류
5. 우수교육사례 및 강의안 등의 모집·확산
6. 기타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추진



통일부-한국교총 업무협약 체결

한편, 통일교육원은 2011년 2월 1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행정연수원과 '통일 안보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통일교육원 교수, 교육자료 등을 지방행정연수원에 제공하는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통일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 업무협약 체결

한편, 2011년에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3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9월 광주광역시, 10월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노력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1년 10월 통일교육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제공하였으며, 시·도 관계자와의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지자체가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2절 통일교육과정 운영

통일교육과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연중 진행되는 '초청교육'과 해외 동포

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순회교육’이 있고, 온라인으로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사이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1. 초청교육

정부는 각종 사회단체 임원·회원 등 사회지도층인사, 초·중등교원 및 교장·교감·장학사 등 교육관계자,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정부·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 등이 참여하는 1년 장기과정인 통일미래지도자과정과 통일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도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총 128회 6,691명(연인원 2만 5,619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과정은 ① 학교통일교육과정 ② 공무원통일교육과정 ③ 사회통일교육과정 ④ 통일미래지도자과정 ⑤ 통일교육전문과정 등 5개 전문 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었으며,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북한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기초하였다. 나아가 최근 남북관계 상황변화를 반영한 건전한 안보의식 형성과 통일 미래 비전의 제시를 통한 긍정적인 통일의식 형성에도 역점을 두었다.

학교통일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연구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청소년 등 14개 과정(53회)에 총 3,128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실상과 북한 핵문제, 안보환경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과정을 운영하였다.

공무원통일교육과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및 실무 공무원, 정훈장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자,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경기도 공무원 및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과정교육생(위탁과정), 신규임용 수습사무관 등 1,405명을 대상으로 13개 과정(23회)을 실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과정은 통일교육 관련 기관·단체 회원을 비롯하여 여성·종교계 인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봉사자 등 각 지역사회와 직능단체의 여론주도층 인사 등 1,891명을 대상으로 12개 과정(45회)을 실시하였다. 특히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기초자치단체의원 등 각계의 여론주도층도 다수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2011년 통일교육과정 운영 현황

구분	통일미래지도자	전문강사과정	학교통일교육	공무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합계
인원(명)	36	231	3,128	1,405	1,891	6,691
반수(회)	1	6	53	23	45	128
연인원(명)	7,920	1,584	6,543	5,171	4,401	25,619

* 연인원(명)은 각 과정 인원의 교육 일수를 합한 값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 차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의 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제6기 교육생 36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역량,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민·관을 이어주는 통합·조정능력, 통일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제1기부터 제6기까지 총 207명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제6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교육생

2010년 4월 20일 개정·발효된 「통일교육 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훈련된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한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통해 2010년 시범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3개 과정에서 84명을 교육하였다.

통일교육 전문과정은 청소년들에게 통일관을 정립시키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눈높이 통일교실 전문과정」,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적실성 있는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과정인 「사회통일교육 전문과정」, 북한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적 북한실상을 교육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강사 전문과정」 등 3개 과정을 진행하였다.

통일교육 전문강사과정 이수현황

(단위 : 명)

연도	눈높이강사	사회통일교육강사	학교교원	북한이탈주민강사	계
2010년	21	31	51	-	103
2011년	21	37	-	26	84
계	42	68	51	26	187

또한, 2011년에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통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내에 재학 중인 한국외대, 서강대, KDI 해외유학생뿐만 아니라, 미국 초·중·고 교장단과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학생 등 재외외국인도 초청하여 통일정책 설명회를 갖고 판문점 등 분단현장도 방문하였다.



한국외대 외국인학생 대상 통일정책 설명회(2011년 5월 20일)

2. 해외순회교육

정부는 매년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 함부르크 지역을 방문하였다. 또한,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브라질 상파울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파라과이 아순시온을 방문하여 각 지역 교민들을 만나 통일정책을 설명하였다.

해외순회교육은 그동안 통일문제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지역 교민들에게 통일정책을 이해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3. 사이버교육

정부는 2003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를 받은 이후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통일교육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2004년부터 30시간(2학점)의 단기과정을 2006년부터 60시간(4학점)의 장기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2011년 상반기에는 변화하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총 17개 과목 53차시의 사이버강좌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였다. 하반기부터 개편된 내용으로 사이버과정을 운영하여 교원 2,295명, 공무원 2,585명 등 총 4,880명이 이수하였다.

2011년 10월 7일에는 「열린 통일 강좌」를 개설하여 그동안 수강대상이 교원, 공무원에게 제한되었던 사이버강좌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였다.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등 '통일문제의 이해' 7개 차시, 북한이해의 관점 등 '북한이해 강좌' 6개 차시 등 총 13개 차시를 제공하였다.



열린 통일 강좌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북한방문 예정자들을 위해 사이버 방북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북안내교육은 사이버방북 교육, 통일교육원 정례교육, 방북예정자들의 요청 시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매일 출경 전 실시하는 영상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2011년도에 방북안내교육을 받은 인원은 총 4,364명이었다.

제3절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각종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현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통일교육'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일교육'으로 크게 대별하여 경진대회, 공모, 이벤트,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1. 학교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2010년에 6.25전쟁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평화통일대행진」을 2011년에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내외 청소년 3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 청소년의 통일안보의식을 제고하고 통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동부경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서부경로는 중학생으로 나누어 각각 전방지역 현장체험과 통일리더십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전방지역 현장체험은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 군 부대 병영체험·도보행진, 생태트래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통일리더십 프로그램은 통일 골든벨, 팀별 통일 주제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평화통일대행진」이 끝난 이후에는 참가 소감문 공모전, 행사 기록물 발간, 「평화통일대행진 운영진 캠프」 등 다양한 사후 행사를 개최하였고, 특히 2011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통일미래리더 캠프」에서는 가수 신형원 교수의 통일 강의를 비롯하여 참가자 96명을 통일미래리더로 위촉하기도 하였다.



2011 평화통일대행진

또한, 「청소년 통일 미래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2011년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나흘에 걸쳐 강원도 인제군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개최하였다.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비전 스피치대회, 통일 골든벨, 통일 특강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캠프 중에 을지 전망대, 제4땅굴, 편지볼 등을 둘러보며 남북관계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였다.



청소년 통일 미래 글로벌 리더십 캠프

더불어 전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전문적인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부 직원, 눈높이 통일교육 강사, 북한이탈주민 등이 일일통일교사가 되어 학교를 직접 방문하였다. 2010년에 107개 학교, 2011년에 223개 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 지정 현황

시도명	학교 명
서울	서울상지초등학교, 전동중학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부산	학진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감천중학교, 명진중학교
대구	대구천내초등학교, 대구일중학교
인천	인천부광초등학교, 인천장도초등학교, 가정여중학교, 연화중학교, 인천논현고등학교
광주	도산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첨단고등학교
대전	대전삼천중학교
울산	동부초등학교, 성안중학교, 대현고등학교
경기	삼죽초등학교, 문산초등학교, 탄현중학교, 풍덕고등학교
강원	화천실내초등학교, 철원정흥초등학교, 임계중학교, 대진중학교
충북	청주서촌초등학교, 이월중학교
충남	은양초등학교, 탕정중학교, 합덕여자고등학교
전북	군산홍남초등학교, 군산서흥중학교
전남	응지초등학교, 영광여중학교, 완도금일고등학교
경북	영주동부초등학교, 상주화령중학교, 김천상업고등학교
경남	창원용호초등학교, 위천중학교, 김해고등학교
제주	우도초등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 추자중학교

정부는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0년에 32개 학교, 2011년에 48개 학교로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 지정을 확대하면서 통일교육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였다.

2011년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6차 전국학생 통일글짓기대회를 진행하였으며, 5,106개 학교에서 63만 3,427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또한 2011년 10월 17일 최초로 통일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통일교육 담당교사 66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통일교육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통일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학생이 남북관계와 통일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통일포럼」을 개최하였다. 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와 협력하여 전국 대학에서 강의, 세미나, 포럼 등을

2010년에 18개 대학교, 2011년 21개 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2011년에는 최초로 경남대학교, 동국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7개 대학교에서 통일환경, 남북관계, 북한실상, 통일 미래비전 및 통일준비 등의 강좌와 현장 체험으로 구성된 5주 과정의 대학생 통일이카데미 개설을 지원하였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대학(원)생 통일논문 공모를 진행하였다. 2011년은 「통일논문 공모전」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총 52편의 통일논문 공모작 중에서 최우수 1편, 우수 4편, 장려 6편을 선정하였다. 또한,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통일논문 공모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원)생 통일논문 공모 시상식

2. 사회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국민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통일교육위원,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관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1987년부터 통일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지역사회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 제17기 통일교육위원 1,010명을 2년 임기로 위촉하고, 중앙협의회 및 16개 시·도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통일교육위원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소식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통일교육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10년에는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에서 총 5회의 방문연찬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통일교육위원에서 총 9회의 초청연찬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통일교육위원을 중심으로 그랜드포럼을 두 차례 개최하여 다양한 통일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통일교육위원회협의회 회장단 워크숍

2004년부터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사회통일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전국에 17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시민강좌, 통일교육 워크숍, 통일문화축제, 통일경진대회, 통일현장체험 등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0년에는 586회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17만 8,540명이 참가하였고, 2011년에는 800회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14만 6,870명이 참가하였다.

2011년 지역통일교육센터별 사업 추진 현황

센터	현황	센터	현황
서울	32회, 5,454명	부산	27회, 7,950명
대구	74회, 28,025명	인천	33회, 5,215명
광주	29회, 3,980명	대전	56회, 11,320명
울산	84회, 9,011명	경기	76회, 14,454명
강원	32회, 2,191명	충북	15회, 1,780명
충남	29회, 6,249명	전북	32회, 4,844명
전남	35회, 6,395명	경북	124회, 20,032명
경북남부	43회, 1,673명	경남	41회, 14,087명
제주	38회, 4,210명	총계	800회, 146,870명

정부는 2002년부터 민간통일교육 단체들의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통일교육협의회에는 65개 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등 통일교육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사례집 등 통일교육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공모를 통해 강연, 포럼, 워크숍, 토

론회, 현장체험학습 등 회원단체의 통일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단체 지원을 통하여 2010년에는 149회에 걸쳐 1만 3,182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143회에 걸쳐 1만 5,552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민에게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의 통일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통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각 통일관에 전시물, 영상자료, 특수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에 부산과 경남통일관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통일관의 통일교육 효과를 증가시켰으며, 향후 통일관 리모델링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관 운영 현황

연번	통일관명	위 치	운영주체
1	오두산통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369	통일부* (주)동화진흥 위탁
2	서울통일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 35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3	부산통일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4	인천통일관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8-7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5	광주통일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16-11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6	대전통일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	대전EXPO과학공원
7	고성통일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31	(주)통일전망대
8	양구통일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622	양구군
9	철원통일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	철원군
10	청주통일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70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11	충남통일관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98	자유총연맹 충남지회
12	경남통일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485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13	제주통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968-2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경남통일관 리모델링 개관식

제4절 통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정부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이라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해 왔다.

매년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비롯하여 각종 참고자료와 영상자료 등을 발간·제작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기관, 초청 교육생, 일반 국민들에게 지원하였다. 특히, 통일교육 자료의 내용을 객관적·균형적 시각에서 서술하여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북한 동향을 반영하여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1. 기본교재 발간

정부는 통일 및 대북정책, 남북관계 등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의식을 제고하고 북한 실상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하고 있다.

2011년판 기본교재는 국민들이 남북관계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람직한 대북관, 안보관 및 국가관,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 및 변화된 통일환경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구체화하고, 2010년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으며,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비롯한 통일준비 노력 등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편익 및 통일한국의 미래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2010년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북한 이해』는 북한의 이중적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당대표자회 및 3대 권력세습 동향을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6.25전쟁 등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 실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북한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는 화폐개혁 및 장마당 현황, 제도와 현실의 괴리 현상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2011년에는 기본교재의 발간부수를 크게 늘려 전년도 각 4만 5,000부에 서 각 12만 5,000부를 발간하여 수요가 많은 교육기관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였다. 처음으로 일선 초등학교 및 군부대에 기본교재를 보급하였으며 중·고등학교에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청소년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1년 12월 기준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강의 교재로 활용하는 대학이 35개에 이르고 있다.



2. IPTV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정부는 2010년부터 각 학교에 보급된 IPTV 교육서버를 활용하여 미디어 세대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통일교육 담당교사, 통일교육 전문가, IPTV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IPTV용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2010년에 교과보조용 영상 130편, 재량활동용 영상 42편, 특별기획 프로그램 8편 등 총 180편을 개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교과보조용 영상 47편, 창의적 체험학습활동용 영상 42편, 특별기획 프로그램 15편 등 총 104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였다. 2011년 8월 27일에는 KBS 개그콘서트의 형식을 빌려 통일에 대해 이야기한 '통일콘서트'를 개최하여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학교 IPTV용 통일교육 콘텐츠

2011년 학교 IPTV용 특별기획 프로그램 목록

장르	제목
감성영상	U&I 1편 - 작전명 폭풍 / 2편 - 잃어버린 보물 / 3편 - 통일 상상, 그 날
	통일의 의미
개그콘서트 공연	통일콘서트
다큐멘터리	북한인권을 말하다 - '유리병 속 사람들'
	통일 BIG & BIG 공모전 제작기 '소망을 담다' - 1편 : 통일, 우리에게 답이 있다 - 2편 :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 3편 : 통일한국, 하나 된 미래를 그리다
	통일리porter, 체제전환 국가를 가다 '체코편' / '폴란드편' / '헝가리편'
다큐+드라마	꿈을 지키다
애니메이션	통일 애니 1편 - 아기돼지 삼형제 / 2편 - 피노키오의 통일성 대모험

3.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정부는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서, 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보급하여 왔다.

2003년부터 통일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심층적 해설서인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를 시리즈로 발간해 오고 있다. 2011년까지 발간한 자료는 총 32종에 달하고 있다. 2011년에는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통일필요성의 재인식』,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등 6종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도서관, 유관기관 및 단체, 초청교육생 등에 보급하였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또한 2011년에는 통일교육 기본교재 및 통일·북한 관련 도서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남북관계의 주요 용어를 사전 형식으로 정리한 『남북관계지식사전』을 발간하였다. 『남북관계지식사전』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남북회담 및 합의서, 남북 간 사건 및 이슈, 북한의 대남전략 및 도발 등의 용어들을 선정하여 그 유래와 배경, 주요내용과 의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설하여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자료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0년에는 6.25 60주년 기념 평화통일대행진 행사 전반을 소재로 미래 통일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6.25의 교훈과 의미를 깨닫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영상을 구성한 『평화통일대행진 5박 6일간의 기록』 및 『DMZ에서 바라본 분단과 통일』을 제작하여 평화통일대행진 국내외 참가자 전원과 교사들에게 배포하였다.

2011년에는 올바른 대북관 정립 및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는 영상자료들을 개발 및 보급하였다. 『북한의 시장과 주민생활』과 주제강좌 시리즈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등을 영상화하여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나 통일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 9월부터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자를 위해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내 전자책 전문 사이트(E-Book 서고)를 개설하고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등 2종의 기본교재 및 주제강좌 시리즈에 대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일교육 자료의 제공 차원에서 매일 인터넷 잡지인 통일교육원 「웹진(Unizine)」을 발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웹진은 교장·교감·교사 등 정책고객 4만 1,000여 명에게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웹진은 2010년 하반기에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남북관계 주요이슈(전문가 칼럼)’, ‘우리학교 통일교육(교육사례)’, ‘멀티미디어 자료실(동영상)’, ‘독자 이벤트’(제언 공모 및 퀴즈) 등의 코너를 신설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통일교육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이버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2010년 하반기에는 「Unizine 통일카툰 퀴즈」, 「어린이·청소년 통일다큐 감상문 공모전」, 2011년에는 「통일교육 영상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과 「열린 통일 강좌 개설 기념 사이버이벤트」에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하였다.

한편 2011년 말 통일 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를 검색하여 포털기능을 하는 「통일 사이버 라이브러리」(lib.uniedu.go.kr)를 구축하였다. 「통일 사이버 라이브러리」는 통일부와 유관기관 웹사이트에서 보유·제공하고 있는 통일교육자료, 정책자료, 북한관련자료, 멀티미디어 등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마당’에 통일교육 자료와 통일문제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탑재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보고 필요 시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자료마당’ 이용자 수는 약 20만 명이었으며, 2011년에는 2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 현황

구분	제목
기본교재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학교 IPTV 콘텐츠	교과보조용 영상 47편, 창의적 체험학습활동용 영상 42편, 특별기획 프로그램 15편 등 총 104편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제27권 :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제28권 :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제29권 :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제30권 :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제31권 :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제32권 :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사전형 자료	남북관계 지식 사전
영상자료	북한의 시장과 주민생활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북한 여성의 일상을 만나다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 북한 사람들
기타	사이버과정 콘텐츠, 홈페이지(청소년 통일배움터) 콘텐츠, 웹진(Unizine), 통일교육원 홍보 브로슈어 등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 7 장
부속면역야

부록

I. 2010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II. 2011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I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2. 남북 교류협력 현황
3. 개성공단사업 추진 현황
4.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5. 남북회담

IV.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1. 총괄표(조성 및 사용실적)
 2. 사업비 집행실적
 3. 민간출연현황
-

I. 2010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날 짜	추진내용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함 폭침 관련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미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 - 북남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도로 간주하고 있으나, 미측이 제의한 장성급군사회담을 수용, 7·13회담 개최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
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북한군 판문점 대령급 실무접촉 - 유엔사측은 군정위 조사 결과를 북한측에 제공, 북한군측은 장성급 회담의 개최를 위해서는 국방위 검열단 현지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북한군 대령급 실무접촉 - 유엔사측은 공동평가단 구성을 제의, 북한측은 검열단 파견 주장 지속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 대변인 성명 - 한미연합해상훈련 등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핵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 개시' 주장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답변 -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책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

날 짜	추진내용
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통지문 - 대승호와 선원 7명(한국인 4명, 중국인 3명)에 대해 조속한 송환 요청 - 국제법과 관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선박과 선원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우리측 어선이 나포된 경위도 설명해 줄 것을 요청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8.15 경축사 - 분단 상황 관리를 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통일의 미래비전 제시 - 평화·경제·민족공동체의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제시 - 통일재원 마련의 중요성 강조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 8.16~8.26 진행되는 UFG 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난, “무자비한 대응” 위협
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답변 - 8.15 경축사 ‘통일세’ 논의 제안 비난
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십자총재 명의 전통문 - 북한측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대승호와 선원들을 국제법과 관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송환해 줄 것을 촉구
8.2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터 미 전 대통령 평양 방문, 고프스 동반 귀환
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통지문 - 신의주 지역 등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긴급 구호물자 지원의사를 전달
8.2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중국 비공식 방문

날 짜	추진내용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통지문 - 수해지원 관련 지원품목·규모 및 지원경로 통보 - 비상식량, 생활용품 및 의약품 등으로 총 100억 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자를 신의주·개성지역에 단동·경의선육로를 통해 전달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통지문 - 쌀,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등 복구장비 지원 요청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조선중앙통신) - 나포 대승호 돌려보내기로 결정 보도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승호 선원 및 선박 귀환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통지문 - 추석에 즈음하여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통지문 - 수해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 쌀 5천 톤, 시멘트 1만 톤, 컵라면 300만 개 등 수해 관련 구호품 지원,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적십자 실무접촉을 9.17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 - 군사적 합의 이행 관련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9.24 판문점(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북한군 대령급 실무접촉
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 상봉 일정 및 사전준비절차에 의견접근, 9.24 차기 실무접촉 개최 합의

날 짜	추진내용
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 전통문 - 북한 군사전통문에 대한 답신으로 9.30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
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조선노동당 당 대표자회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 - 우리측의 9.30 실무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 - 핵보유국 입장 강조 및 핵역지력 포기 불가, 강화 입장 표명(유엔총회 연설)
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 우리측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임을 지적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적 도발행위 및 당국에 대한 비방중상 행위 중단을 강조 - 북한측은 민간단체 전단살포 중단과 우리 해군함정이 북한의 해상 경비계선 침범을 주장, 천안함 조사 결과 부인 및 검열단 파견 수용 주장 반복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 10.30~11.5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키로 합의 - 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10.26~10.27 개성에서 적십자회담 개최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통지문(조선중앙통신) - 적십자실무접촉에서 협의된 데 따라 금강산지구 부동산 문제, 관광재개문제와 관련 당국 간 실무회담을 15일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사-북한군 판문점 대령급 접촉

날 짜	추진내용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명의 통지문(→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 적십자회담 및 이산가족상봉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금강산 관광 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 간 회담 관련 입장 추후 통보하겠다는 의사 전달
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통지문 -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루빨리 가질 것을 촉구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 - 국방부장관의 대북심리전 방송 주파수변경 및 라디오 살포 계획 비난
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항공관계 통신망 복원 - 10.16 북한 통신망 복원 통보(5.2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따라 5.26 통신망 단절)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통지문 - 북한에 수해지원 물자 전달 계획 통보 - 10.25 1항차 쌀, 컵라면 출항, 단동에서 신의주로 전달
10.2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적십자회담 (→ 11.25 적십자회담 개최 합의)
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북한군 판문점 대령급 접촉
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군사회담 대변인 담화 - 북한이 10.22 군사적 합의 이행문제 논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 데 대해 남측이 거부했다고 비난
10.30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상봉행사 (1차 : 10.30~11.2, 2차 : 11.3~11.5)
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통지문 -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11.19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

날 짜	추진내용
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통지문에 대한 답신 - 회담을 하려면 금강산지구 내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부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 전달
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통지문 -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촉구 및 25일 적십자회담에 해당 당국자들이 나와 재개 회담 관련 문제 협의할 것을 제의
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 - 호국훈련 관련 북한 영해로 사격을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
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 - 사격 중단 촉구
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최고사령부 보도 - 호국훈련 비난
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 판문점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제의
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통지문 - 남북적십자회담(11.25) 무기 연기 통보
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수해지원 잠정 중단 발표
11.28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 한미 연합훈련
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북한 도발 관련 대국민 담화 -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

날 짜	추진 내용
11.29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연평도 포격 도발 책임 미국에 전가 및 평화협정체결 필요성 강조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도 해상 사격 훈련 실시

Ⅱ. 2011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날 짜	추진 내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신년공동사설 발표 -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신년 특별연설 -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실천,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발표(조선중앙통신) - 당국 포함 정당·단체들과의 대화 제의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조선중앙통신) - 당국 간 대화 제의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정부입장 발표 - △1.5 북한 연합성명의 연장선, △형식 등으로 볼 때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로 보기 어려움, △구체적 상황 일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북한 태도 보아가면서 대응방향 검토

날 짜	추진내용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인민무력부장 명의 전통문 - 모든 군사적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고위급군사회담 개최 및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1월 말 개최 제의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나갈 것이며, 예비회담 등 구체적 사항들을 추후 북측에 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고위급 당국 회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추후 이를 위한 당국 회담을 제의할 예정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장관 명의 전통문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고위급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회담을 2.11 10:00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대변인 논평 - 핵문제에 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동 제안을 북한당국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 한반도 핵문제를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 산생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대화를 강조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인민무력부장 명의 전통문 -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을 2.1 개최하자고 제의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장관 명의 전통문 - 우리가 제의한 2.11 회담 개최 제의 - 대표단 구성은 북한측 제의 수용 입장 통보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아태평화위 명의 전통문 - 당국 간 대화 개최 재촉구

날 짜	추진내용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판문점대표부 성명 발표 -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에 대한 비난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3.1절 기념사 - 북한에 대해 진정한 화해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대화입장을 표명,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축적해 나갈 것임을 천명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십자총재 명의 전통문 - 2.5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온 북한 주민 31명 중 복귀 희망 27명 송환 통보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중앙위 대변인 담화 - 남측이 귀순공작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송환할 것을 요구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전통문 - 송환문제는 인도적 문제 이상의 중대한 북남관계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주민 전원과 배를 표류 당시 해상 경로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전통문 - 북한주민 전원 송환문제 해결을 위해 3.9 10:00,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 - 북한은 박용일 적십자회 중앙위원을 비롯한 3명이 남한에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과 함께 나올 것이며, 우리측에 대해서도 당사자 4명을 데리고 나올 것을 요구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 -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7명을 3.7 16:00 판문점을 통해 송환할 예정 -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십자실무접촉은 3.9 10:00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수정 제의

날 짜	추진 내용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전통문 - 주민 31명 전원이 배를 타고 표류한 해상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요구 - 4명 귀순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기 위해 3.9 10:00 판문점 전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적십자실무접촉을 주장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 - 송환 희망 27명에 대한 필요조치 협조를 촉구 - 북한이 주장하는 확인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 우리측 지역에서 귀순 의사 밝힌 4명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 방식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 입장 통보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전통문 - 귀순 의사 표명 4명을 데리고 나와 적십자실무접촉에 조속히 응할 것을 요구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연락관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통지 - 27명의 조속한 신병 인수 촉구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귀순의사 밝힌 가족 4명 명의 편지(→대한적십자사 총재, 통일부장관) - 당사자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31명 전원이 배를 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
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편지 전달 요청 답신) - 남북 가족 간 편지 전달 관례가 없고 북한이 그동안 우리의 그러한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을 지적 - 가족 간 편지 전달 관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북한이 동의한다면, 당사자들에게 전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위원장 명의 서한(→북한 체신상) - 지리정보시스템(GPS) 주파수 혼선행위 항의 및 재발방지 촉구(북한 접수 거부)

날 짜	추진 내용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중앙위 명의 전통문 - 우선 27명을 배를 타고 표류했던 해상경로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 - 인도적 차원에서 해상을 통해 27명 송환 통보
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지진국장 명의 전통문 -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 연구사업 공동 추진 등을 위한 협의 진행 제의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전통문 - 미군이 사전통보 없이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에 접근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비난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장 명의 전통문 - 백두산 화산활동에 남북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 우선 백두산 화산 관련 전문가 간 협의를 3.29 우리측 지역인 문산에서 가질 것을 제의
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전선서부지구사령관 조선중앙통신 기자 답변 - 보수단체의 3.25~3.26 백령도에서의 뼈라살포 계획 비난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지진국장 명의 전통문 - 우리측의 3.29 접촉 제의에 동의하면서 화산연구소 부소장이 대표로 나올 것이라는 입장 통보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선 북한주민 27명과 선박 송환
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답변 - UN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 회의(문산, 출입사무소) -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필요성에 대해 공감, 차기 회의는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

날 짜	추진내용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2차 북남실무접촉 진행 보도(조선중앙통신)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10.11월 미국공민 반공화국범죄행위 감행하여 체포·조사, 조사과정에서 범죄 인정, 재판 기소 준비 보도(조선중앙통신)
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상보 - 금강산 관광 문제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중앙위 진상공개장 발표 - 북한 주민 귀순 비난
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전통문 - 4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 개최 제의
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 - 뼈라살포 행위 비난
4.2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터 미 전 대통령과 전직 국가원수(3명) 등 The Elders 그룹 방북
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 - 귀순 4명 자유의사 확인 문제와 자유의사에 반해 북한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 자유의사 확인 문제 논의를 위해 5.4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
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 동북아역사재단에 동해 표기 관련 남북역사학자 간 공동대처 제의
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산 화산 전문가회의 수석대표 명의 전통문 - 백두산 화산문제 관련 학술토론회 5.11~5.13 서울 또는 평양 개최 제의

날 짜	추진 내용
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선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정 관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조선중앙통신) - ‘강원도 금강산지구에 조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온다’고 발표하며 기존 정령 효력 폐기
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역사재단 명의 전통문 - 5월 중순 개성에서 동해 표기 관련 남북 역사학자 간 협의 제의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전산망 장애(4.12) 관련 수사결과 발표 -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확인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의 지리정보시스템(GPS) 교란행위나 민간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행위는 도발이며 규탄 받아 마땅, 무분별한 사이버 테러 행위 즉각 중단 촉구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마약 및 위조화폐 범죄로 일본인 3명 억류, 1명 추방, 2명 법적 처리중 보도(조선중앙통신)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6.25전쟁 참전 영국군 유해 1구 판문점을 통해 송환 보도(조선중앙통신)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 초청 제안(한-독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 - 농협해킹 북한 소행이라는 결과 발표는 천안호 사건과 같은 날조국이라고 비난
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답변 - 대통령 말씀에 대해 ‘반공화국 핵소동과 대결책동을 정당화해 보려는 발언’이라고 비난

날 짜	추진 내용
5.17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 채택 불발
5.20~26	• 김정일 방중
5.24	• 로버트 킹 미 대북인권특사 등 북한식량평가팀 방북
5.27	• 미 공민 전용수 석방 보도(조선중앙통신) - 공화국 반대 범죄행위 인정, 로버트 킹 특사 유감 표시 및 재발방지 노력 약속
5.28	• 로버트 킹 미 대북인권특사, 석방 미국인과 함께 귀환
5.30	• 북한 국방위 대변인 성명 - 동해지구 군통신 차단 및 금강산지구 통신연락소 폐쇄 주장
6.1	• 북한 국방위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답변 - '남북비공개접촉' 사실 왜곡 주장
6.1	•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 보도는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유감을 표명"
6.2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채택 발표(조선중앙통신)
6.3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최고 존엄 표적사격은 특대형 도발행위라고 비난
6.6	•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 "△언젠가 올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우리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음. △북은 대결과 갈등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함. △우리는 이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임."

날 짜	추진 내용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를 내움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발표 보도(조선중앙통신)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표 베이징 접촉 관련(조선중앙통신) - 남측이 6.1 국방위 대변인이 밝힌 베이징 접촉 내용에 대해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접촉 녹음기록 공개 위협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전통문 - 보도에 의하면 6.11 북한 주민 9명이 연평도 해상에서 월선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즉시 송환 요구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 - 북한 주민 9명 모두 귀순을 희망하고 있는 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통보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 보도(조선중앙통신) - 우리측 재산 처리문제 협의 위해 모든 당사자의 방북 요구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질의 답변 - 통일관련 대통령 말씀에 대해 체제와 존엄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면서,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으면 전제조건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 전방부대 구호 언론보도를 빌미로 비난하면서 사죄와 주모자 처벌을 요구하고, 보복성전 위협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관광지구 재산 관련 문제권 협의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 전방부대 구호 관련 최고존엄에 대한 엄중한 중상모독행위이며 의도적인 도발사건이라고 비난, 새로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적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

날 짜	추진 내용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 편지(→청와대) 공개 보도 - 전방부대 구호 관련 극악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사죄와 주모자 처벌 및 구호 철거, 중지 등 요구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 - 우리측에 재산정리안 요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분 강행·통지 주장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약단 명의 전통문(→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 7.13 우리측 지역 또는 북측이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협의 제의
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 관광사업 재산문제 협의
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
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교류협력국 명의 통지문(→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 금강산 관광 관련 당면문제 협의를 위해 7.29 당국실무회담 개최를 제안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 전통문(→통일부) - 민간기업과 같이 오는 조건으로 당국실무회담 개최에 동의
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교류협력국 명의 통지문(→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 당국 간 회담 제의에 성의 있는 태도로 호응할 것을 촉구
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보도(조선중앙통신) - 우리측 부동산과 재산에 대한 정리 주장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 - 북한지역 수해피해 관련 물품 지원 의사 전달

날 짜	추진 내용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전통문 - 생필품·의약품 보다 식량·시멘트 등의 지원을 요구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 - 지원물자의 조속 전달을 위한 조치 촉구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판문점 대표부 공개 서한 - 합동군사연습 중지, 평화체제 전환 용단, 조미관계와 북남관계 정상화 의사 표명 등을 요구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공개 서한 - 을지 프리덤 가디언훈련 연습 중지 요구
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종하 명의 통지문(→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언) - 수해지원 물자 품목·전달경로·시기 등 통보.
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아산 장경작 사장 등 금강산 방북, 금강산 재산권 문제 협의
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단장, 남측이 발파를 포사격으로 날조하였다고 주장(조선중앙통신)
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명의 통지문(→군사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 우리측이 발파 작업을 포사격으로 날조하였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응 포격을 한 것이 계획적인 조작임을 실증한다고 주장하며 주범 처벌 및 사실 공개 촉구
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선(8.11) 북한 주민 4명, 판문점 통해 송환

날 짜	추진내용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남북은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 △도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 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
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비난 담화(조선중앙통신)
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선(8.16) 북한 주민 2명, 판문점 통해 송환
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아산 관계자 금강산 방북, 금강산 재산권 문제 협의
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조선중앙통신) - 우리측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 단행 통지
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 체류 우리 국민 14명 철수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국장 주재 「금강산 관광 사업 대책반 1차 회의」 개최
8.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방러, 8.24 북러 정상회담(김정일·메드베데프)
8.28~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라선-금강산 시범관광 실시 - 8.28 중 연길 출발, 9.2 북 라진항 복귀
9.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등,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기념 고불법회」 참석(모향산 보현사) 및 광범사·법운암 등 방문(평양 인근) 위해 방북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 명의 통지문(→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언) - 대북 수해지원 관련 실무사항 통보

날 짜	추진내용
9.26	• 6.15 북측위, 북한 아태위원장이 9.27 개성에서 고(故) 박용길 장로 유가족과 장례위 관계자들을 만나겠다는 의사 전달
9.27	• 김정일, 박용길 여사 유가족에게 조전(조선중앙통신)
9.30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개성공단 방문, 개성공단 현장 시찰 및 애로사항 청취
10.1	• 북한 체신성 대변인 담화, 반북 TV방송 등 규탄(조선중앙통신)
10.4	• 대북 수해지원 관련 종결 절차 진행
10.4	• 일본 표류(9.13) 탈북자 9명, 인천공항 통해 입국
10.4	• 북한 주민 2명, 동해상으로 월선, 귀순의사 표명
10.5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통지문 통해 북한 주민 2명 및 선박 송환 요구
10.6	• 북측에 북한 주민 2명은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할 것임을 통보
10.6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동해 월선 북한 주민 2명 및 일본 표류자 9명 송환 요구
10.8	•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남측에 경고 통지문(조선중앙통신)
10.11	•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 해소 조치 발표 - △'5.24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기업에 대한 공사 재개 허용, △개성공단 소방서·응급의료시설 건립 추진, △개성시-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보수 공사 및 출퇴근 버스 운행 지역 확대
10.17~20	• 남북미 3자 민간 학술회의(조지아대)

날 짜	추진 내용
10.1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 미군 유해 발굴 회담(방콕)
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10.13 러 이타르타스 통신 질문 대답 -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통령 방미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대답 - 대통령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 비판
10.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 제네바 협의
10.27~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호국훈련
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실무협의 관련 방북(개성공단)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영통사 낙성 6주년 및 대각국사 의천 910주기 열반 다례제 관련 방북(개성 영통사)
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북공동기도회 관련 방북(평양)
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장관 방미(워싱턴·뉴욕)
11.7, 11.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아산, 금강산 현지 시설물 동파 방지 작업 관련 방북(금강산)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지원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예산 중 보류되었던 기초의약품·의료장비 지원과 의료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 예산 700만 불 집행 허용
11.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도교, 남북합동 시일식 관련 방북(평양)

날 짜	추진 내용
11.14~23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유적 안전진단 관련 방북(개성)
11.18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 편찬 실무협의 관련 방북(개성)
11.21	• 유엔 제3소위(인권문제 담당),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
11.21~23	• 통일부장관 중국 방문(베이징)
11.22	•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보수공사 착공
11.22	• 조계종 중앙신도회, 약탈 문화재 환수 실무협의 관련 방북(개성)
11.24	•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 연평도 도발 1주년 군 합동훈련 관련 비난
11.24 ~12.20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유적 복구·보존 관련 방북(개성)
11.25~29	• 평화대사협의회, 밀가루 분배 모니터링 관련 방북(평북 정주시) - 통일부 인도지원과장 동행
11.30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 “핵에대르기의 평화적리용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 -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9.19공동성명을 단계별로 리행해 나갈 준비”
12.7~11	•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하트 6자회담 특사 방한
12.15~16	• 미북, 영양 지원 관련 협의(베이징) - 미국측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 북한측 이근 외무성 국장 접촉

날 짜	추진내용
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선중앙TV 특별방송, 김정일 사망 발표 - 장의위원 명단 발표, 김정은을 첫번째로 호명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장관, 김정일 사망 관련 정부 담화문 발표
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 등 김정일 조문차 방북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김정일 영결식
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김정일 중앙추모대회

Ⅲ.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10.7 ~20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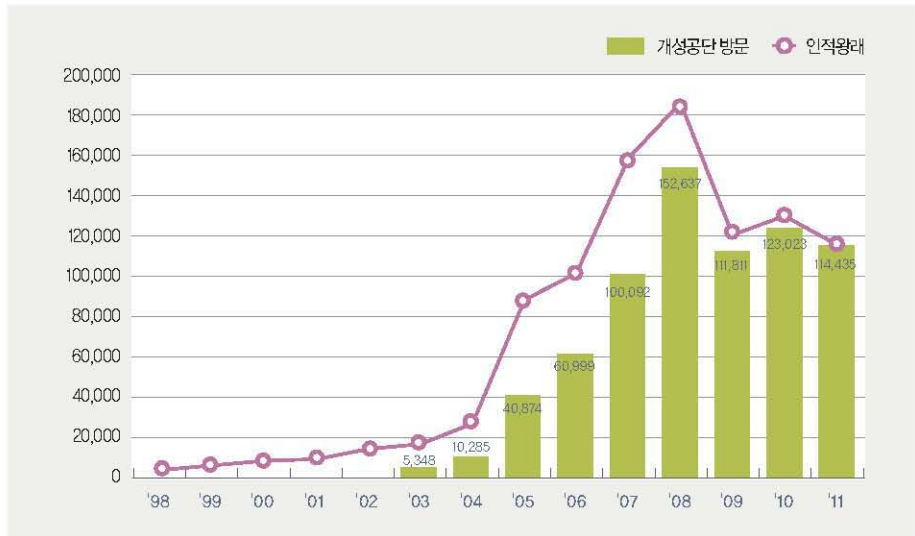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① 남북 왕래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89~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남·북 (향북)	11,321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130,119	116,047	980,731
북·남 (향남)	637	706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246	132	14	7,881
계	11,958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120,862	130,251	116,061	988,612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②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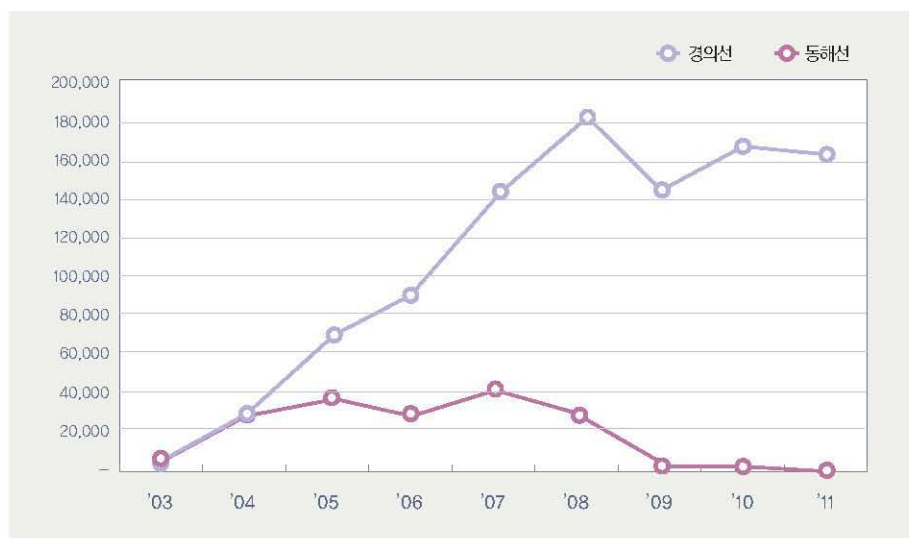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	-	-	-	-	552,968
	육로	-	-	-	-	-	36,028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	1,381,664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	1,934,662
개성 관광	-	-	-	-	-	-	-	1,484	-	7,427	103,122	-	-	-	112,033
평양 관광	-	-	-	-	-	1,019	-	1,280	-	-	-	-	-	-	2,299

③ 남북 차량왕래 현황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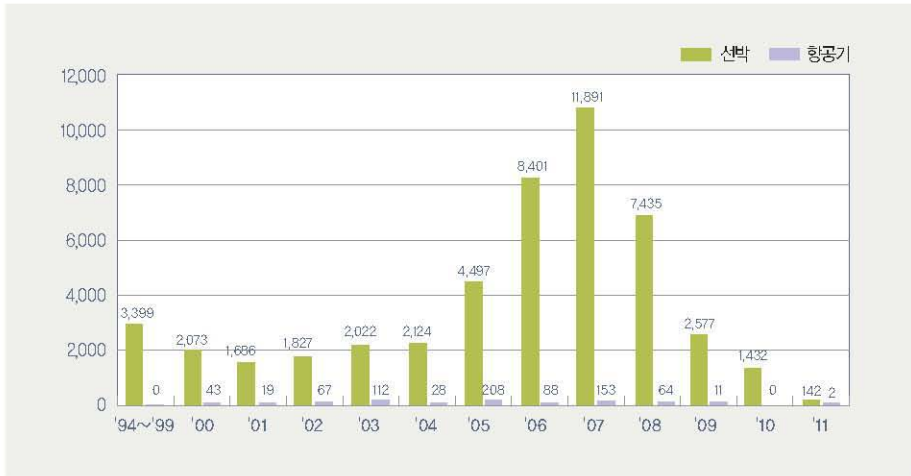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차량 (은행회수)	경의선	2,497	30,442	77,395	94,506	143,450	184,072	145,802	166,181	162,848	1,007,193
	동해선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5,077	2,534	2,140	397	176,530
	합계	8,783	61,514	116,960	123,912	183,503	209,149	148,336	168,321	163,245	1,183,723



④ 남북 선박·항공기 왕래 현황

단위 : 회(편도)

구분	'94~'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선박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1,432	142	49,506
항공기	-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	-	2	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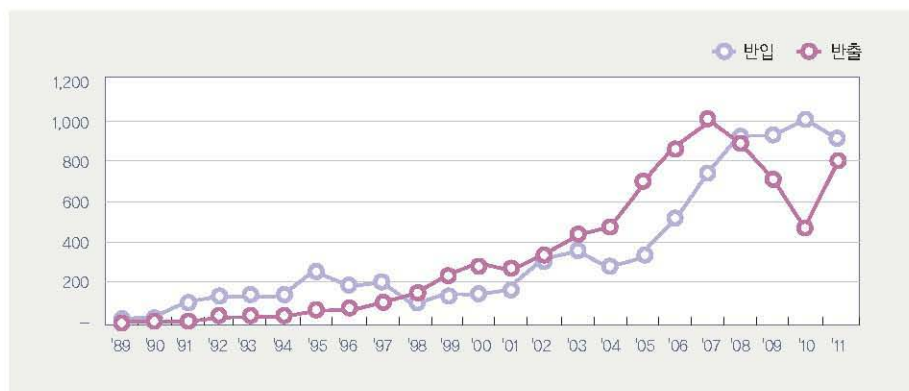


2. 남북 교류협력 현황

①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8,062
반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88	745	868	800	8,258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820	1,679	1,912	1,714	16,320



② 연도별 남북교역 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반입	66	79	300	50	60	706	976	1,475	1,806	1,963	3,089	3,952	4,720	5,023	6,366	5,940	9,337	16,42	25,027	3,243	3,707	39,800	33,762	230,452
반출	1	4	0	62	97	267	1,668	1,908	2,185	2,847	3,421	3,442	3,034	3,773	4,853	6,953	11,578	17,039	26,731	36,202	41,233	44,402	40,156	252,166
계	67	83	300	52	696	975	2,644	3,383	3,991	4,810	6,510	7,394	7,754	8,796	11,209	12,893	21,215	33,461	51,758	67,445	78,600	84,202	73,918	482,618

③ 연도별 남북교역 품목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반입	24	23	43	69	69	80	109	130	143	136	172	204	201	204	186	202	381	421	450	482	486	448	363	803
반출	1	3	16	25	37	87	167	167	284	379	405	527	492	495	530	575	712	697	803	813	771	740	676	1,090
계	25	26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549	572	588	634	775	757	852	859	822	795	702	1,109

④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반입	일반교역·위탁가공	258	320	441	645	624	499	334	4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경공업협력)	-	20	77	120	308	435	710	909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	-	1	-	-	-	-	1
	반입 합계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반출	일반교역·위탁가공	89	100	116	145	184	167	101	-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경공업협력)	89	250	294	520	596	541	744	789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261	366	421	367	108	37	23	11
	반출 합계	439	715	830	1,032	888	745	868	800

3. 개성공단사업 추진 현황

①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 개, 만 불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가동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123	○ 가동기업수 123개 △ 섬유류제·가죽가방 72개 △ 화학 9개 △ 기계금속 23개 △ 전기전자 13개 △ 식품 2개 △ 종이목재 3개 △ 도자기 1개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계	
생산액 (수출액)	1,491 (87)	7,373 (1,983)	18,478 (3,967)	25,142 (3,584)	25,648 (2,860)	32,332 (3,667)	40,185 (3,687)	150,649 (19,835)	○ '11.12월 생산액(3,198만 불) 중 업종별 생산액 구성비율은 △ 섬유 1,746만 불(54.6%) △ 전기·전자 747만 불(23.4%) △ 금속·기계 401만 불(12.5%) △ 화학 202만 불(6.3%) △ 식품 65만 불(2.0%) △ 기타 22만 불(0.7%) △ 종이목재 5만 불(0.5%)

- * 생산액, 수출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적조사로 인한 1개월의 집계시차 발생
- * '07.5.26 전력(10만kw) 공급(63원/kwh)
- * '05.12.28 통신 개통, 현재 1,300회선 운용(공단-남한간 0.4\$/분)

②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복측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 근로자 성별 비율 △ 여성 72% △ 남성 28%
남측근로자	507	791	785	1,055	935	804	776	○ 연령대별 구성 비율은 △ 10대(만 17~19세) 0.8% △ 20대 24.0% △ 30대 33.5% △ 40대 34.8% △ 50대 이상 6.9%
합 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50,642	

- *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적조사로 인한 1개월의 집계시차 발생
- * 복측근로자 평균임금('11.12월) : 112달러(순임금 100.6달러 + 사회보험료 11.5달러)

③ 개성공단 방문 현황

단위 : 명,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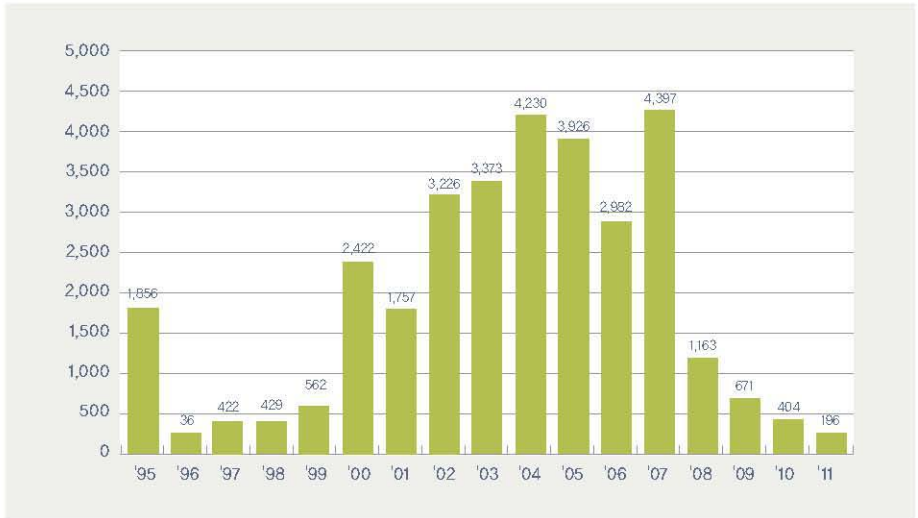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계	
방문인원	40,874	60,989	100,092	152,637	111,830	122,997	114,435	703,864	○ '11.12월 방문인원(8,987명) 구성비율 △ 사업관계자 100%
방문차량	19,413	29,807	42,389	85,626	72,597	83,566	82,954	416,362	○ 외국인(바이어, 투자자, 기술자 등) 방문인원 △ '05년 49명 △ '06년 399명 △ '07년 460명 △ '08년 130명 △ '09년 9명 △ '10년 3명 △ '11년 0명

4.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①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정부 지원	무상 지원	1,854	24	240	154	339	944	913	1,075	1,016	1,211	1,240	2,139	1,767	197	217	183	65	13,578
	민간 기금 지원액	-	-	-	-	-	34	62	66	81	102	120	134	216	241	77	21	-	1,53
	식량 차관	-	-	-	-	-	1,057	-	1,510	1,510	1,359	1,787	-	1,505	-	-	-	-	8,728
	계	1,854	24	240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294	204	65	23,459
민간차관 (무상)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131	8,593	
총액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32,052	



②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민간 차원	생사확인	-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서신교환	-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제3국 상봉	-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383)
	방북상봉	-	-	-	-	-	-	-	-	-	1 (2)	5 (18)	4 (9)
당국 차원	생사확인	65 (157)	-	-	-	-	-	-	-	-	-	-	792 (7,543)
	서신교환	-	-	-	-	-	-	-	-	-	-	-	39 (39)
	방남상봉	30 (81)	-	-	-	-	-	-	-	-	-	-	201 (1,720)
	방북상봉	35 (76)	-	-	-	-	-	-	-	-	-	-	202 (674)
	화상상봉	-	-	-	-	-	-	-	-	-	-	-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민간 차원	생사확인	208	198	388	209	276	69	74	50	35	16	3	3,845
	서신교환	579	935	961	776	843	449	413	228	61	15	21	11,418
	제3국 상봉	165 (471)	203 (592)	280 (662)	187 (465)	94 (256)	50 (86)	54 (162)	33 (92)	21 (47)	6 (16)	4 (14)	1,703 (3,246)
	방북상봉	5 (22)	5 (24)	3 (16)	1 (5)	1 (5)	4 (19)	1 (5)	3 (5)	2 (4)	1 (2)	-	36 (135)
당국 차원	생사확인	744 (2,670)	261 (1,635)	963 (7,091)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	302 (2,399)	302 (2,176)	-	7,337 (53,070)
	서신교환	623 (623)	9 (9)	8 (8)	-	-	-	-	-	-	-	-	679 (679)
	방남상봉	100 (899)	-	-	-	-	-	-	-	-	-	-	331 (2,700)
	방북상봉	100 (343)	398 (1,724)	598 (2,691)	400 (1,926)	397 (1,811)	594 (2,683)	388 (1,741)	-	195 (888)	191 (886)	-	3,498 (15,443)
	화상상봉	-	-	-	-	199 (1,323)	80 (553)	278 (1,872)	-	-	-	-	557 (3,748)

*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등록현황 : 128,668명 등록(사망 49,776명/생존 78,89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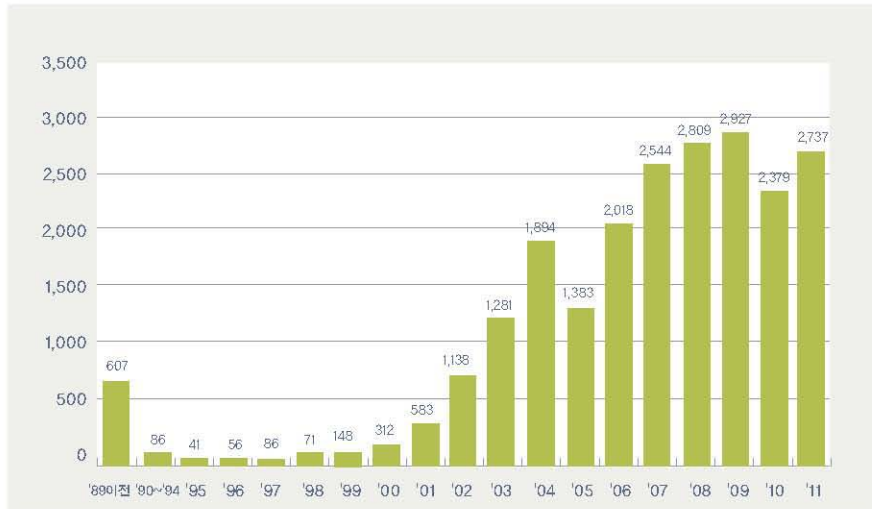
③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89 이전	'90~ '94	'95	'96	'97	'98	'99	'00	'01	'02
남성	562	80	35	43	56	53	90	179	294	506
여성	45	6	6	13	30	18	58	133	289	632
합계	607	86	41	56	86	71	148	312	583	1,138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남성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9	819	7,171
여성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800	1,918	15,929
합계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23,100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5. 남북회담

①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	'71~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정치	170	0	7	4	8	18	2	4	5	2	10	5	13	-	-	-	-	248
군사	-	-	-	-	-	4	2	9	6	5	3	4	11	2	-	1	1	48
경제	5	-	-	-	-	3	3	14	17	13	11	8	22	3	4	3	-	106
인도	114	-	4	1	0	2	1	3	7	2	4	3	3	-	2	4	-	150
사회 문화	34	-	-	-	-	-	-	2	1	1	6	3	6	1	-	-	-	54
합계	323	-	11	5	8	27	8	32	36	23	34	23	55	6	6	8	1	606

※ 정치(장차관급 회담 등) / 군사(장성급·군사실무회담 등)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등) / 인도·사회(적십자·체육 회담 등)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건수

단위 : 건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의서건수	-	3	3	1	18	4	23	31	21	23	10	39	5	1	1	-

6. 통일교육 인원

단위 : 명

구분	2000년 이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합계	365,125	12,774	16,711	17,087	20,804	26,420	25,865	34,045	32,039	71,944	68,946	119,736	811,496

IV.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2010.7 ~ 2011.12)

1. 총괄표(조성 및 사용실적)

① 조성실적

단위 : 백만 원

연 도	정부출연금	기타출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운용수익등	총조성액
1991	25,000	-	-	237	25,237
1992	40,000	-	-	5,118	45,118
1993	40,000	3	-	4,778	44,781
1994	40,000	1	-	9,387	49,388
1995	240,000	119	-	14,589	254,708
1996	100,000	132	-	18,409	118,541
1997	50,000	288	-	27,874	78,162
1998	-	-	-	40,280	40,280
1999	-	3	149,831	23,013	172,847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6
2001	500,000	1,079	310,000	29,406	840,485
2002	490,000	77	505,000	42,036	1,037,113
20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20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20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20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2007	500,000	75	584,591	38,859	1,123,526
2008	650,000	52	147,500	49,274	846,826
2009	-	56	81,000	74,354	155,410
2010	-	-	875,000	51,238	926,238
2011	-	2	104,400	38,276	142,678
합계	4,396,400	2,479	5,545,174	650,204	10,594,257

② 사용 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주민왕래지원	-	-	-	-	-	-	-	-	-	3	3
문화·학술·체육협력	9	-	-	-	-	-	-	0.3	-	21	1
이산가족	-	6	-	-	-	-	-	0.1	4	28	13
인도적지원(무상)	-	-	-	-	1,824	55	191	199	339	977	976
인도적지원(유상)	-	-	-	-	-	-	-	-	-	867	190
남북경제협력(무상)	13	-	-	-	-	49	-	-	-	146	898
남북경제협력(유상)	-	-	-	-	-	-	-	675	-	5	461
경수로 대출	-	-	-	-	-	-	-	-	-	3,259	3,003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	-	-	-	-	-	-	-	-	190	391
-공자기금원금상환	-	-	-	-	-	-	-	-	-	-	-
-공자기금이자상환	-	-	-	-	-	-	-	-	-	190	391
기금관리비	3	3	3	3	2	2	2	2	2	3	5
합 계 ^{*)}	25	8	3	3	1,826	106	193	876	346	5,500	5,940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 계
주민왕래지원	237	11	11	38	53	17	27	-	-	-	399
문화·학술·체육협력	-	7	32	75	74	69	38	30	21	26	403
이산가족	20	30	32	133	99	269	182	22	20	1	859
인도적지원(무상)	1,226	1,501	1,225	1,866	2,125	2,272	597	294	192	102	15,962
인도적지원(유상)	967	1,561	1,020	1,793	39	1,405	-	-	-	-	7,842
남북경제협력(무상)	368	763	760	2,045	1,521	1,725	1,101	415	177	167	10,148
남북경제협력(유상)	667	547	814	568	710	1,400	366	240	453	130	7,036
경수로 대출	3,009	3,287	870	227	89	-	-	-	-	-	13,744
공자기금 원리금상환	2,124	3,250	3,895	3,658	8,713	6,337	1,512	1,159	9,306	1,086	41,621
-공자기금원금상환	1,498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100	8,200	-	31,827
-공자기금이자상환	626	701	795	838	983	1,007	1,012	1,059	1,106	1,086	9,794
기금관리비	6	8	12	16	18	19	21	39	29	27	224
합 계 ^{*)}	8,625	10,966	8,670	10,418	13,442	13,513	3,844	2,199	10,197	1,539	98,238

주) 연도별 기금사용 현황은 사서오입하여 억 원 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의 합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10	2010년「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남북협력기금 지원	1,889	사회문화 협력지원 (2건, 2,119)	
	2010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231		
	이산가족교류협력촉진을위한남북협력기금지원	43	이산가족 교류지원 (3건, 1,987)	
	추석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협력기금 지원	1,511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지원(2009)	433		
	2009년도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	672		
	2010년 대북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5,844	인도적 지원 (15건, 19,196)	
	나눔인테네새날의 북한주민 질병퇴치	75		
	남북나눔의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 지원사업	155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북한 어린이 보건의로 및 영양개선	281		
	민족사랑나눔의 영양개선 및 복지지원, 보건의로 지원사업	79		
	북한 신종플루 발생 관련 대북물자 지원	11,272		
	어린이재단의 북한어린이 건강 증진	6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의로 지원사업	90		
	원불교의 어린이급식 및 유아용품 지원사업	34		
	유진벨재단의 결핵퇴치 및 결핵병원 지원사업	254		
	천주교서울대교구민족화해위원회의 어린이 영양제 생산원료 지원사업	189		
	한국JIS의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의로 지원사업	171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2009)-통일부 사업관리비	1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2009)-통일부 사업관리비	11		
	「코리아 DMZ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83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 (14건, 17,676)
	2010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4,801		
	2010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위탁사업비 지원	972		
	개성공단 소방서 건립을 위한 기금 지원	1,002		
	개성공업지구「종합지원센터」설립 지원	3,749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 지원	46		
	남북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14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10	남북군통신체계 개선 공사용 임대장비에 대한 회계처리 지원	243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 (14건, 17,676)
	남북간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429	
	남북교역체계 개편 지원 및 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639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4,200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종합전략계획 수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지원	417	
	DMZ남북청소년교류센터 스페이스 프로그램 연구 지원	10	
	DMZ남북청소년교류센터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지원	71	
	교역경험 자금용자(교역)(269건)	31,243	교역자금(응자) (269건, 31,243)
	교역경험 자금용자(경험)(62건)	10,326	경험자금(응자) (62건, 10,326)
	2010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3,703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대출 (1건, 3,703)
	소 계 (366건)	86,251	
'11	종교인평화회의(KCRP)의 방북 지원	30	인적왕래지원 (1건, 30)
	거레밀론사전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2,338	사회문화 협력지원 (6건, 2,586)
	개성만월대 안전조사 및 복구·보존 사업 지원	248	
	이산가족교류협력촉진을위한남북협력기금지원	35	이산가족 교류지원 (9건, 95)
	금강산 이산가족연회소 유지관리경비 지원	60	
	대북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635	인도적 지원 (14건, 10,174)
	백두산 화산 남북학술도론회 남북협력기금 지원	7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	6,532	
	남북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지원	2,938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 (134건, 16,819)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위탁사업비 지원	1,121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지원	6,120	
	개성공단 투자기업 경험보험금 지급	4,377	
	남북교역체계 개편 지원 및 관리업무 위탁 지원	589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보강 지원	284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사업 지원	40	
	코리아DMZ협의회 국내외 협력기반 확충 지원	129	
	DMZ남북청소년교류센터 스페이스 프로그램 연구 지원	9	

연도	사 업 내 용	금액	사 업 구 분
'11	DMZ남북청소년교류센터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원	20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 (134건, 16,819)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233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133	
	남북교역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494	
	개성공단 소방서 건립을 위한 기금 지원	332	
	교역경협 자금용자(교역)(70건)	5,761	교역자금(용자) (70건, 5,761)
	교역경협 자금용자(경협)(4건)	1,729	경협자금(용자) (4건, 1,729)
	2011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3,617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대출 (5건, 5,489)
	개성공단 출퇴근버스 주차장 및 자동차 검사소 설치 지원	1,872	
	소 계 (243건)		42,683

3. 민간출연현황

단위 : 원

연도	출 연 자	출연금액
'10	교보생명보험㈜ 및 동사 21세기 하나로보험계약자	97,620
	이지호	45,050
	김택용	200,000
	서귀중앙초등학교	115,250
	소 계 (4건)	457,920
'11	교보생명보험㈜ 및 동사 21세기 하나로보험계약자	59,030
	서귀중앙초등학교	328,400
	군산침선교회	1,180,000
	소 계 (3건)	1,567,430

2012 | 통일백서

인쇄일 | 2012년 3월
발행일 | 2012년 3월
발행처 | 통일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 화 | 02-2100-5747
팩 스 | 02-2100-5749

편집·제작 | (주)다해미디어 (02-722-7123)